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지방 규제 혁신

2 0 2 3 우 수 사 례 집

규제정보포털 www.better.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 www.elis.go.kr 내고장알리미/지방규제혁신 www.laiis.go.kr

2023 우수사례집 지방규제혁신

행정안전부

발 간 등 록 번 호
11-1741000-000493-01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2023 우수사례집

지방 규제 혁신

세상의 변화를 읽다.

지역의 내일을 바꾸다.

행정안전부

2023 우수사례집

지방 규제 혁신

행정안전부

Contents

PART I 지방규제혁신 추진현황 006

01.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008
02. 2024년 지방규제혁신 중점 추진과제 023

PART II 새정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030

01. '킬러규제 혁신TF'그림자(킬러) 규제 개선 사례 032
02.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혁신 공모사례 036
03. 지자체 중앙건의과제 개선 사례 038

PART III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사례 044

대 상

01. 도로점용허가 대상구역별 통합으로 행정절차 부담 완화 충청북도 청주시 046

최우수상

02. 모래주머니 입지규제 해소로 중소 제조기업을 살리다 경기도 안양시 050
03. 34년만의 신공장 최단기간 허가 및 추가 투자유치 울산광역시 054

우수상

04. 불가했던 개발제한구역 공장 제조시설, 틈새 규정으로 기업 애로사항 해결 경기도 고양시 058
05. 수출용 중차량 방산물자의 운행제한 규제완화 경상남도 062
06.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중복규제 완화 대구광역시 066
07. 물류단지개발 시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준용하여 인허가 절차 간소화 대전광역시 070
08. 근린공원, 특정공원시설 규제 개혁 서울시 도봉구 074
09. 어업인의 조업애로를 해소하는 AIS 전자해양부이로 조업효율 'UP' 제주특별자치도 078
10. K-곤충산업, 산업단지에서 미래를 꿈꾸다!! 충청북도 082

장려상

11. 중수도시설 운영 관리주체 변경 및 설치기준 완화 경상북도 086
12. 산업단지 내 제조업체 자체판매장에서 OEM 생산제품 판매 대구광역시 동구 090
13. 준공된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지구단위계획 관리 규제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094
14. 탈울산 예방 및 인구유입 유도를 위한 도시계획 정책 규제 대폭 완화 울산광역시 098
15. 전국 최초 토지보상 사업인정 관련 가이드라인 설정 인천광역시 중구 102
16. 광양 국가산단 신산업 유치를 위한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 전라남도 광양시 106
17. 규산염계청관제 사용으로 '블로우다운수 배출 규제' 해결 충청북도 110

PART IV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114

1. 기업경영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01. 농업생산기반시설물 관리 및 농업용수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경상남도 합천군 116
02. 산업단지 입주기업 초기 공공폐수처리비 감면으로 경영환경 개선 광주광역시 118
03. 최소 설하중 기준 적용 완화로 산업단지 지붕에 태양광 설치 대구광역시 120
04. 혁신도시 입주기업 기숙사 규제 해소 대구광역시 122
05. 사업실증 지원 대상을 전국의 중소벤처기업으로 확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124
06. 일반공업지역 전국 최초 '중소기업특별지원 지역' 선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126
07. 유찰상가 합리적 예정가격 적용으로 소상공인 사업 참여 편의 증진 서울특별시 128
08.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첫 '공공토지비축사업' 활용 울산광역시 130

2. 주민 편익 증진 및 사회적 가치 제고

09.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급방식 개선으로 사용편의 증진 강원특별자치도 132
10. 무역항 선박속력 제한 완화로 선박사고 예방 경상남도 134
11. 불법으로 난립하던 옥상 위 비가림시설을 인·허가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정식건축물로 인정 경상북도 구미시 136
12. 경로당 맞춤형 간편 회계서식 보급으로 지역공동체 기반 강화 경상북도 안동시 138
13. 소하천 구역 인근 토지 활용 민원에 대해 규제가 덜한 법령 적용 경상북도 청도군 140
14. 휠체어 탑승자동차 지원대상 확대로 장애인 이동권 신장 광주광역시 서구 142
1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기준을 신설하여 복지수혜 형평 제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44
16. 반지하주택 침수·화재 위험 원천 차단 도전 서울특별시 성동구 146
17. 속 끓이던 군용철로변, 2년만에 철길정원으로 탈바꿈 인천광역시 부평구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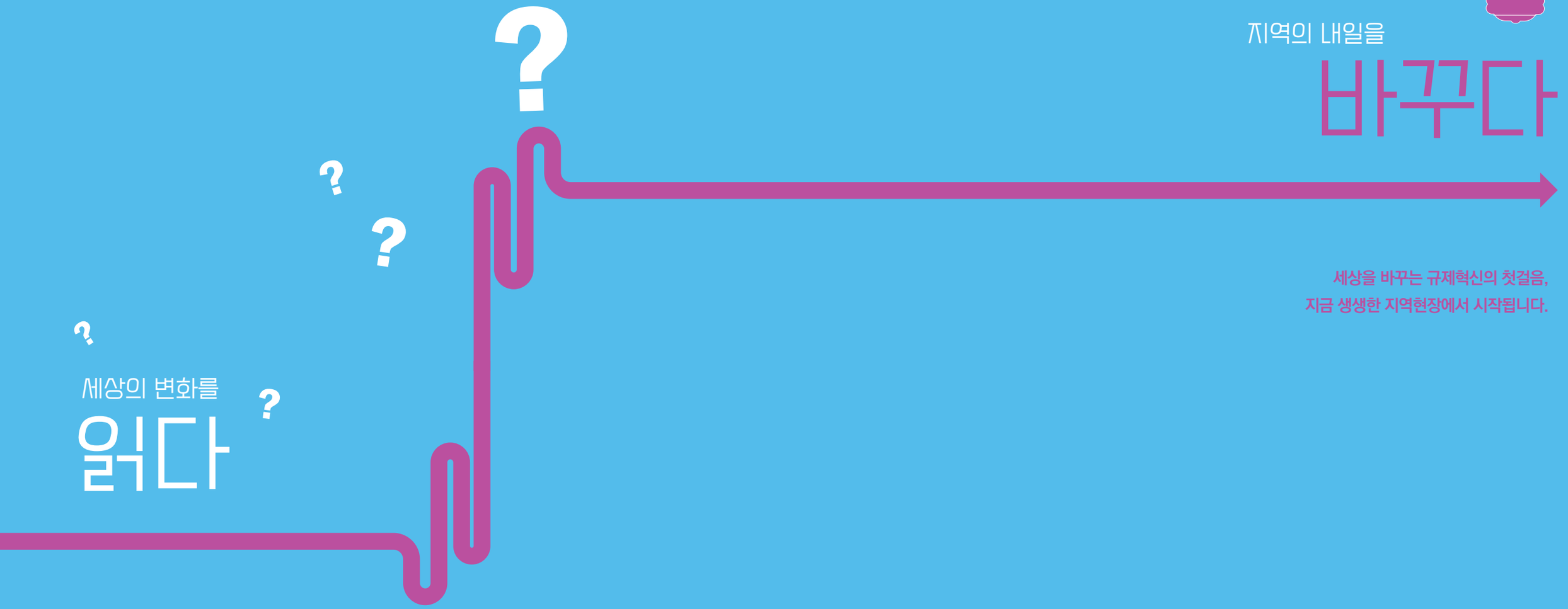
3. 행정절차 간소화 및 효율화

18. 음식물류폐기물 2차 선별 공정 자체개발로 국민의 불편 해결 경기도 안양시 150
19. 해수욕장 내 행위허가기준을 마련하여 이용객 갈등 해소 경상남도 남해군 152
20. 자동차 멸실인정 구비서류를 줄여 주민 불편 해소 경상남도 창원시 154
21. 과세 및 면세 사업 겸영 신축 건물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을 통한 재정 확충 부산광역시 156
2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영업구역 제한 삭제로 예산 절감 서울특별시 강서구 158
23. 통합위임장 공동 활용하여 토지 관련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 전라북도 정읍시 160
24. 지목이 임야인 사실상 농지에 산지관리법 적용으로 민원인 혼선 최소화 충청남도 천안시 162
25. 지적재조사 지구 내 토지분할 수반 건축 행정절차 간소화 충청북도 청주시 164

PART V 보도자료로 만나는 규제혁신 성과 166

우리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변화를 꿈꾼다면
먼저 익숙해진 불편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규제혁신은 그렇게 안주하지 않는 도전을 바탕으로 합니다.

주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누구보다 먼저 귀 기울이고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씩 달라져 가는 하루하루를 마주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규제혁신의 첫걸음,
지금 생생한 지역현장에서 시작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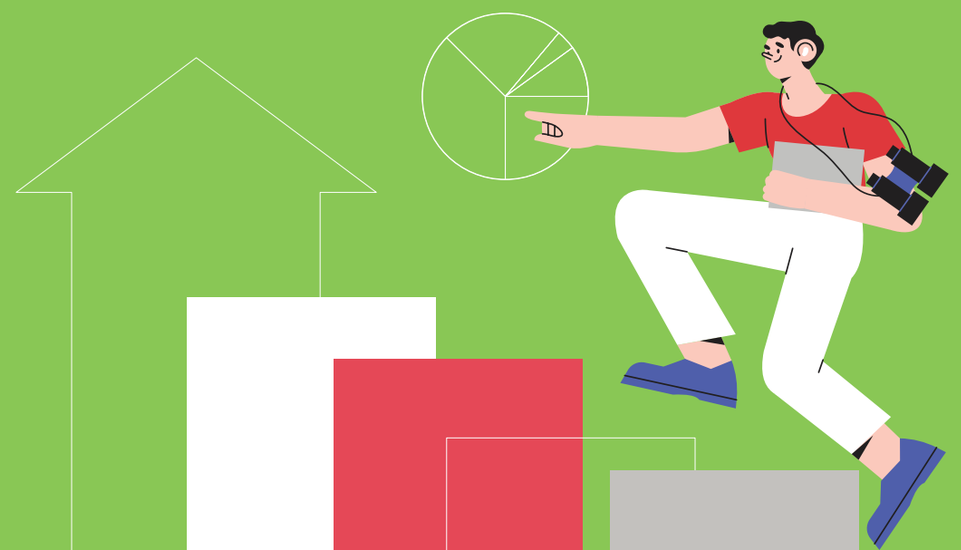
지방규제혁신 추진현황

➔ 1.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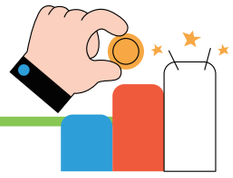
➔ 2. 2024년 지방규제혁신 중점 추진과제

PART I

행정안전부는
덩어리 중앙규제와 자치단체 현장규제를 개선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방규제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갑니다.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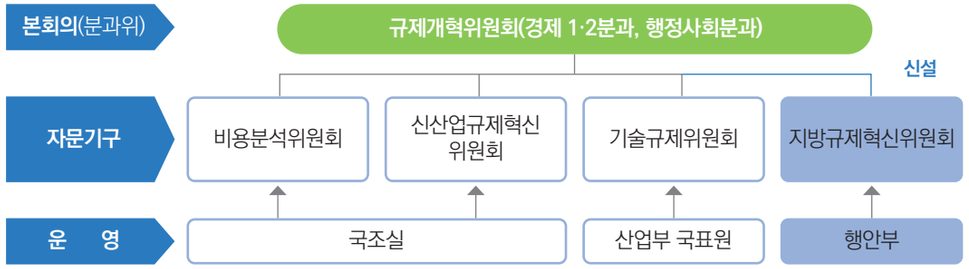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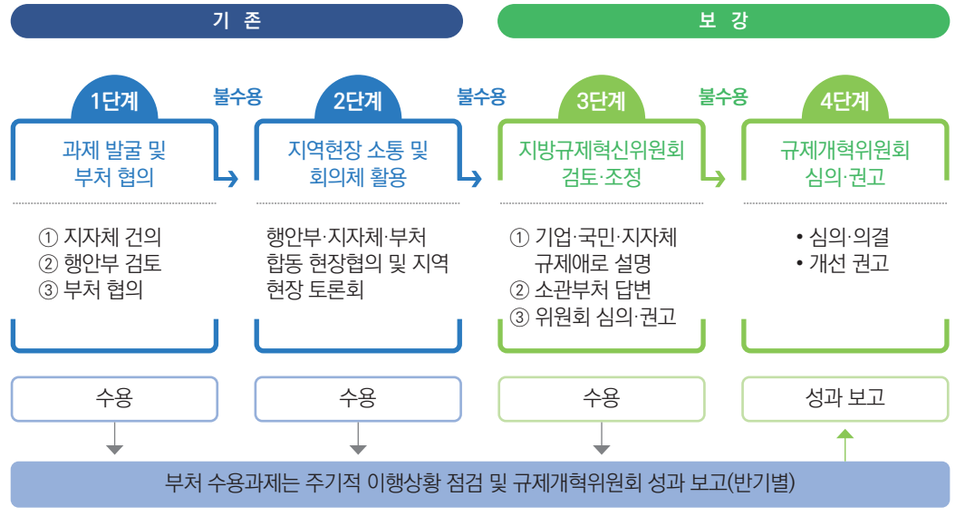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신설·운영을 통해 규제 조정력 강화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설치

지방규제 조정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23년 4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하였다. 정부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위원회는 정부위원장(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과 민간위원장(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이 공동위원장직을 수행하며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된다.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기구 중에서는 유일하게 정부위원을 임명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민간위원장으로 위촉함으로써 규제개혁위원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민·관 협력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부처 불수용 과제 중 개선이 시급하고 파급력이 큰 과제에 대해 심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새롭게 체계를 정비하였다. 그동안 지자체 건의과제를 부처협의, 현장토론회 등을 통해 개선해왔지만 부처 불수용 시에 구속력 있는 수단이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민·관 합동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본격 가동

2023년 5월, 1차 위원회를 개최한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운영하여 규제혁신의 속도감과 연속성을 높이고 있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 회차별 주요 심의 안건

회차	일자	주요 심의 내용	참석
1차	5.18.	•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 방향 논의	
2차	6.8.	• 수출용 방산물품 중차량 운행제한 과제 논의	산업부/경남
3차	7.13.	• 수출용 방산물자 중차량 육상운송 제한 과제 재논의	산업부/경남
4차	8.17.	• 수출용 방산물자 중차량 육상운송 제한 과제 ➔ 규제개선	산업부/경남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요건 완화 논의	산업부/충남
		•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비료 공정규격 설정 논의	농진청/경기
5차	9.14.	• 킬러규제(그림자 규제) 작업반 운영방안 논의	서면 (9.14.~9.20.)
		• 규제개선 중점과제 선정을 위한 민간위원 의견조사	
6차	10.12.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요건 완화 ➔ 규제개선	산업부/충남
		• 공유수면법상 원상회복 의무면제 요건 완화	해수부/경남
		• 풍력발전사업 주민투자 한도액 상향 논의	금융위/강원
7차	11.9.	• 공유수면법상 원상회복 의무면제 요건 완화 ➔ 규제개선	해수부/경남
		• 풍력발전사업 주민투자 한도액 상향 ➔ 규제개선	금융위/강원
		• 킬러규제(그림자 규제) 지자체 확산과제 선정	
8차	12.14.	• 석탄경석의 산업 원료화 활용방안 마련	

위원회 회의는 지역기업과 지자체가 참석하여 규제애로를 직접 설명하며 소관부처가 답변한 후에 위원들과 함께 합리화 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안건별 책임위원을 지정하여 현장조사·협의, 현장토론회 등 규제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실태를 확인하고 지자체·관계기관과 함께 해법을 마련해 나간다. 특히 1차 회의로 해결되지 않는 안건은 책임위원의 참석 하에 현장점검과 조정회의 등을 통해 대안을 찾고 2~3차례 재심의를 거쳐 해결한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개선 권고에도 부처에서 불수용하는 과제 중에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끝까지 해결하는 성과 중심의 위원회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 회의(8.17.)


민간위원 현장 방문(7.7.)



방송 보도(KBS창원, 10.23.)

성과 창출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뒷받침

위원회는 2023년 8차례 회의를 통해 5개의 심의안건 가운데 4개 과제를 해결하였으며, 책임위원이 현장조사 및 협의에 참여하면서 규제개선 성과 창출에 기여하였다. 특히 차관 주재 회의 등에서 논의된 과제와 지역기업 및 산업단지 관련 규제 애로사항을 중점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K-방산 해외수출의 매출 증가, 곤충산업 및 2차전지 등 미래산업 투자 확대, 행정절차·기준 합리화 등의 굵직한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심의 또는 책임위원 활동을 통한 규제개선 사례

	개선 내용	기대효과(추정치)
1	수출용 중차량 방산물자 육상운송 규제 완화	매출 4조 원 달성
2	곤충 생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투자 200억 원
3	이차전지 산업 위험물 안전관리 규제 개선	투자 5,800억 원
4	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 요건 완화	소규모 산단 관리 강화
5	공유수면법상 원상회복 의무면제 관련 규제 개선	행정절차 이행기간 단축
6	중수도시설 운영 관리주체 변경 및 설치기준 완화	사업시행자 부담 경감
7	풍력발전사업 주민투자 한도액 상향(500만 원→2~4,000만 원)	주민참여 활성화

지역현장 중심의 지방규제혁신 추진

차관 주재 지역현장 토론회 개최

지역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위해 차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규제애로 실태를 확인하고 간담회를 실시하여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가고 있다. 먼저 전라남도에서는 대불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조선업 구인난의 실태를 확인한 후 간담회를 통해 기업애로를 청취하였다. 이어 관련 기업과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 합동 규제혁신 토론회(1.12.)를 개최하였다.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해양산업 규제에 대해 지자체·지역기업·전문가·소관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 조선업 일반 및 숙련기능 외국인력 고용 요건을 완화하는 규제개선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강원도에서는 지역현장 토론회(11.3.)를 개최하여 지역현안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청년 창업기업의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풍력발전사업 주민투자 한도액은 상향, 해양심층수염 분류기준 개선은 부처수용, 석탄 경석의 광물 인정은 무해성 입증 등 조건부 수용이라는 개선 결과를 도출하였다.


차관, 대불산단 현장방문



주요 현안규제 개선방안 토의


방송 보도(KBS, MBC 등)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 개최

행정안전부 차관이 주재하고 시·도 기조실장이 참석하는 지방규제혁신회의는 반기마다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개최되고 있다. 2023년 4월, 9월에 진행된 지방규제혁신회의에서는 지자체 규제혁신 계획 및 성과를 점검하고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역기업이 직접 우수사례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특히 상반기에는 차관이 직접 경남 소재 방산기업을 방문하여 규제애로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방산기업과 플랜트기업의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규제개선 해법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외에도 규제 관련 현안인 킬러규제(그림자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행안부-지자체 협력방안, 중점 발굴·개선분야 등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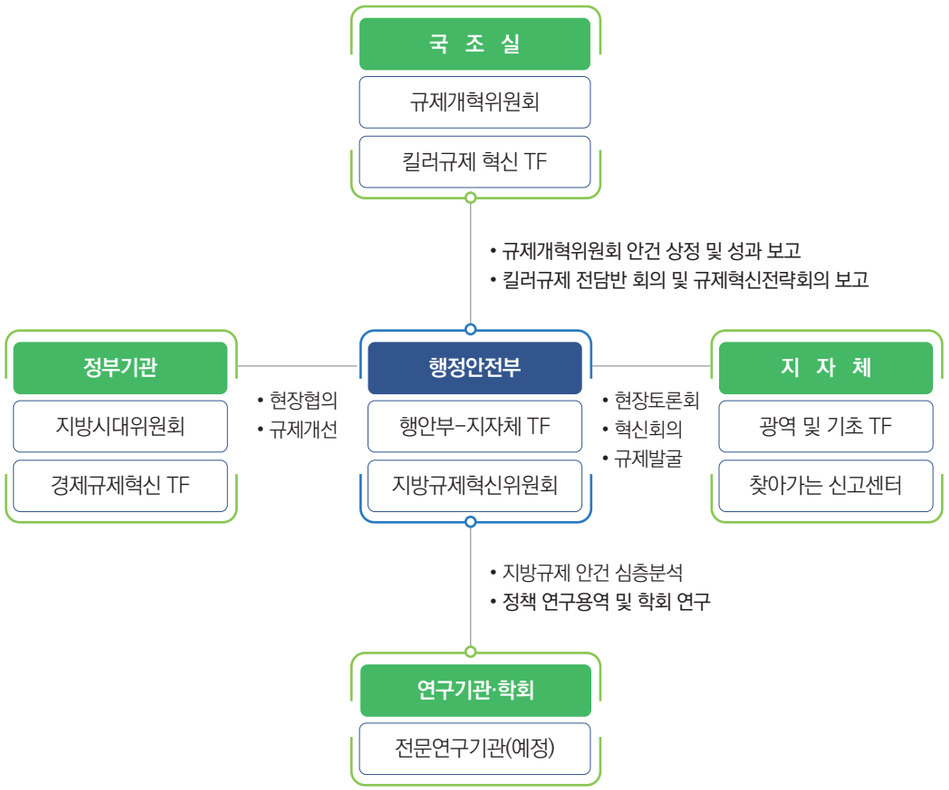

차관, 회의 주재


지역기업 우수사례 공유


지역 현장 관행·지침에 숨은 '그림자 킬러규제' 혜소
언론 지면보도(파이낸셜)

관계기관과의 협력으로 지방규제혁신 동력 강화

지방규제혁신 관계기관 협조체계



기재부와 공동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규제개선 성과 보고

기획재정부의 경제규제혁신TF는 경제분야 핵심규제 개선을 위해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한 범부처 TF로 운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경제규제혁신TF와의 협력을 통해 지자체 역점 추진사업과 지역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등을 집중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하였다. 특히 기업 현장 방문, 관계기관 합동회의, 지자체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소관부처와 신속하게 쟁점 조정을 진행하였다. 또한 부총리가 주재하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행안부·경제규제혁신TF 공동으로 규제혁신 성과 26건에 대해 발표하고 사례를 공유하기도 하였다. 그중 행정안전부가 주도한 개선사례는 10건에 달한다.

행정안전부 주도 규제혁신 발표 과제

	개선 내용	기대효과(추정치)
1	액화수소 플랜트 및 선박생산 관련 시험특례 적용	투자 1조 원
2	대전시 내 드론 비행구역 확대	매출 2,500억 원 증대
3	지자체 입주협약 기업에 부지공급 수의계약 허용	투자 1.3조 원
4	곤충 생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투자 200억 원
5	드론 특별비행 승인절차 간소화	승인처리기간 30→5일
6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인감발급 가능 명시	연 100억 원 비용 감소
7	대학설립자 교사·교지 소유의무 완화대상 지역 확대	대학설립자 부담 완화
8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요건 완화	기업 채용부담 완화
9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수의계약 기준 명확화	수의계약 확대
10	가축분뇨처리업 의무고용 기술인력 기준 완화	업체당 연 2억 원 절감

지방시대위원회와 지방의 킬러규제 해소 발판 마련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선포식을 통해 향후 5년간 중앙-지방이 함께 중점 추진할 9대 정책에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를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지자체-지역기업 등이 협력하여 기업활동 및 투자 등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자체 규제혁신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낙후지역인 접경·도서지역 가운데 인천시 옹진군을 방문하여 정주여건을 악화시키는 규제를 발굴하고 주민 규제애로를 청취하였다. 규제는 접경지역 지중화 사업적용 요건 완화(산업부), 여객선 운행제한 개선(해수부),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조건 완화(농식품부), 공항소음구역 지정기준 변경(국토부) 등 6건에 이른다.



지방시대 브리핑(위원장, 9.14.)



지방시대 9대 정책 발표(9.14.)


행안부-지방시대위 현장방문(11.15.)

대통령 강조사항인 킬러규제 중점 해소

국무조정실에서는 킬러규제 혁신 TF를 구성하여 토지이용·산단입지 등 규제분야별 전담반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그중 지자체의 그림자 규제를 전담하고 있다. 행안부-시도는 세 차례에 걸쳐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중점개선 유형 5가지를 선정하였으며 총54건을 발굴·개선하였다. 또한 개선된 사례 가운데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전국 지자체 확산이 필요한 과제를 3건 선정하고 지자체에 전파 및 확산을 추진하였다.

킬러규제(그림자 규제) 확산 과제

과제 내용	지자체
• 기업 투자현장 애로해결 TF팀의 상시 운영 – 인프라(전력, 부지) 구축 지원, 공기업과 협력사업 추진 등	충북
• 산단 지원시설 허용요건 및 입주업종 완화 – 지방산단 내 물류센터·주차장 등 인프라 개선 및 신산업 등 입주 허용	대구·세종
• 워케이션 시행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 확대, 원격·분사 근무 지원 규정 등 신설	제주

충북 권역별 규제혁신 토론회 지원

충청북도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북부·남부·중부권역별 현안규제를 발굴하여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는 행정안전부와 지방규제혁신위원이 참석하여 지역기업·소관부처·지자체·전문가와 함께 규제개선 방안 및 향후 조치계획을 협의하였으며 미해결 과제에 대해 부처 재협의 및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안건 상정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는 제천 제3산단(북부), 보은 삼승농공단지(남부), 청주 오송산단(중부) 등 산단 입주기업에 방문하여 규제애로 청취 및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다.

권역별 규제혁신 토론 안건

충북 권역	규제혁신 토론 안건
북부권 (6.29.)	① 영세사업장 기술인력 고용부담 완화(충주→환경부) ② 식물조직 배양산물의 식품사용 허용(제천→식약처) ③ 농어촌민박 연면적 산정 기준 완화(단양→농식품부)
남부권 (9.22.)	① 인구소멸지역 중소기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완화(보은→고용부)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행정재산 무상 사용 허용(옥천→복지부) ③ 산업단지 입주업종에 스마트농업(관련시설) 명문화(영동→국토·산업부)
중부권 (12.8.)	① 산업입지법상 공공시설의 범위에 주차장 포함(진천→국토부) ②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에서 소규모 건축물 제외(괴산→국토부) ③ 전기사업허가 의견수렴 절차 개선을 통한 처리기간 단축(음성→산업부)

중앙부처 덩어리 규제 집중 발굴·개선

규제혁신 프로세스 및 추진체계 개선

행정안전부는 중앙정부 규제로 인한 지역현장 규제애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각 지자체에 전달하였다. 2023년은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으로 체감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별 중점규제 해소에 역량을 집중하였으며 규제혁신 프로세스 및 추진체계를 개선·강화하였다.

2023년 주요 개선 내용

	기 존	개 선
1	모든 과제 동일하게 개선 노력	범정부 과제·공통규제에 선택과 집중
2	행안부 주도 중점분야 선정	지자체 주도 중점분야 선정
3	반기별 과제 발굴 및 개선	분기별 과제 발굴 및 개선
4	전문가·부처의견 미청취 과제 다수	전문가·부처의견 청취 의무화
5	지방규제 전담 조정협의체 부재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신설

개선이 시급한 지역 현안규제 중점 발굴

현장간담회, 지자체 건의과제 접수 등을 통해 발굴된 규제는 1,514건에 이르며 중점과제는 1,032건이 선정되었다. 이는 지자체별로 지역 역점·공약사업 등 지역 특성·여건을 고려하여 규제개선 중점분야를 1~2개 선정하고 세부과제를 집중 발굴한 결과다. 1분기에는 행안부-지자체 합동 순회간담회를 통해 규제현장 23곳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지자체별 중점분야 현황(17개 시도 27개 분야)

구분	지자체별 중점분야
신산업(8)	서울(신산업), 대구(미래 모빌리티), 광주(AI 제품·서비스), 대전(신산업), 세종(자율주행로봇), 경기(신산업), 강원(액화수소), 충북(이차전지 등)
탄소중립·바이오(7)	경기(신재생에너지), 충북(바이오산업), 전북(①친환경차,②신재생에너지), 전남(신재생에너지), 제주(①가축분뇨처리업, ②양돈산업)
산업(연구)단지(4)	대전(대덕특구), 울산(산업단지), 충남(산업단지), 경북(산업단지)
조선·해양·항만(4)	부산(해양항만산업), 울산(조선업), 경남(①남해안 관광, ②조선업)
지역개발(4)	서울(주택시장), 부산(기업·투자 유치), 인천(섬·접경지역), 강원(리조트 관광)

지자체와 협력하여 속도감 있게 규제 개선

중점과제에 대해서는 부처협의를 추진하였으며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현장토론회,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등 민·관 협력을 통해 156건의 개선을 완료하였다. 대표적으로 드론·로봇·수소 등 신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산단 입주 업종 확대, 고용규제 개선 등을 통해 지역기업 활동 촉진을 지원하였다. 또한 지역의 주력 수출산업 규제애로를 해소하고 각종 행위제한 완화를 통한 투자 촉진, 무인발급기 본인 외 허용 등을 통해 국민편의를 증진하였다.

분기별 지자체 건의 및 개선 현황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지자체 건의(건)	127	348	461	584	**1,514**
중점과제(건)	96	168	318	456	**1,032**
개선(건)	16	35	58	47	**156**

중앙부처 규제 분야별 주요 개선사례

	기 존	개 선
신산업	대전시 비행금지구역 완화	매출 2,500억 원 증가
	자율주행로봇 활용 산업범위 확대	로봇 산업 활성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 승인기간 연장	절차 비용 감소
	액화수소 안전밸브 성능시험 현실화	매출 550억 원 증가
산업단지	곤충 생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투자 200억 원
	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 요건 완화	소규모 산단 관리 개선
	일반산단 부지공급 수의계약 허용범위 확대	매출 3.7조 원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전문건설업 면허 발급	입찰 수주 애로 해소
고용	가축분뇨처리업 의무고용 기술인력 기준 완화	인건비 연 800억 원 절감
	조선업 숙련기능 외국인력 고용 요건 개선	외국인력 760명 증대
	PC방 청소년 고용 허용	PC방 고용애로 감소
수출·투자	수출용 중차량 방산물자 육상운송 규제 완화	매출 2조 원 증가
	이차전지 산업 위험물 안전관리 규제 개선	투자 5,800억 원
	중수도시설 운영 관리주체 변경 및 설치기준 완화	사업시행자 부담 경감
	공유수면법상 원상회복 의무면제 관련 규제 개선	행정절차 신속 처리
국민편의	아동급식전자카드 충전한도 상향(월 50→100만 원)	카드 충전 불편 감소
	무인민원발급기 본인 외 발급 허용	민원인 불편 해소
	가정양육수당 압류방지계좌 허용	양육권 보호

파급력 높은 그림자·행태규제 발굴·개선 및 모범사례 확산

15건의 모범사례 선정 후 전국 지자체 확산

매 분기마다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언론보도, 카드뉴스 등을 통해 전국 지자체에 전파하였다. 그중 전문가 자문 및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15건의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전국 지자체에 확산하고 있다.

모범사례 전국 지자체 확산 현황

	내 용	지자체(총 226개) 시행 현황		
		'22년	'23년 10월	증감
2022년 4분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처리기준 마련	0.9%(2개)	**39.8%(90개)**	**38.9%p** ↑
	국세·지방세 납입증명 제출 없이 토지보상금 지급	16.8%(38개)	**41.2%(93개)**	**24.4%p** ↑
	환경법 관련, 과징금 가감률 고시 마련	1.0%(2개)	**4.0%(9개)**	**3.0%p** ↑
	식품 및 공중위생업 영업신고 전 심사청구 고지	10.2%(23개)	**23.0%(52개)**	**12.8%p** ↑

	내 용	지자체(총 226개) 시행 현황		
		5월	10월	증감
2023년 1분기	산업단지 입주기업 공공폐수처리비 감면	15.9%(36개)	**16.8%**(38개)	**0.9%p** ↑
	지적재조사지구 토지분할 건축절차 간소화	42.5%(96개)	**43.8%**(99개)	**1.3%p** ↑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지원기준 신설	37.2%(84개)	**38.9%**(88개)	**1.7%p** ↑

	내 용	지자체(총 226개) 시행 현황		
		5월	10월	증감
2023년 2분기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설 허용	1.3%(3개)	**6.2%**(14개)	**4.9%p** ↑
	경로당 맞춤형 간편 회계서식 보급	27.7%(49개)	**40.3%**(91개)	**12.6%p** ↑
	통합위임장 공동활용으로 토지민원 절차 간소화	11.9%(27개)	**23.9%**(54개)	**12%p** ↑

	내 용	지자체 시행 현황
2023년 3분기	전기차공장 건설 인허가 동시 추진으로 허가기간 단축	확산 독려 및 시행 중
	오염도를 낮춘 수증기 응축폐수, 우수관로로 직접 방류 허용	
	반지하주택 침수 · 화재 위험 원천 차단 도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급방식 개선으로 사용편의 증진	
	도로점용 허가 대상 구역별 통합으로 행정절차 이행부담 완화	

지방규제혁신 국민 체감도 제고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 우수작 선정·공유

국민 눈높이에 맞으며 공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국민이 규제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과정에 참여하는 대국민 공모를 개최하여 국민제안 1,173건을 접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중 시급한 과제 111건을 선정하여 전문가 자문, 부처협의 등을 통해 32건을 개선하였으며 12건은 중장기 검토, 62건은 불수용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규제개선 과제 중 온라인 공개검증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효과성·창의성·실현가능성이 우수한 제안 20건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 시상 개요

(시상) 총 20명(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17명) / 9.14.

※ (공모기간 / 대상) 2.15.(수) ~ 3.31.(금) / 국민 누구나

최우수	**공장승인 및 등록취소 신고조항 신설** • 신규사업자(매년 500여명) 기존 공장등록 취소 절차 부담 해소 • 산업부, 「산업집적법」 개정시 반영 합의
우 수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등록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 폐지** •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자(매년 9만여명) 서류준비 부담 완화 • 농식품부, 「민원처리기준표」 개정 합의
우 수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PC방 제외** • PC방 고용난 완화 및 청소년 근로 선택권 확대 • 여가부, 「청소년 보호법」 개정 추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으로 기업 규제애로 발굴·해소

지자체별로 규제·사업부서 및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방문단이 기업·생업 현장 1,092곳을 직접 찾아가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규제혁신을 추진하였다. 현장방문단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방문(규제사냥단, 전남), 1주 1기업 방문(찾아가는 기업애로 현장기동반, 경남), 1기업 1공무원 전담제(전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자체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실적(건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33	97	57	42	60	42	27	16	94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94	74	76	33	120	54	144	29	**1,092**



전남 규제사냥단 기업 방문(9.19.)



경남 기업애로 현장기동반(5.10.)



전북 1기업 1공무원 전담(동아, 11.7.)

지방규제혁신 성과 다각적 홍보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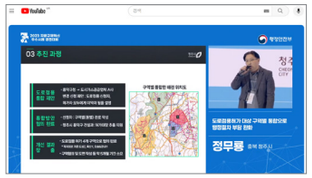
중앙부처 규제 및 그림자·행태규제 개선사례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하여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먼저 지방재정경제실장의 언론 기고를 통해 행안부의 지방규제혁신 의지와 방향을 표명하고 유튜브 생중계, 카드뉴스 등으로 규제혁신 과정과 결과를 알기 쉽게 홍보하고 있다. 또한 연간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종합하여 상세한 규제개선 과정과 담당자 인터뷰 등을 포함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을 발간·배포한다.



실장 기고(파이낸셜, 8.8.)



언론 지면보도(아시아, 9.15.)



경진대회 유튜브 생중계(11.17.)

행정안전부 페이스북(8.17.)



규제정보포털(9.11.)

지자체 규제혁신 역량 강화 지원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한 해 동안의 규제개선 사례 중 지자체 노력·파급력 등이 우수한 대표사례를 선정·시상하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벤치마킹을 독려하였다. 먼저 2023년 규제개선 성과 중 현장성·파급력이 높은 과제 88개를 선별하고 행안부-시도 교차심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17건의 수상 대상을 선정하였다. 이후 경진대회 현장에서 지자체가 규제혁신과정, 파급효과 등을 직접 발표한 뒤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수상 등급을 결정하였다. 발표 및 시상 내용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지자체·국민과 실시간 공유하였으며 스팟영상, 카드뉴스, 우수사례집 등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작

수상	사례 내용	지자체
대상(1)	도로점용허가 대상 구역별 통합으로 행정절차 부담 완화	충북 청주시
최우수 (2)	34년만의 신공장 최단기간 허가 및 추가 투자유치	울산 본청
	「모래주머니 입지규제」 해소로 중소기업을 살리다	경기 안양시
우수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원 설치면적 등)	서울 도봉구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중복규제 완화	대구 본청
	물류단지개발 시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준용하여 인허가 절차 간소화	대전 본청
	불가했던 개발제한구역 공장제조시설, 틈새 규정으로 기업애로 해결	경기 고양시
	K-곤충산업, 산업단지에서 미래를 꿈꾸다!	충북 본청
	수출용 중차량 방산물자의 운행제한 규제 완화	경남 본청
	어업인의 조업애로 해소하는 AIS 전자해양부이로 조업효율 'UP'	제주 본청



우수사례 현장발표



현장 심사·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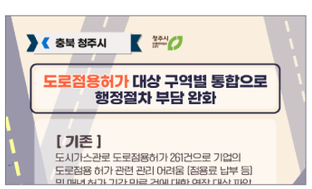
유튜브 생중계



언론 지면보도(한경, 11.17.)



스팟 영상



카드뉴스

지자체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운영, 개선실적 등 지자체별 노력과 성과를 종합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방규제혁신 추진 동력을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상·하반기 워크숍 등을 통해 평가 기준에 대해 지자체와 소통하고 평가 목적과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평가지표를 설정하였다.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243개 지자체 가운데 평가 점수가 높은 33개 지자체(광역6, 기초27)에는 작년 127억 원보다 강화된 130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상위 31개 지자체에 포상을 수여하였다.

평가지표 및 배점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배점
제도 운영	• **지방규제혁신회의 참여 및 기여도** – TF 팀장 회의 참석 및 회의 개최·사례 발표 등	20점
	• **지방규제혁신 TF 운영 실적** – 자체 TF 운영 및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실적 등	10점
규제혁신 성과	• **중앙부처 덩어리 규제개선 노력** – 과제발굴 노력 및 개선 여부, 불수용 과제 개선 노력 등	40점
	•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노력** – 규제개선 실적, 모범사례 선정·확산,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등	30점
가점	•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우수사례 홍보 등	최대 10점

지자체 규제혁신 담당자 워크숍 상·하반기 개최

행정안전부와 시도 담당자가 모여 소통하며 친목과 협력을 도모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 및 지자체 성과평가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정책연구 용역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자체별 규제혁신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하였고 지방규제혁신위원 특강 등으로 지방규제 시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하반기에는 워크숍과 강원지역 현장토론회를 연계하여 현안규제 토의를 참관하고 청년기업의 규제애로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자체 의견수렴



지자체 우수성과 공유



강원 현장토론회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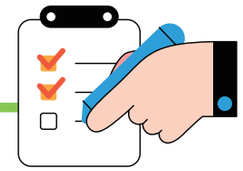
지방규제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추진

지자체가 행안부에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할 때 규제현황, 개선 필요성·대안 및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여 부처 수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지자체가 건의과제 작성 시 반드시 분석해야 할 항목 및 분석방법 등을 담은 중앙부처 규제 분석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단, 지자체가 중앙부처 규제 분석 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규제개선 내용·파급력, 유사사례 등 핵심항목 위주로 설계하였다.

한편 자치법규와 법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중앙부처의 규제영향분석서를 활용함에 따라 자치법규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행정학회를 통해 지자체 등록규제 관리현황 조사,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절차상·관리상·활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등록규제의 품질 제고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자치법규의 특성을 고려한 분야별·유형별 지자체 규제등록 체크리스트 개발,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 업데이트, 중앙·지방 등록규제 우수사례 조사 및 분석, 자치법규에 적합한 규제영향분석서 표준안 설계 등을 통해 지자체 규제등록의 내실화와 고도화에 기여하였다.



2024년 지방규제혁신 **중점 추진과제**



2

2024년 추진방향

국정 과제

114-1.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역량과 경쟁력 제고
(지방규제혁신을 통해 지자체 간 정책경쟁 환경 조성)

추진 목표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별 핵심 숙원과제 발굴 및 해소
- 민생규제와 그림자규제 적극 해소로 규제혁신 체감도 향상

추진 방향

중점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규제혁신의 지역 체감도 제고	✔ 국정운영방향에 따른 준조세 등 관련규제 혁파 ✔ 맞춤형 지역건설산업 규제애로 해소 ✔ 인허가·행정지도 소극관행 개선 ✔ 직접소통을 통한 국민애로 해결
지역 숙원과제 집중 해결	✔ 핵심 개선과제의 발굴·공표 ✔ 행안부·지방의 규제 책임관제 도입
그림자·행태규제 개선성과 창출	✔ 지자체 우수 적극행정 사례 확산 ✔ 법령 유권해석 합리적 기준 안내
지방규제혁신 리더십 강화	✔ 지방규제혁신 지역 및 행안부 대토론회 개최 ✔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보강 및 활성화
지자체의 규제혁신 역량 지원	✔ 규제 체감도 지향의 성과평가 지표 개선 ✔ 지자체 규제관리정책 내실화

규제혁신 지역 체감도 제고

국정운영방향에 따른 준조세 등 관련 규제 혁파 신규

대통령 지시사항('24.1.)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중앙정부의 부담금 등 준조세(그림자조세)를 원점 재검토하여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격차를 조정해 나간다. 부담금과 부과금 관련 조례는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조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조례' 등 총 643개에 이른다. 행정안전부는 준조세 자치법규 조사를 통해 규제를 정비하고 개선부담금이 포함된 중앙법령 제도를 개선하면서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일괄 정비를 병행 추진한다.

절 차

준조세 관련 자치법규 전수조사 및 개선과제 선정 → 지역 간 편차 최소화 방안 전문가 논의 → 지자체 규제개혁위원회 및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 안건 상정·의결 추진

맞춤형 지역건설산업 규제애로 해소 신규

경기 불황으로 인해 폐업 중인 지역건설사의 지자체 규제애로를 해결하며, 지역맞춤형 건설산업 지원 조례를 통해 고충 해결방안의 정책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인허가·계약조건 등 행정규제와 행정지도로 인한 규제부담 내용을 청취하여 해소한다. 또한 지역건설산업 규제애로 중 지자체의 불합리한 관행 및 적극행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원 조례 조항으로의 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역건설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는 총 219개이며 관급공사 수급인 노력사항과 대가의 적정지급 등을 선언적으로 규정하여 구체적 애로해결책을 반영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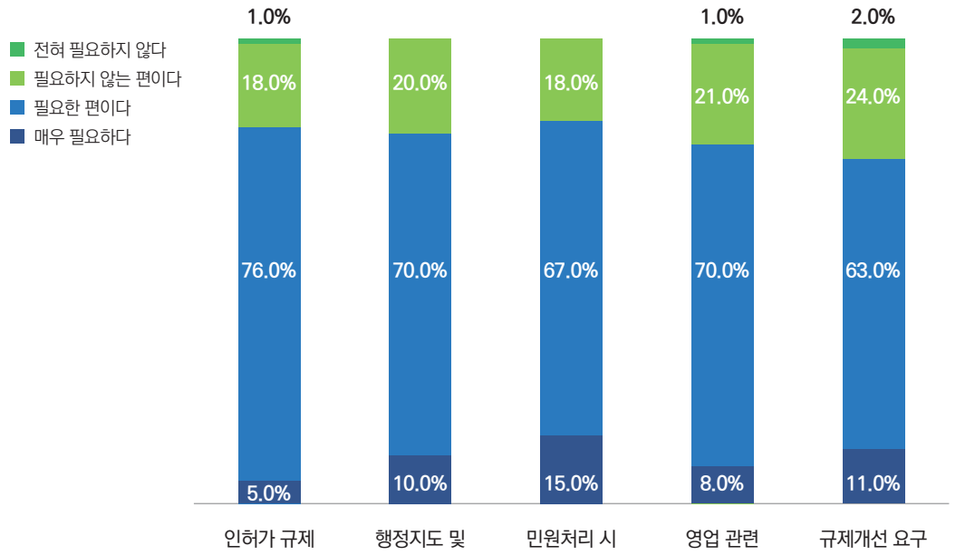
절 차

행안부 내 관련부서 (공기업정책과, 회계제도과 등) 협의 → 간담회 추진 및 정책화 방안 마련 → 개선방안 발표 → 장관 주재 대토론회 추진

인허가·행정지도 소극관행 개선 신규

2023년 100개 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불만이 다수 제기된 인허가·행정지도 관련 규제애로에 대한 개선도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조사항목을 확정한 후 지자체 행태조사를 시행하여 이를 점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규제애로 혁신 필요 분야



	인허가 규제	행정지도 및 단속 규정	민원처리 시 행정 해결절차	영업 관련 각 종 규제	규제개선 요구 정책 및 조직
필요함	81.0%	80.0%	82.0%	78.0%	74.0%
필요하지 않음	19.0%	20.0%	18.0%	22.0%	26.0%

직접 소통을 통한 국민애로 해결 확대

그동안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민생규제 공모전'을 기업 및 업종 협회로 확대하고 국민 일상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 발굴한다. 또한 현장 방문단을 구성하여 권역별 주력업종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공모된 규제 애로의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현장 방문단의 경우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확대·개편하여 지자체 규제 총괄 부서, 사업 부서, TP(테크노파크)·전문가(시·도 연구원 등)로 구성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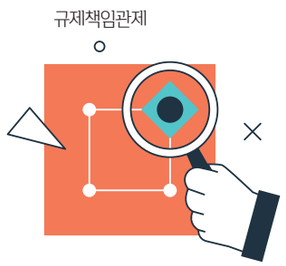
지역 숙원과제 집중 해결

핵심 개선과제의 발굴 및 공표 신규

행안부·지자체 협의를 통해 선정된 핵심 개선과제에 대해 '지방규제지도'를 작성하여 공표할 계획이다. 먼저 기초지자체(시·군·구)에서 건의한 규제과제의 중요도를 광역지자체(시·도)가 선별한 후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할 지자체 숙원과제를 발굴한다. 이를 바탕으로 행안부·지자체 협의를 통해 반기별 핵심 개선과제를 50건 이내로 선정한다. 과제 수는 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도권 3건, 비수도권 2건, 세종·제주 1건 등으로 배정된다. 선정된 핵심 개선과제는 지방규제지도로 공표하여 규제혁신 효과를 가시화하고 개선 상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간다. 또한 지방규제지도에는 규제연혁·제기시점·관련 업종·소관부처 및 개선효과 등이 명시적으로 표시된다.

행안부·지방의 규제책임관제 도입 신규

앞으로는 행정안전부 국·과장 및 광역 간부가 핵심 개선과제의 발굴·조정을 직접 지원한다. 이는 인허가 덩어리 규제 등 중앙·지방 협력이 필요한 핵심 개선과제의 규제책임관을 지정하여 규제개선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중앙책임관은 행안부 국·과장급을 17개 시·도 규제책임관으로 배정하며 규제현장 점검, 부처 조정협의 등 규제 개선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지방책임관은 소관 안건 등을 고려해서 지자체 국·과장급으로 선정하며 부처 조정 협의 기회 마련, 지역홍보 강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책임관은 지방규제 지도 작성 후에 확정할 예정이다.



그림자·행태규제 개선성과 창출

지자체 우수 적극행정 사례 확산 확대

준조세·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강화하는 등 기업활동 지원 및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확산분야를 더욱 확대함과 동시에 권고절차 체계화도 추진한다. 즉 분기별 적극행정 사례를 공모·선정하여 전문가 및 지자체 적용상황을 검토한 후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한 의결 및 권고를 활성화해 나간다. 또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우수사례 외에도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 정책 사례를 안내하고 집중적인 언론 홍보를 추진함으로써 지자체의 관심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확산 진행중인 과제

내 용		지자체(총 226개) 시행 현황		
		'22년	'23년 10월	증감
준조세 관련	• 환경법 관련, 과징금 가감률 고시 마련	1.0%(2개)	**4.0%(9개)**	**3.0%p↑**
	• 산업단지 입주기업 공공폐수처리비 감면	15.9%(36개)	**16.8%(38개)**	**0.9%p↑**
인허가 절차 간소화	• 지적재조사지구 토지분할 건축절차 간소화	42.5%(96개)	**43.8%(99개)**	**1.3%p↑**
	• 전기차공장 건설 인허가 동시 추진으로 허가기간 단축	확산 독려 및 시행현황 조사 중		
	• 도로점용 허가 대상 구역별 통합으로 행정절차 이행부담 완화			

법령 유권해석 합리적 기준 안내 확대

기업투자지원을 위한 법령 유권해석의 합리적 기준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인허가·공장증설 등 기업과 관련한 중앙·지방 법령 유권해석 사례를 전수 제출받아 이를 분석한 후 분기별로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 알림마당 내 지방규제혁신·법령 유권해석에 게시하고 홍보하게 된다.

지방규제혁신 리더십 강화

지방규제혁신 지역 및 행안부 대토론회 개최 확대

광역지자체에서는 자율적으로 중점 개선과제에 대한 조정 및 토론회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2023년 충청북도의 경우 북부·중부·남부권 등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 기초 지자체의 기업애로를 해소하였다. 한편 광역지자체 토론회를 거친 미해결 중점 개선과제와 관련하여, 그중 파급력이 큰 과제와 자치법규의 포괄적 개선안에 대해서는 행안부 대토론회를 시행하여 적극 해소해 나간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보강 및 활성화 신규/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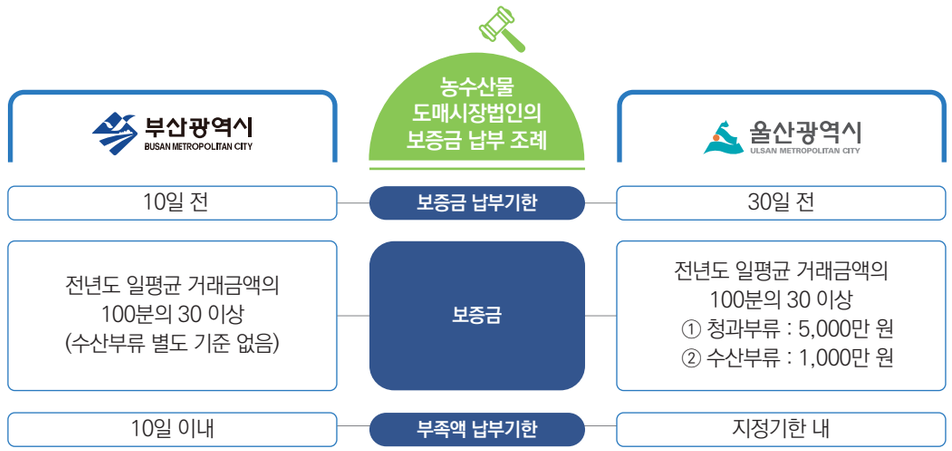
지방행정연구원 내의 지방규제연구센터를 통해 광역지자체의 검토를 거친 중점 개선과제의 비용 및 편익 분석, 그리고·개선 대안 마련 등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분석체계가 구축된다. 대상은 연초 선정된 중점 개선과제 가운데 규제혁신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전국적인 과제, 지역 내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상당한 과제 중 지자체·부처 간 의견 차가 큰 과제로 선정된다. 또한 안건 심의·조정도 활성화하여 심의안건을 지역별로 균형 안배하고 사전 심의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본회의 심의의 수적·질적 효과성을 제고한다.

지자체의 규제혁신역량 지원

지자체 규제관리정책 내실화 신규

신설·강화되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시, 필요할 경우 현재 활성화되지 않은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자치법규 규제의 양산을 방지한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규제등록 체크리스트(2023년, 한국행정학회)를 배포하여 비규제 등록을 사전에 차단하고 등록규제 시스템의 품질을 제고하는 등 등록규제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기업활동 지원 등 테마별 자치법규를 일괄 조사한 후 과도한 규제의 경우에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 검토를 거쳐 조정 권고를 시행하는 등 규제격차도 조정해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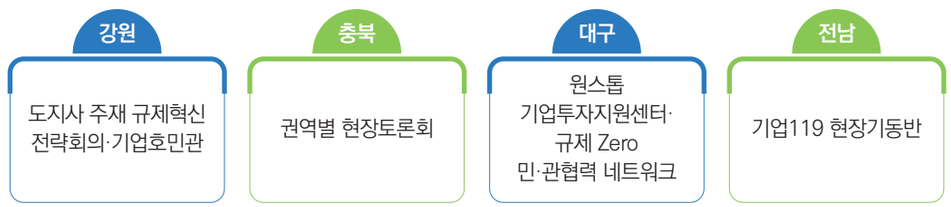
자치법규 규제격차 사례



규제 체감도 지향의 성과평가 지표 개선 신규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지자체별 노력과 성과를 종합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선하고 평가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즉 지자체 사업의 이행도, 효과성 등 정성지표를 신설하여 지자체의 자율적 규제혁신사업을 독려하고 전문가 평가 절차를 포함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한다. 이는 과거의 양적 지표에서 질적 지표로 개선함으로써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 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지표는 지자체·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되며 평가 시행 후 성과평가 우수 기관에는 특별교부세 및 정부포상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2023년 지자체 자율 규제혁신사업 예시



새정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 1. '킬러규제 혁신TF' 그림자(킬러) 규제 개선 사례
- 2.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혁신 공모사례
- 3. 지자체 중앙건의과제 개선 사례

PART II

새정부의 지방규제혁신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언제나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끊임없이 소통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찾아내고 살펴보며
그림자·행태규제 및 중앙규제의 개선을 적극 실천합니다.





‘킬러규제 혁신TF’ **그림자(킬러) 규제 개선 사례**



1

행정안전부는 국무조정실 ‘킬러규제 혁신 TF’에서 지자체의 그림자 규제 전담반으로 지정되어 2023년 8월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규제발굴·개선을 추진 중이다. 특히 10월에 개최된 행안부-지자체 ‘그림자(킬러) 전담작업반’ 실무(점검)회의를 통해 그림자(킬러) 규제 개선 사례 54건을 발굴하였다. 이어 제7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그중 전국 지자체 확산이 필요한 주요 사례 3건을 선정하고 적극적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투자 현장 애로해결 TF팀 상시 운영

충청북도

현 황

- 충청북도는 도내 투자기업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시적으로 TF팀을 운영해 왔다.
- 그러나 투자유치의 확대에 따라 기업 관련 다양한 분야의 규제 및 애로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해소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었다.
- 이에 신산업·전문 분야 규제 및 건축·소방·환경 등 다수의 인허가 절차 요구에 따른 투자기업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상시 대응체계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개 선

- 충청북도는 기업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점검회의’를 개최(2023.2. 상시)하고, 회의에서 도출된 기업애로는‘기업투자 현장 애로해결 TF’에서 도·시군-유관기관-중 앙 간 협업을 통해 해소하였다.
- 또한 대규모 전력 공급, 공업용수 공급, 환경규제 등 투자 애로사항에 따라 TF의 협업기관·부서를 확대하여 운영하였다.
- 이처럼 상시 TF 운영을 통해 전력·용수·환경·대규모 필지 확보 등 기업애로를 신속·맞춤형으로 해결하였으며 투자기업 인프라 구축 지원 5건, 한국전력공사 전력인프라 구축 협의 1건 등 투자유치성과를 확대하였다.

상시 TF 운영



재생산단 지원시설 허용요건 완화

대구광역시

현 황

-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재생계획 승인·고시(2018.7.)된 염색산단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신경일염직은 복합용지로 용도를 변경받아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었다.
- 해당기업은 부동산 경기둔화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분양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대기업의 물류센터를 유치하고자 하였다.
- 하지만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허용요건(지원시설 비율, 지원시설 허용업종 등)의 제한에 의해 유치가 불가능하여 건축허가 후 2~3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개 선

- 대구광역시는 지원시설 허용비율을 현행 산업시설은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지원시설은 3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 또한 창고시설 허용을 통해 지원시설 허용 업종을 확대하였다.
- ‘대구염색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개발실시계획’의 지원시설 허용요건 완화는 원활한 지식산업센터 건립·분양을 지원하고 대구광역시의 산단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 완화로 기업유치 활성화

세종특별자치시

현 황

- 신규기업인 한국로지스풀(주)(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는 전의2 일반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였으나 관리기본계획상 입주 가능한 제조업이 12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어 입주가 불가능하였다.
- 기존 산업단지계획의 유치업종에 따라 기반시설 확보, 환경성 검토 등이 이루어져 있어 신규기업 입주를 위해서는 산업단지계획 변경, 기반시설 재검토, 관계기관·부서 협의 등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개 선

- 세종특별자치시는 애로 해소를 위해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2023.9.)를 통해 주요 업종배치계획 업종코드를 추가로 부여하고 임대업 추가를 허용함으로써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을 완화하였다.
- 적극적인 검토로 산업단지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신속한 산단 계획을 변경한 세종특별자치시는 관련 제조업체의 관내 투자유치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자(킬러) 규제 개선 사례(54건)

구분	건명	제출 시도
인허가 과정에서의 숨은 규제	물류단지개발 시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준용하여 인허가 절차 간소화	대전
	재생산단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 완화 및 복합용지 변경 허용	대구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선방안 수립	울산
	건축물표시(용도)변경 ONE STOP 서비스	경기 양주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개선	대전
	경기도 광주시 행위제한 완화 고시(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비율 확대)	경기
	옥외광고물 현수막 제작 및 색채 기준 폐지	대전
	자동차정비업 등록에 따른 정비요원 자격기준 완화	경남
	재생산단 지원시설 허용요건 완화	대구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 완화로 기업유치 활성화	세종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 완화로 기업유치 활성화/ 제조업 추가 허용	세종
불분명한 기업활동 지도 및 단속기준 개선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시설기준 완화	부산
	산업단지 내 건축물 위 태양광발전시설 규제 완화	경북 상주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 단기 근로계약 개선	경기
	창업보육센터 부재시 신고 기간 완화로 입주기업의 효율적인 창업 활동 지원	강원 동해
공장설립 증설 시 관행적 행태 개선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준 개선	대전
	농공단지 입주기업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감면	경남 합천
	소상공인 지원사업 원스톱으로 한번에 처리!	경남 합천
	산업단지 재생사업 건축행위 제한 완화	대전
	산업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	대전
기업활동 지원	산업단지 입주 업종 코드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추가	전남
	지역특화단지 지원 근거 신설	충남
	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 완화로 산업경기 활성화 도모	울산
	전라북도 투자보조금 선지급으로 기업활동 지원	전북
	화장품 집적화단지 입주업종 범위 확대	전북 남원
	전북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지원범위 확대	전북
	「공공사업 입지검토 지원단」 운영	대전
	「기업애로원스톱 해결단」 확대 운영	대전

구분	건명	제출 시도
기업활동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확대지원	경남
	인천 산업기술단지 입주 기준 완화	인천
	완주 농공단지 입주가능 업종범위 확대	전북 완주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첫 '공공 토지 비축사업' 활용	울산
	주상복합건물 등 집합건물의 표준 관리 기준 마련	대구
	상가 허용용도 완화(소규모 숙박시설 및 금강 수변상가)	세종
	기업친화적 지방세 세무조사 시책 추진으로 조세행정 혁신	충남
	용도지역 조정을 통한 기업성장 기여	전남 담양
	기업유치를 위한 제주형 차별화된 기업지원 강화 -워케이션 시행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제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기업 지원 합동센터(市, 유관기관)」 운영	부산
	중소기업을 든든히 받치는 특례보증 대상 확대	경북 청도
	소상공인 관련 사업 지원대상 기준 완화	인천
	기업투자 현장 애로해결 TF팀 상시 운영	충북
	주력업종 창업기업 지원 확대	강원
	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애로 해소	경기 남양주
	NFT기반 협력을 통한 창원 예술 활성화 사업	경남 창원
(기업활동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절차 간소화	법령개정 전 완공 건축물('80년대 이전 업무시설) 용도 기준 적용 시 합리적인 현행 기준 적용으로 시민 부담 완화	부산
	하도급 변경 절차 간소화	충남
	소유권 등기이전으로 환지처분 전 청산금 지급	충남 홍성
	조선특구·일반산업단지 중복지정을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경남
	도로굴착 점용허가 시 중복 심의절차 개선	충남
	위생업소 영업 인 · 허가 원스톱 민원서비스 실시	제주
	경제자유구역 내 각종 민원 업무별 소관 행정기관 일원화	부산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한 불필요한 규제 감축	제주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지하안전평가 협의 시기 개선	경남 창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개선	제주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혁신 공모사례**



2

2023년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일반 국민 및 마중무리·생활공감단·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개최된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혁신 공모전'에는 총 1,173건의 제안이 접수되었다. 그중 선별된 113건의 중점과제를 평가하여 부처협의를 진행한 결과 수용 11건, 중장기검토 12건 등이 결정되었다. 공모전은 창의성·실현가능성·효과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장관상 수상작은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17건 등 총 20건이 선정되었다.

공장승인 및 등록취소 신고 조항 신설

현 황 — 경상남도 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 — **개 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는 공장 설립승인(등록)을 득한 자가 폐업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되어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규정이 없다.
- 따라서 공장이 파산 또는 다른 이유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등록된 공장에게서 취소 신청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 공장등록 자진취소 조항은 개정 예정인 사항이므로 수용으로 결정되었다.
- 하지만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이전 사업자의 공장등록 취소 건의는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수용이 불가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 관련 내용은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4년 6월까지 개정 건의할 예정이다.

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 징구 폐지

현 황 — 제주 마중무리 농림축산식품부 — **개 선**

- 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 시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의 농산물 판매영수증과 농자재 구매영수증을 구비서류로 제출받고 있다.
- 하지만 본인 명의의 영수증으로 증명이 안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인 명의의 영수증으로 재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 농업경영정보 등록 시 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를 서류, 시스템 검증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여 사실에 부합한 경우에만 등록하고 있다.
- 따라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협조 하에 신청서 구비서류에서는 본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판매영수증 징구를 제외하도록 행정안전부 고시 「민원처리기준표」 개정을 추진한다.

청소년보호법상 만19세 미만 청소년 고용금지에 대한 규제 완화

현 황 — 경상남도 공무원 여성가족부 — **개 선**

- 「청소년보호법」으로 지정한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가 너무 많아 오히려 청소년의 일자리를 과잉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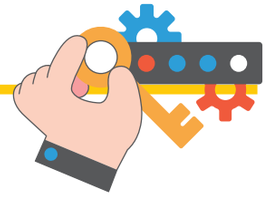
- 숙박업소 및 DVD방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를 제외한 코인노래방, PC방, 만화카페 등의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타당평가를 실시하였다.
- 그 결과 PC방 전체 금연구역 지정, 음란물·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등의 시행으로 인해 PC방 청소년 고용에 대한 유해성이 감소됨에 따라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 다만 코인노래방은 문체부 법령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므로 중장기 검토로, 만화카페는 불수용으로 결정되었다.
- 이후 규제 완화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의원입법 및 개정을 추진하였다.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혁신 공모전 수상작

포상 등급	시도	성명	제안명
최우수(1)	경남	조*린	공장승인 및 등록취소 신고조항 신설
우수(2)	제주	임*배	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 징구 폐지
	경남	김*하	19세 미만 청소년 고용금지 규제 완화
장려(17)	경남	신*태	농지에 스마트팜 바로 허용으로 농업 스마트화
	강원	정*태	주요 농산물의 체계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주산지 지자체에 관련 업무 위임
	경남	이*기	정부납부기술료 산정방식 이원화
	전남	조*호	기계설비 유지관리사 세부적인 분류 체계 마련
	경남	손*재	매장문화제 발굴비용 국가 부담 방안 마련
	경기	권*	집합건물 시행사가 행사하는 위탁관리회사 선정권한 공공 이양
	전북	홍*식	관광식당업 시설자금 융자 신청자격 완화
	경남	김*민	자동차전문정비업 불필요 시설기준 개선
	울산	차*용	자동차관리사업 영업정지 처분 완화
	전남	변*현	산업기사 응시자격 공정한 기회 부여
	대구	김*익	이원화 관리되는 도서 바코드라벨 통합
	대구	김*지	산업단지 내 소각장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반입처리 건의
	경기	이*주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기준 완화 및 집단급식소 시설 기준 명확화
	부산	이*림	청소년이용시설 체육시설의 종류 축소
	경북	김*일	소규모 공사 · 용역 · 납품 등 실적증명서의 편리한 발급
	경남	정*민	일반택시운송사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변경 및 완화
	충남	박*순	아산탕정지구 준주거용지 청소년게임산업제공업 규제 개선

지자체 중앙건의과제 개선 사례

3



2023년 4월 신설된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민·관 합동으로 지역 현장의 규제 애로에 대한 전문적 검토·분석을 통해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고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입지·환경·고용 등 중앙부처 규제를 발굴 및 집중 해소하였으며, 2023년 분기별 건의과제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개선 결정된 과제는 163건에 이른다. 2023년 지자체의 중앙건의과제 가운데 주요 개선 사례를 살펴본다.

기초지자체와 입주 협약을 맺은 기업에 부지공급 수의계약 허용

현 황 — 경기도 양주시 국토교통부 — **개 선**

- 광역지자체 및 인구 50만 명 이상 기초지자체 등 일반산단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맺은 기업에게만 수의계약을 통한 산단부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이는 지역의 활발한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였다.

- 기초지자체가 산단 사업시행자인 경우 기초지자체와 입주협약을 맺은 기업에게도 부지공급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규제를 개선(2023.8.)하였다.
- 이로써 대규모 기업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기업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곤충생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현 황 — 충청북도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 **개 선**

- 곤충산업 중 가공·유통업은 산업단지 내에 입주가 가능하지만 곤충생산업은 농업(축산업)으로 분류되어 입주가 불가능하였다.
- 생산·가공·유통업 연계 및 ICT 자동화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나 곤충산업의 분리 운영으로 연계가 어려워짐에 따라 비효율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23.12.)을 통해 곤충가공업의 원재료로 곤충을 생산하는 경우 곤충생산시설을 곤충가공업의 부대시설로 보아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였다.
- 곤충산업의 집적화·자동화를 통한 대량생산 및 비용 절감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전 세계 곤충산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이차전지 산업 위험물 안전관리 규제 개선

현 황 — 충청북도 소방청 — **개 선**

-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위험물 '제조소'는 강력한 구조·설비 기준을 적용받고, 위험물 '일반취급소'는 특례가 없는 경우 위험물 '제조소'의 구조·설비 기준 준용이 필요하다.
- 이차전지 제조공장의 경우 일부 시설·공정에만 위험물을 취급함에도 건물 전체가 위험물 제조소의 구조·설비 기준 충족이 필요함에 따라 공사기간과 사업비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 이차전지를 제조하기 위해 위험물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별특례 기준을 신설(~2024.6.)하기로 협의하였다.
- 이차전지 기업의 소방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공장·시설 신·증축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업비 절감 및 산업 경쟁력 강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규모 요건 완화

현 황 — 충청남도 산업자원부 — **개 선**

- 산업단지 면적이 15만㎡ 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수가 10개 이상인 경우에만 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이 가능하다.
- 반면 설립규모 요건을 미충족하는 소규모 단지는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이 불가능하여 지원·관리 미비 및 입주기업 간 협력·소통 애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 설립규모 요건을 완화(~2024.6.)하기로 부처협의하여 소규모 산단이라도 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였다.
- 면적기준은 15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입주기업체 수는 10개 이상에서 4개 이상으로 현행보다 완화함으로써 소규모 산단 관리·지원 강화, 입주기업체 간 협력 활성화가 예상된다.

비전문취업인력(E-9)의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요건 완화

현 황 — 전라남도 법무부 — **개 선**

- 비전문취업인력이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하려면 국내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요구된다.
- 따라서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의 출국이 불가피하여 절차·비용상으로 비효율적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요구되었다.

-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하지 않고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이 가능하도록 근무경력 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특정활동(E-7) 사증 및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을 시행(2023.1.)하였다.
- 이로 인해 조선업 분야 외국인 숙련공의 취업상태 유지를 통한 안정적인 고용 유지가 가능해졌다.

일반기능인력(E-7-3) 고용규제 완화

현 황 | **전라남도 법무부** | **개 선**

- 조선업(용접)은 내국인 노동자 확보가 어려워 외국인 고용이 많이 필요하다.
- 하지만 일반기능인력 취업 비자(E-7-3)의 발급 요건이 엄격하여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 외국인 고용비율은 내국인의 20% 범위 내, 임금은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80% 이상이며 고용업체는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0억 이상,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일반기능인력(E-7-3)의 임금요건, 고용업체 요건에 대한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특정활동(E-7) 사증 및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을 시행(2023.1.)하였다.
- 조선분야의 외국인 고용허용비율은 한시적(2년 간)으로 30% 이내, 임금은 전년도 1인당 GNI 70% 이상(중소·벤처·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은 전년도 1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제한 적용기준 완화

현 황 | **경상북도 국토교통부·철도청** | **개 선**

-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신고 대상은 철도경계선↔공사지점이 아닌 필지기준(대지경계선)으로 정하고 있다.
- 따라서 행위지점이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상 이격되어도 부지가 넓은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되므로 약 1개월이 소요되는 인허가기간으로 인해 기업 유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다.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개정 추진(2023.12.)을 통해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대상 기준을 필지가 아닌 공사지점까지의 거리로 설정하거나,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절차간소화 규정을 마련하였다.
- 공사지점이 철도경계선에서 30미터 이상 이격되는 등 철도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신고 처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약 7일로 단축하도록 하였다.

수출용 중차량 방산물자의 운행제한 완화

현 황 | **경상남도 국토교통부·철도청·창원시** | **개 선**

- 방산산업 수출 증가로 인해 K2전차(56톤), K9(47톤) 등의 운송 물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 하지만 육상운송을 위한 운송허가에 최장 3개월 소요, 축하중 10톤 초과 차량 운행금지, 낮시간 운행 통제 등으로 인한 수출 영업활동 제약과 함께 운행허가 신청서류 작성기간·비용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다,

- 제한차량 운행허가 지침 개정(국토교통부)으로 허가서류 작성 기간 및 비용을 절감하고, 낮시간 운행 조건부 허용(경찰청)으로 적기 운송이 가능해졌다.
- 또한 허가기간 최장 6개월로 연장(창원시)하는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한 방산물자 적기 수송으로 방산물자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였다.

석탄경석의 산업원료화 활용방안 마련

현 황 | **강원특별자치도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 **개 선**

- 최근 경석을 활용하여 신소재 산업에 적용이 가능한 제품군이 등장함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재조명받고 있다.
- 하지만 이를 활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기업의 산업화 추진에 제약이 되고 있다.

- 석탄 경석은 유가성이 있는 광물로 무해성이 입증되었으므로 폐기물에서 제외하거나 지자체 신청 시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 이로써 경석 채굴자는 광업권 취득을 통해 경석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졌고 기업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행정·재정비용의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해양심층수염 산업 확대를 위한 고시 개정

현 황 | **강원특별자치도 식품의약품안전처** | **개 선**

- 해양심층수염은 원료수, 제조방식, 규격기준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 공전상 단순히 「정제소금」으로 분류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 식염 유형에 해양심층수염을 별도 신설하거나 해양심층수염을 정제소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를 완료(2023.8.)하였다.
- 소금에 대해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은 물론 알 권리, 건강권, 행복 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공유수면법상 원상회복 의무면제 관련 규제개선

현 황 | 경상남도 해양수산부 | **개 선**

- 공유수면법상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이 있는 경우 20일 이내 면제 여부를 회신해야 하며 의무면제 시 5개 전문기관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
- 하지만 전문기관 의견 청취기간(회신기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의견 청취 전문기관 수가 과다하여 업무·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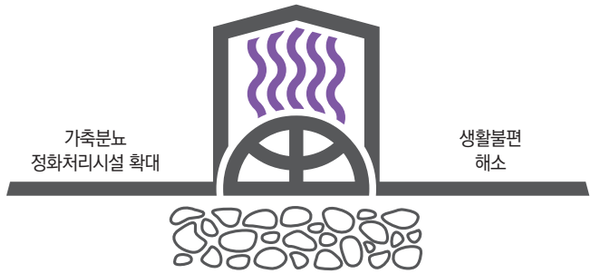
- 해양수산부에서는 2개 이상 전문기관 의견을 원상회복 의무면제 결정에 반영하도록 규정 명확화(2023.11.)하였으며, 지자체 요청기한 내 전문기관 회신의무를 명시하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처리기간 준수로 행정 신뢰도 제고 및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된다.

가축분뇨처리업 의무고용 기술인력 기준 완화

현 황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 | **개 선**

- 재활용업체가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득할 경우 해당 기술인력 3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규정으로 인해 운영상의 애로가 있었다.

- 가축분뇨처리업에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않고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도 채용하지 않도록 '가축분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2023.12.)하였다.
- 이처럼 신기술을 접목한 정화처리시설 확대를 통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악취로 인한 국민 생활불편을 해소하였다.



중수도시설 운영 관리주체 변경 및 설치기준 완화

현 황 | 경상북도 환경부 | **개 선**

- 개발사업 시행자는 「물재이용법」에 따라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 하지만 설치된 중수도 시설의 활용이 미흡하고 소규모 개발사업에도 중수도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해야 하므로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개발사업 중수도 운영자를 개발사업 시행자와 관할 지자체 등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물재이용법」 개정을 추진(2024.12.)하여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이로써 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중수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풍력발전 사업 주민 참여 투자 한도액 상향

현 황 | 강원특별자치도 금융위원회 | **개 선**

-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주민 참여를 통한 투자가 가능하다.
- 다만 산업부 지침에는 주민의 투자 상한금액이 1천만 원으로 규정되었으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에는 같은 차입자에 대한 연계투자 금액이 상한액 500만 원으로 규정되어 개인의 실질적 투자금액을 제한하고 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2024.1.~)을 통해 지역주민의 근로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투자 한도금액을 1천만 원으로 상향 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하여 연계투자 금액을 4천만 원까지 인정하기로 하였다.
- 지역산업 발전과 함께 인구수가 적은 지역의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 주민 소득 증대의 기회를 제공하며,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지역주민의 협조가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금융모델을 창출하는 효과를 기대하게 되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사례

PART III

최종 선정된 17건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는
덩어리규제, 그림자규제, 행태규제를 개선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행안부와 시·도의 교차심사, 전문가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지역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규제혁신의 과정들이 담겨있습니다.



- 1. 대상(국무총리상)
  충청북도 청주시
- 2. 최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
  경기도 안양시, 울산광역시
- 3.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
  경기도 고양시,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시 도봉구,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
- 4. 장려상(행정안전부장관상)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 전라남도 광양시, 충청북도



대 상
(국무총리상)

충청북도 청주시

#기업 애로 해소

도로점용허가 대상구역별 통합으로 **행정절차 부담 완화**

Brief Report

현황

도시가스 배관공사 관련 261건의 도로점용허가 업무로 인한 과도한 시간 및 인력 투입 부담

↓

개선

해당기업과의 협의 아래 도로점용허가 4개 구역으로 통합, 이에 대한 변경 허가를 승인함으로써 허가대상건수가 261건에서 4건으로 줄어들어 기업의 업무 부담과 행정업무량이 크게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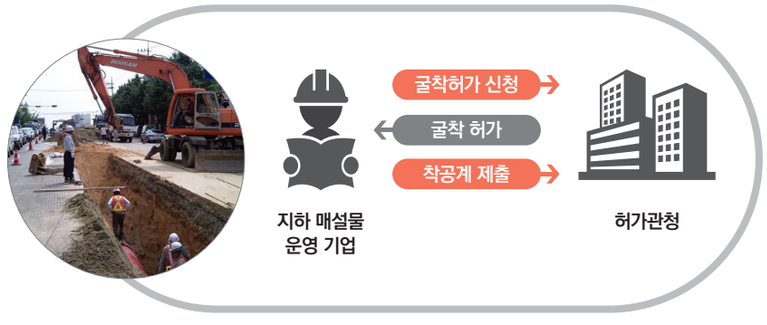
청주시 CHEONGJU CITY

규제개선 배경

→ 수백 건의 도로점용허가 관련 과도한 업무에 기업 고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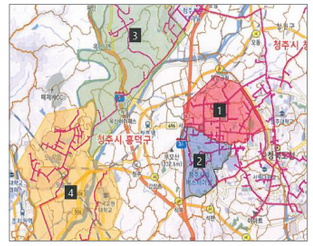
청주시의 도시가스 공급기업인 충청에너지서비스는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위해 흥덕구 관내 도로에 대해 개별 도로점용(굴착) 허가를 득하였다. 하지만 도로점용(영구점용)의 허가 건수가 무려 261건에 달함에 따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즉 개별 도로점용허가 위치 등의 허가사항 파악, 도로점용허가의 만기기간이 다른 연간 30~40건의 만기 건에 대한 연장 대상 파악, 그리고 연장허가를 위한 신청 절차에 이르기까지 과도한 업무에 부담을 느껴왔다. 그 결과 관로거리 50~100m 미만의 소규모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누락되는 등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그 외에도 261건의 개별고지서에 따른 분류작업과 점용료 납부업무 등에도 지나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어 기업 운영에 불편을 호소하였다.

도로점용(굴착) 허가 신청 절차



규제개선 과정

→ 도로점용허가 구역을 4개 구역으로 통합



구역별 통합 배관 위치도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흥덕구청의 해법은 '도로점용허가 통합'이었다.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관로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므로 여러 건의 도로점용허가 건에 대해 통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기업에 제안을 한 뒤 발 빠르게 통합 방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였다. 먼저 해당기업은 구역별 관로를 작성하고 흥덕구청은 도로점용허가 허가대장 추출 등의 행정지원을 담당하며 관리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시가스관로 매설구간을 동별로 분리하는 것이 쉽지 않아 최대한 여러 동을 통합하도록 제안하기도 하였다. 지속적인 논의 끝에 산업단지(옥산, 오송) 및 기존 도심지역 대로를 중심으로 한 4개 구역으로 최종적인 협의를 마쳤다. 이어 5개월에 걸쳐 통합구역에 따른 도면(관망도)의 작성을 완료한 후 2023년 4월 도로점용허가 4개 구역으로 변경 허가를 승인함으로써 긴 통합프로젝트를 마무리지을 수 있었다.

결과 및 기대효과

→ 허가대상건수 98.5% 감소로 기업·행정업무 부담 완화

도로점용허가 대상 261건을 구역별로 통합하여 4건으로 변경 허가함으로써 허가대상건수가 기존 대비 약 98.5%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기업의 점용료 납부와 관리업무를 줄여주는 것은 물론 행정기관 역시 우편요금 감소 및 고지서 발송 등의 행정업무량이 감소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또한 기존에 소액 감면 대상에 점용료를 부과하게 됨으로써 세수 증대의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매년 30~40건에 이르는 연장허가 신청건수도 10년에 4건으로 대폭 감소하여 연장허가 절차 등 기업의 업무 부담도 크게 완화되었다. 이를 계기로 청주시는 관로 및 전주 등 한국전력공사 시설물에 대해서도 협의를 거쳐 구역별 도로점용 허가 통합을 추진 중에 있다. 청주시는 이번 사례가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어 업무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청에너지서비스 영구도로 점용 허가현황(2018~2022)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허가건수	181	27	32	38	29	55

변화의 리더!
규제혁신을 말하다

Leader's Interview

고지서 분류업무가 261건에서 4건으로!
"업무효율 극대화"



대상 : 정무룡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건설과

Q 도로점용허가 관련, 기업과 행정업무에 발생한 문제점은?

A 도시가스공급기업인 A사는 청주시 흥덕구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260여 건의 도로영구점용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도로영구점용허가로 인하여 허가사항의 파악 등 도로점용허가 업무를 관리하는 데 따른 어려움이 많아 기업 운영에 상당한 불편을 격고 있었습니다. 또한 매년 30~40건가량 발생하는 도로영구점용허가 만기 건에 대한 연장허가업무 처리 등은 업무효율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매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고지서를 발행하고 또 고지서를 분류하는 일부터 도로점용연장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것까지 기업뿐 아니라 행정업무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Q 도로점용허가 통합을 시도한 배경과 통합의 기준은?

A 매년 반복되고 있는 도로점용허가라는 업무로 인해서 점점 악화되는 기업의 업무효율과 행정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도로점용허가 통합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고지서 분류와 연장허가라는 기업 규제를 실질적으로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던 중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관로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활용하면 개별도로점용 허가 건에 대하여 통합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고 즉시 해당기업에 도로점용허가 통합 제안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도로점용허가 통합 기준을 도심지역은 동별로 기준을 잡았고 읍면지역은 기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준을 잡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심지역 관로 동별 분리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주요간선도로(직지대로)를 기준으로 하여 통합구역을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Q 규제개선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한 부분은?

A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행정기관과 기업 모두에게 있어 도로점용허가 연장허가를 비롯하여 기존의 허가구역 관리,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서 분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향후에 기존 도로점용허가 변경허가를 할 때도 편리해야 하며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개발 등 대단위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신규 허가번호를 부여하여도 효율성이 저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통합구역을 설정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Q 규제개선 이후 나타난 성과와 향후 기대효과는?

A 규제개선 이후에 기업의 경우 매년 정기분 고지서 분류업무가 261건에서 4건으로 크게 줄었고 매년 30~40건이었던 도로점용 연장허가 업무도 10년 4건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행정기관 역시 마찬가지로 단순 반복업무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도로점용료 정기분고지서 발생비용 절감에 따라 행정기관 또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효율은 높이고 비용은 낮춘 셈이지요. 이 사례는 향후 유사 통신관로 및 전력관로 매설 등 도로점용 굴착허가 업무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소액 1만원 미만 감면 허가 건 도로점용료 부과는 지방세수의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소감 한 마디!

처음부터 규제개선 업무를 위해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28년 동안 시설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던 중에 단순 반복업무로 인한 기업 및 업무담당자들의 과도한 행정업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에 대해 늘 고심해왔던 문제였습니다. 작은 개선의 씨앗이 큰 변화와 이익을 가져온 것에 자신도 놀라웠고, 경진대회 본선에 참가한 것만으로도 뜻깊었는데 대상을 수상하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중간관리자인 팀장의 경우 업무 담당자 시절에 힘들고 불편했던 업무가 지금도 똑같은지 확인해 본다면 법령 및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아도 개선할 수 있는 업무가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우수상
(행정안전부장관상)

경기도 안양시

#기업 애로 해소

「모래주머니 입지규제 해소」로 중소 제조기업을 살리다

Brief Report

현 황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융·복합제품 판매금지 규정과 소규모 공장의 관내이전 시 기존 공장의 등록을 취소한 후 신규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으로 인해 기업경쟁력 약화

↓

개 선

4년간의 건의와 소통 끝에 부대시설 판매 품목 범위를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과 결합된 제품으로까지 확대하며, 소규모 공장의 등록변경 대상 항목에 '공장소재지'를 추가하는 시행규칙 개정

스마트안양

규제개선 배경

→ 지식산업센터 입지규제 및 관내이전 변경등록의 불합리성

안양시는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 규제를 발굴하면서 크게 2가지 사안에 주목하였다. 첫 번째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입지규제이다. 입주 제조기업은 필요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부대시설 중 하나인 판매장에는 자사제품의 판매만 허용하고 타사제품이 포함된 융·복합 제품은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안양시는 이에 대해 빠른 변화를 포용하지 못한 입지규제라고 판단하였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은 융·복합심화이며 IoT기술을 타 사제품에 접목시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상품이 IoT융복합제품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공장의 관내이전 시 변경등록 관련 규제이다. 면적 5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은 변경등록 항목에 '공장소재지'가 없어 관내이전 시에도 변경등록이 불가능하며 기존 공장의 등록을 취소한 후 신규등록을 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전이 잦은 소규모 공장은 등록면허세의 재납부, 공장등록증상 짧게 기록되는 운영기간으로 인한 입찰 참여의 불리 등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었다.

IoT융복합제품 생산·판매기업에 대한 규제



규제개선 과정

→ 칠전팔기, 쉼 없는 소통으로 4년만에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

규제개선의 시작은 언제나 현장이었다. 2018년 1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규제를 발굴한 이후 끊임없이 현장의 기업 및 중앙부처들과 소통하며 답을 찾아나갔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2022년 3월에 열린 안양시-행정안전부 규제혁신 현장협의회를 계기로 규제개선의 추진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5월에는 취소 후 신규등록이 아닌 변경등록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소규모 공장의 등록변경 대상 항목에 공장소재지를 추가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이라는 산업통상자원부 수용의견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7월에는 '공장의 부대시설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의 범위를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과 결합된 제품으로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이 입법예고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로써 2023년 5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와 제12조(공장등록신청서)가 4년여의 노력 끝에 개정되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안양시-행정안전부 규제혁신 현장협의회

결과 및 기대효과

→ 융·복합기업,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

융·복합의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의 세계시장규모는 1,578조 원에 이르며 지난 10년간 4차산업혁명 기술분야의 특허·출원·등록건수는 232,533건을 기록했다. 이번 입지규제 개선은 전국 1,480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융·복합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업계에 시너지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내이전 변경등록 규제개선을 통해 기존 5단계에 이르는 불합리한 등록절차가 2단계로 간소화됨으로써 전국 약 8만 개 소규모 제조기업(공장)의 행정부담이 크게 해소되었다. 이는 등록면허세 이중납부 방지, 입찰 시 지역 내 기업운영이력 유지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되는 효과로 이어진다. 안양시는 이번 규제개선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 활력을 지원하는 밑거름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화의 리더!
규제혁신을 말하다

Leader's Interview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융·복합기술 성장동력 마련"



최우수상 : 권구현
경기도 안양시 정책기획과

Q 융·복합기업 입지규제의 문제점과 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A 안양은 2018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지식산업센터 입지규제로 애로를 겪고 있던 기업을 만났습니다. 자사의 IoT 기술을 타사 제품에 융합한 융·복합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제조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업집적법령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기업은 자사 제품만 판매할 수 있고 타사 제품이 포함된 융·복합 제품은 판매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업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지식산업센터에서 퇴거하든지 추가로 자금을 들여서 판매장으로 이용할 별도의 사업장을 얻는 것뿐이었습니다. 영세한 중소기업으로서는 생사의 위기에 빠진 것이죠. 안양시는 이 규제가 빠른 산업환경의 변화를 포용하지 못한 입지규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은 융·복합 심화이고 현재는 물론 앞으로 수없이 많은 융·복합 기술이 창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Q 융·복합 심화의 현황과 중요성에 대해 소개한다면?

A 4차산업혁명의 핵심은 융·복합의 심화입니다. 스마트시계, 스마트조명 등 스마트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는 제품이 거의 없지요. IoT(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전체 특허출원을 보면 2012년 6,710건에서 2021년 24,732건으로 10년간 3.7배가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특허출원이 1.2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3배 차이입니다. 특히 매년 11.5%씩 증가하던 이 분야 특허출원이 2017년을 기점으로 21%씩 증가하고 있어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융·복합의 핵심 기술인 IoT사물인터넷만 해도 세계시장이 1,578조 규모입니다. 앞으로도 융·복합의 심화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Q 입지규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과 해결방법은?

A 2018년부터 계속된 건의에 대한 회신은 매번 '수용불가'였습니다. 그러나 안양시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는 기업과의 소통으로 대응논리를 보강하면서 건의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칠전팔기의 정신으로 임하다 보니 2022년 행안부 규제혁신 현장협의회에서 드디어 안건으로 다루어지게 되었고 이는 규제개선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규제개선은 급물살을 탔고 그 결과 마침내 4년만에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던 2가지 입지규제가 동시에 개선된 것입니다.

Q 규제 개선을 통해 기대되는 개선효과는?

A 이제 전국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이 스마트 시계, 스마트 조명과 같은 융·복합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소규모 제조기업이 불편 없이 관내에서 변경등록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기존 5단계에서 2단계로 대폭 줄었고 등록면허세 이중납부를 예방하며 각종 입찰시 중요한 지역 내 기업 운영이력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융·복합 기술의 성장 기반을 마련했고 기업의 행정부담도 대폭 해소되었습니다. 국가 경쟁력의 중심인 지역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에서 마음 편히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안양시가 함께 응원해드립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소감 한 마디!

안양시는 명실상부 규제혁신의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안양시의 차별성은 무엇보다 규제혁신에 대한 리더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입니다. 기초 지자체로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최고 수준의 직원 인센티브를 시행하는 등 탄탄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이를 동력으로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규제혁신에 진심입니다. 규제개혁팀이 직접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다년간 우수사례를 창출하는 전국 유일 지자체입니다. 안양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까요? 규제혁신이 기업과 국민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며 나아가서는 국가를 살리는 절실한 미션이라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난한 과정 속에서도 칠전팔기의 정신으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적극행정·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최대호 시장님, 정소영 팀장님, 안양시 전 직원, 그리고 지역현장과 중앙의 든든한 가교 역할로 큰 힘이 되어주시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우수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울산광역시

#기업 애로 해소
#지역경제 활력제고

Brief Report

현황

노후 산업단지 재개발 시 관련 규정을 모두 소급 적용해야 하는 난제로 인해 현대차의 전기차 신공장 건설계획이 2~3년 이상 지연 문제 발생

↓

개선

전담공무원 파견 및 행정지원을 통해 부지공사 및 허가기간을 10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

울산광역시

34년만의 신공장
최단기간 허가 및 추가 투자유치

규제개선 배경

→ 노후 국가산단에 대규모 재투자 시 관련 규정 소급 적용

2022년 7월 현대차는 2조 3천억 원 규모의 울산 전기차 신공장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개발이 완료된 노후 국가산업단지에 대규모 재투자하는 국내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건설계획은 곧 난제에 부딪히고 말았다. 신공장 부지는 과거에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 관련법의 시행 전에 준공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공장 내 재건축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시에는 관련 규정을 모두 소급해서 적용해야 하는 등 사실상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수준으로 각종 영향평가를 비롯한 매우 복잡한 공정계획을 수행해야만 했다. 결국 2025년 말로 계획된 전기차의 양산목표는 2~3년 이상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처럼 국가산단의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로 인해 치열한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현대차로서는 투자계획에 대한 재검토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현대차 울산공장





규제개선 과정

→ 전방위적 업무지원으로 사업기간 2년 이상 단축

울산광역시는 발 빠르게 현대차지원팀을 신설하고 2022년 9월 전담공무원을 파견하여 상시 현장 행정지원에 들어갔다. 복잡한 인·허가 변수에 시행착오 없이 대응할 민간전문가는 사실상 없었기 때문이다. 먼저 최단기간 허가를 위해 관련법 유권해석 및 기술검토를 통해 총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허가기관-현대차-설계사-시공사 통합컨설팅'을 실시하였다. 또한 파견공무원이 허가부서(기관) 협의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법률자문 및 행정지도를 통해 신속한 업무처리를 지원하였다. 그 결과 부지조성공사, 건축설계, 각종 영향평가 등 개별법에 따른 별건 허가를 다중으로 분리 추진함으로써 사업기간을 2년 이상 앞당겼으며 2023년 9월에는 바로 신공장의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결과 및 기대효과

→ 경제효과 30조 원, 국내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 지원

현대차의 전기차 신공장 생산계획은 연간 20만 대에서 최대 25만 대에 이른다. 산술적으로 계산할 경우 이번 업무지원을 통해 사업기간이 2년 단축됨으로써 약 30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이 치열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선점하기 위한 경쟁력을 한발 앞서 갖추게 된 셈이다. 또한 좌초될 위기에 처했던 2건의 신규투자 서비스시설 건축사업을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규제개선을 통해 재추진함으로써, 수도권 외 지역 최초의 자동차 관련 복합 체험·서비스시설 등을 성공적으로 투자 유치하는 성과도 거두게 되었다. 울산광역시는 이번 선례를 필두로 앞으로도 투자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투자하기 좋은 울산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Leader's Interview

공무원과 기업이 함께 완성한 “전기차 신공장 투자유치”



최우수상 : 최금석

울산광역시 미래전략본부
공약추진단

Q 전기차 신공장 프로젝트의 규모를 간단히 소개한다면?

A 울산시 북구 현대차 울산공장 내에 부지면적 약 60만㎡, 건축연면적 약 33만㎡, 사업비 2.3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초대형 전기차 전용 생산공장입니다. 현대차가 2022년 7월 발표한 울산 전기차 신공장 건설은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노후 국가산업단지에 대규모로 재투자하는 사례로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Q 신공장 건설과정의 주요 문제점과 추진한 해결방안은?

A 신공장 부지는 과거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 주로 1990년대 신설된 대규모 개발사업 시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아 재개발 시 모두 소급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공장 내 재건축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수준의 각종 영향평가 수행 및 허가 기간(최소 3년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인허가 변수에 시행착오 없이 대응할 민간 전문가는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울산시는 현장에서 공무원이 인허가 컨설팅, 허가 대행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무원을 현대자동차에 직접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Q 사업기간 단축으로 예상되는 경제효과는?

A 신공장은 연간 20만대(최대 25만대)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 모델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사업기간이 2년 단축됨에 따라 2년간 약 30조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개선 추진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극복방법은?

A 치열한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해 현대차가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필요한 모든 규정들을 합법적으로 준수해야만 공장 착공이 가능했으므로 최초 계획수립의 오류에 따라 투자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까지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장 파견 공무원이 사업계획 전체에 대한 법률 컨설팅과 행정지도를 수행하였고 시행착오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건축 조건사항 완성 후 의제허가를 진행하는 방식이 아닌, 모든 인허가 규정들을 사전 분석하여 개별법에 따른 별건 허가를 다중으로 분리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60만㎥ 토공작업 등 부지조성 사업을 포함하여 최소 3년 이상이 필요한 사업기간을 10개월로 극단적으로 단축하게 된 것입니다.

Q 이번 규제개선이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A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인허가 부서 공무원들의 업무미숙, 자의적 해석, 소극적 행정 등은 제도적 규제는 아니지만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로서 기업투자를 좌절시키는 가장 힘든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적 방법을 울산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성과를 낸 것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소감 한 마디!

규제혁신은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지자체 간의 경쟁이 아닌 사실상 국가 간의 경쟁입니다. 기업지원에 진심인 우리 울산시의 사례를 타 지자체에 소개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 수상까지 하게 되어 더욱 영광입니다. 향후 울산시 기업현장지원팀장으로서 현대차 추가 투자, 삼성SDI 배터리 신공장 투자 등 대규모 사업을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수상
(행정안전부장관상)

경기도 고양시

#기업 애로 해소

불가했던 개발제한구역 공장 제조시설, **틈새 규정으로 기업 애로사항 해결**

Brief Report

현황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해 공장증축이 절실했지만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인해 인허가 불가

↓

개선

유연한 법령 해석으로 틈새 규정을 적용하고 제조시설면적 재배치를 통해 제조 가능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공장증축 관련 오래된 애로사항 해결

고양특례시

규제개선 배경

→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제조장비 증설 불가



고양시에는 과밀억제권역(100%), 개발제한구역(42.1%), 군사보호구역(35.2%) 등 각종 중첩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걸림돌이 되어왔다. 그 중 하나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D기업의 경우였다. D기업은 2012년부터 공장을 증설하고자 했으나 과밀억제권역과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로 인해 오래도록 인허가에 곤란을 겪고 있었다. 2020년에도 공장증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소관부서에서는 증축된 공장면적을 창고 등 부대시설로만 사용할 수 있고 제조장비의 증설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코로나19로 기업운영이 어려웠던 D기업은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해 제조시설을 확대하려면 공장증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고양시는 기업 상담을 통해 좀더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D기업 공장시설 견학과 기업애로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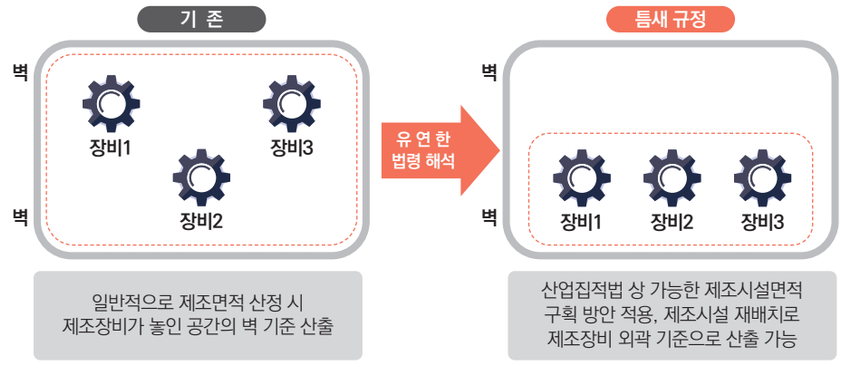




규제개선 과정

→ 틈새규정을 발굴, 제조시설면적 재배치로 공간 확보

2020년 6월부터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신청 관련 협의를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D기업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창고가 아닌 제조시설의 확장이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전반적인 기업애로 상황을 검토한 고양시는 지속적인 관련부서 실무협의를 통해 법령의 유연한 해석으로 틈새규정을 발굴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었다. 즉 제조면적은 일반적으로 제조장비의 바닥 벽면을 기준으로 산출하지만, 「산업집적법」상 가능한 제조시설면적 구획방안을 적용하여 제조장비 외곽을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제조시설면적 재배치를 통해 제조 가능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발상의 전환으로 해법을 찾아낸 고양시는 다시 신속하게 움직였다. 경기도 공장물량 담당부서와 긴급 협의하고 부서 간 실무협의를 거쳐 마침내 2021년 2월 공장증설승인을 처리하였다.



결과 및 기대효과

→ 기업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이로써 D기업은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였다. 제조 가능 공간이 확대됨에 따라 2020년 91억 원이었던 매출은 2022년에 약 163억 원으로 늘어났고 2023년에는 약 27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식 제조시설을 갖추고 온라인 판로 개척에 매진한 덕분이다. 이는 기업의 매출 증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기업과 고양시가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좋은 사례를 보여주었다. 고양시는 대도시 주변의 개발제한 구역에 이번 사례를 적용할 경우 도심 내 부족한 개발가용지를 확보하고 기업의 이전비용 지출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변화의 리더!
규제혁신을 말하다

Leader's Interview

제조시설면적 재배치를 통해 “제조 가능 공간을 충분히 확보”



우수상 : 차호원
경기도 고양시 기업지원과

Q 해당기업의 공장증축허가에 주목하게 된 배경은?

A D기업이 공장증축허가를 신청할 때만 해도 당시 소관부서인 건축과에서는 증축된 공장면적을 창고 등 부대시설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제조시설을 증설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D기업의 대표로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요. 코로나 19로 인해 기업 운영이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D기업의 입장에서는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공장에 제조시설을 확대해야만 했습니다. 고양시 기업지원과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실을 인지하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Q 규제의 벽을 넘기 위해 기업이 시도해온 과정과 해결방법은?

A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고양시는 기업과 함께 긴밀한 상담을 하면서 돌파구를 찾아나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D기업의 애로상황을 검토하였고 기업이 창고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시설을 확장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양시는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법령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 속에서 틈새 규정을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주목한 것은 바로 제조면적이었습니다. 즉 「산업집적법」상 가능한 제조시설면적 구획방안을 적용하여 제조장비 외곽을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으므로 제조시설면적 재배치를 통해 제조 가능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해결방안을 발견한 즉시 고양시는 경기도 공장물량 담당부서, 부서 간 실무협의 등을 거쳐 관련업무를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Q 틈새규정 적용으로 증축한 이후 기업의 성과가 있다면?

A D기업은 오래도록 풀지 못한 난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조 가능 공간이 늘어나면서 D기업은 현대식 제조시설을 갖추고 온라인 판로 개척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매출도 빠르게 올라서 2020년 91억 원이었던 매출이 2023년에는 약 270억 원으로 크게 상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이 성장하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그것은 결국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결국 기업과 고양시가 함께 성장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지요.

Q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과 지역에 발생하는 직간접적 효과는?

A 그동안 과밀억제권역인 고양시에서는 제조시설면적 500㎡ 이상의 제조공장은 불가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조시설 증설이 가능하다는 규제개선 사례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는 지역 기업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되어주었습니다. 고양시뿐 아니라 대도시 주변의 개발제한 구역에 이번 사례를 적용한다면 도심 내 부족한 개발 가용지를 확보하고 기업의 이전비용 지출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소감 한 마디!

경진대회 발표에 참가하는 것도 의미 있었는데 수상의 영광까지 안게 되었으니 개인적으로도 고양시에도 매우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진대회를 통해 공유된 사례들은 각 지자체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적지 않은 도움이 되어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공무원들이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고 업무에 적용함으로써 관행적인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법 테두리 내에서 적극적인 업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수상
(행정안전부장관상)

경상남도

#기업 애로 해소

수출용 중차량 방산물자의 운행제한 규제완화

Brief Report

현 황

과도한 제한차량 운행허가 기준으로 방산업체의 수출용 중차량의 적기 납품에 애로

↓

개 선

토목구조전문가, 행안부, 창원시, 국토부, 규제혁신위원, 경찰청, 방산업체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신속한 협의 아래 축중량 제한기준 완화, 낮시간대 운행 허가, 허가기간 연장 등 실질적 개정안 마련

경상남도 GYEONGNAM

규제개선 배경

→ 수출은 증가하지만 도로운행허가 취득이 어려운 방산업체

K-방산사업이 활황을 맞으면서 K9자주포(43톤), K10장갑차(41톤) 등의 수출 중량물의 운송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운행허가 취득도 2023년에 46대에서 2024년에는 109대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수출차량 운행을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에 별도의 운행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도로법」에서는 차량 제원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총중량 40톤 이상 차량의 운행허가 시간은 심야시간대로 제한하고 축하중 12톤 초과차량은 운행이 불가능하다. 또한 국토부 운행제한 규정의 허가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실제로는 최대 3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수출이 증가하는 방산업체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기업은 비정기적인 선박 일정을 맞추려면 낮시간대의 운행과 축하중 12톤이 초과하는 견인차량을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도로관리청의 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기업은 적기 수출을 위한 운송에 차질을 빚고 있었고, 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기준적용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방산업체의 허가 관련 애로사항

허가 시간	심야시간(밤12~6시)에만 운행 허용
허가 서류	구조물(교량) 통과하중 계산서 산출에 많은 시간과 비용 소요
허가 기간	최대 3개월로 동일노선에 반복적 허가신청 요구

규제개선 과정

→ 운행허가기간 연장, 낮시간 운행허가 완화


도·창원시·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담회(3.30.)

2023년 3월 경상남도는 창원시, 방산업체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수출용 무기체계 육상운송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개선논의를 진행하였다. 4월에는 제4차 지방규제혁신TF회의에 방산물자 차량을 운행제한 예외차량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건을 제출하였다. 또한 행안부 주재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허가기간 완화, 경찰차 호송 협조, 주요노선 지정, 낮시간대 운행 등의 대안도 논의하였다. 도 주관 관계기관협의에서는 2개 이상의 축으로 하중을 분산하는 저상트레일러(로우베드)의 허가에 대한 안건을 다루기도 했다. 숨가쁜 노력 끝에 경상남도는 제2차·제3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에서 긍정적인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토목구조전문가·규제혁신위원·행안부·창원시·기업이 한 자리에 모인 수출노선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이어 8월에 개최된 제4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수출용 중차량 방산물자 운행제한 완화' 개선안이 수용되면서 규제개선의 여정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다.

결과 및 기대효과

→ 2024년 매출 4조 원, 고용창출 326명으로 증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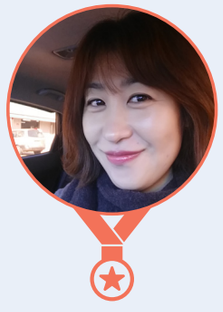
개선된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먼저 특정노선을 반복운행하는 제한차량의 운행허가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다. 또한 축중량 제한기준을 개선하여 12톤 이상도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혼잡시간을 제외한 낮시간 운행이 가능하도록 운행허가 내부기준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 개정안은 10월 수출부터 적용하도록 하였고, 실제로 방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0월 23일 낮시간대에 제3공장에서 마산 제4부두까지 로우베드를 이용하여 K9전차 18대를 선적할 수 있었다. 수출의 걸림돌이었던 규제가 해소됨으로써 방산물자의 수출은 날개를 달기 시작했다. 매출은 2023년 2조 원에서 2024년에는 4조 원으로 대폭 증가되며 그로 인한 고용창출은 2024년 326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규제개선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변화의 리더!
규제혁신을 말하다

Leader's Interview

중차량 방산물자 운행제한 완화로 "적기수출의 날개를 단 K-방산산업"



우수상 : 이희영

경상남도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Q 방산물자 운행제한 규정에서 개선할 점은?

A 국토교통부의 제한차량 운행허가 지침에는 축하중 10톤 및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일지라도 도로관리청에서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 등 관련 제출서류를 통해 도로의 안전이 확인되면 운행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도로관리청에서는 별도의 허가조건을 수립하여 축하중 10톤 이상 차량의 운행을 불허하고 운행시간도 24시부터 익일 6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경남은 세계 100대 방산기업 중 2개사가 위치한 국내 최대의 방산기업도시입니다. 40톤이 넘는 방산물자를 폴란드 등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주간시간대 운송을 통해 비정기적인 선박 일정을 맞추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 규정으로 수출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경상남도에서는 창원시와 협의를 통해 운송 시간을 22시부터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제안하였지만 사실상 2시간을 확대하여도 실질적인 규제 해소를 체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Q 규제개선 추진과정에서 주목할 점과 개선된 내용은?

A 기업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출·퇴근시간 등 혼잡시간을 피한 주간시간 운송이었습니다. 또한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 등을 통해 도로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허가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국토부·경찰청과 경남도·창원시,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노선 지정 및 주간시간대 운행 등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축중량 10톤을 초과하는 로베드를 통한 낮시간대 운송 등 시민 안전과 기업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답을 찾아나갔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토목구조 전문가, 규제개혁위원까지 참여하여 협의하며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토부의 차량 운행제한 규정(훈령)의 개정과 함께 창원시에서도 2024년 제한차량 운행허가 기준을 변경하기로 하여 방산물자의 적기 수출에 날개를 달 수 있었습니다.

Q 개선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과 가장 보람있었던 부분은?

A 운행허가를 담당하는 도로관리청과 관할 경찰청에서는 낮시간대 운행에 따른 교통체증 등 시민불편에 대한 우려와 특정 기업 봐주기식의 특혜에 대한 부담감으로 기존의 규정을 고집하였습니다. 오랜 관행과 고착화된 행정에서 공감대를 이끌어내기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업에서도 허가기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출노선에 대한 차량통행량 조사를 사전에 추진하였고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를 통해 도로의 안전을 증명하는 등 민관이 합심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마침내 10월 23일 10시부터 K9 자주포 18대를 마산 제4부두까지 안전하게 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체증 등 사전의 우려와 달리 도로를 지나가는 시민들은 높아진 K-방산의 위상에 자긍심을 표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워 응원해 주었습니다. 쉽지 않았던 규제개선 추진과정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Q 규제개선을 통해 기대되는 기업 및 지역의 경제효과는?

A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등 방산물자 수출물량은 올해 46대에서 2024년 109대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매출액 또한 2조 원에서 내년 4조 원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로 인해 326명의 고용창출이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소감 한 마디!

수출용 중차량 방산물자 운행제한 완화를 위해 긴 여정을 함께한 행안부·국토부와 창원시 등 관계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여 중차량 운행제한 규정의 개정을 이끌어 내기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산업현장에서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애로 해소의 실마리를 찾는다는 것이 녹록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경남도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2024년 창원시의 관련 규정 개정에도 지금까지의 논의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우수상
(행정안전부장관상)

대구광역시

#기업 애로 해소

Brief Report

현황

산학연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이중 입주승인 및 비일률적인 양도가격 제한기간으로 민원 발생

↓

개선

지속적인 혁신도시법 개정을 추진하여 부지 양도가격 제한기간을 무기한에서 '사용승인 후 10년'으로 완화하고, 동일 건에 대한 기업의 입주신청을 2회에서 1회로 간소화하여 혁신도시 활성화 기틀 마련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중복규제 완화

규제개선 배경

→ 중복 입주신청 및 비일률적인 부지 양도가격 제한기간

그동안 대구혁신도시의 일부 구역은 연구개발특구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중복 지정되어 각 개별법에 따라 관리되어 왔다. 그런데 2015년 「혁신도시법」의 개정과 함께 입주승인, 양도제한이라는 입주관리 규정이 신설되었고, 2019년에는 개발지구 중복 지정 시 혁신도시법과 개별법에 의한 입주규정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공문이 시달되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크게 2가지의 불합리한 고충을 떠안게 되었다. 먼저 동일지역의 기업에게 입주신청을 이중 적용함으로써 각 특별법에 따른 입주관리 규정만 적용받는 다른 지역의 연구개발특구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비해 차별적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점이다. 또한 법령마다 부지(토지) 양도가격 제한기간이 서로 다른 것도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즉 「혁신도시법」에 따른 재산권 제한규정과 동일지역에서 적용받는 양도제한 기간이 달라 민원이 발생하고 법적 분쟁의 우려까지 낳고 있다.

대구혁신도시 배치도



규제개선 과정

→ 양도제한기간 10년, 입주승인 행정절차 간소화로 개선

기업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대구광역시는 2019년 이후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해 입주관리 중복규제를 개선해줄 것을 건의해 왔다. 대구광역시가 제안한 개정안은 입주승인의 경우 중복지정된 지구는 각 개별법을 우선 적용하고 양도가격 제한기간은 10년 또는 개별법을 우선 적용해줄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대정부 질의를 통한 건의에서 개정 곤란이라는 답변만을 받았다. 지속적인 노력 끝에 2022년 5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규제혁신 전문위원회에서 이중규제·과도한 규제에 대한 「혁신도시법」 개정을 건의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개선의 물꼬가 트이게 되었다. 2023년 4월에는 행정안전부의 중앙규제 개선과제로 제출하여 일부 수용이 결정되었다. 즉 양도제한은 '사용승인 후 10년'으로 변경하되 입주 중복승인의 경우 법률별 입주승인 주체 및 요건이 다르므로 해당 시·도에서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법령별 양도가격 제한기간

구분	혁신도시법	연구개발특구법	첨단의료단지법
용도지구	산·학·연 클러스터	산업시설 구역	첨단의료복합단지
양도가격 제한기간	(기존) 영구 제한 (변경) 사용승인 후 10년	공장설립 등의 완료 (사업개시)신고 후 5년 이내	건물사용 승인 전 또는 후 10년간

결과 및 기대효과

→ 입주기업 재산권 보호와 행정편의 제공으로 혁신도시 활성화 기대

부지 양도가격 제한기간이 무기한에서 사용승인 후 10년으로 완화되면서 기업은 재산권을 보호받고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부지를 담보로 한 자금 확보도 가능하게 되었다. 대구광역시는 2021년 7월부터 이미 첨복단지 입주승인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이번 규제개선을 토대로 전국 혁신도시에서 개발지구 중복지정시 간소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여 입주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혁신도시 입주기업은 2023년 6월 기준 대구 157개, 전국 3,415개에 이른다. 이중규제의 완화는 입주기업뿐 아니라 신규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간 자유로운 거래로 장기 미개발 용지가 실수요자에게 유연하게 공급되어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변화의 리더!
규제혁신을 말하다

Leader's Interview

양도제한을 사용승인 후 “10년으로 변경하여 혁신도시 활성화”



우수상 : 최보경

대구광역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
기업지원과

Q 혁신도시법 개정과 함께 드러난 문제점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A 문제가 된 신설 규정은 ‘부지 양도제한’과 ‘이중 입주승인’입니다. 우선 부지 양도제한 규정을 살펴보면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입주기업은 부지를 양도할 때 부지 취득가격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에 취득세 등 부지 매입에 든 비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산업용지는 분양가가 저렴해 투기를 막기 위한 양도제한 규정이 있는데 산업단지는 5년, 첨단의료복합단지는 10년이에요. 그런데 혁신도시는 영구히 제한하여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합니다. 또한 「혁신도시법」은 산학연 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복지정을 허용하고 있는데 대구시는 혁신도시에 2009년 첨단의료복합단지, 2011년 연구개발특구(의료R&D지구)를 중복 지정하였습니다. 이전에는 각 개별법에 따른 ‘입주승인’과 ‘부지 양도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혁신도시법」이 개정되면서 입주관리규정이 신설되어 입주승인과 부지 양도제한 규정을 이중으로 적용받게 되는 차별적 규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Q 중복규제가 산학연클러스터의 분양률, 입주율 등에 미친 영향은?

A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6월 기준 전국 평균 분양률은 79%, 입주율은 47%입니다. 반면 대구시의 분양률은 81%, 입주율은 74%로 꽤 높은데요. 대구시는 「혁신도시법」 개정 이전에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기한 양도가격 제한 규정을 알았으면 안들어왔다고 토로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시고, 차후 거래가 안될까 봐 입주를 보류하시거나 비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팔고 나가신 기업도 있습니다. 미분양용지의 투자유치에도 어려움이 많구요.

Q 중복규제가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끼친 피해는?

A 공공용지를 조성하여 분양받은 기업이 건물을 짓고 활발한 기업활동을 하여 개발지구가 활성화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양도제한 규정이 있지만 제한기간이 끝나면 시세대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들은 영원히 매입가격정도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세와의 차액만큼 재산상 손실이 발생합니다. 또 기업활동을 하다 보면 신제품 개발, 수출확대, 시장 개척, 인력 고용 등 자금이 수시로 필요한데 당장 자금확보도 어려워져요. 은행에서 자산재평가를 통해 대출한도를 결정하는데 부지가격에 담보가치가 없어 추가대출이 제한되니까요. 또 입주승인 규정을 두 번 받아야 하니 처리기간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Q 규제개선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한 부분은?

A 혁신도시 규제는 전국 혁신도시에서 문제점이지만 대구시는 입주기업이 많고 중복법령 적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만 했어요. 수용여부에 대한 결정이 ‘기업재산권 보호’와 ‘투기방지’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 가치판단에 대한 부분이어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많이 노력하였습니다. 기업과 함께 지역언론사, 국회의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많은 분들께 필요성을 개진하여 지역 국회의원의 혁신도시법 개정발의와 국토부의 수용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Q 이중규제 완화를 통해 기대되는 파급효과는?

A 무엇보다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기입주한 3,415개 기업의 재산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지에 투자가치가 생김에 따라 분양을 받고도 입주하지 않은 53%의 기업과 남은 21%의 미분양 용지에도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방세 수입 증대 등 혁신도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소감 한 마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나가는 것은 빨리 해결해주길 바라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답과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과제를 계속하여 풀어야 하는 긴 인내의 과정을 겪습니다. 규제가 풀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는데 수상까지 하게 되어 기쁩니다. 규제로 인해 고생하신 많은 담당자분들을 대표하여 받은 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기업이나 시민들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시스템을 정비하고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수상
(행정안전부장관상)

대전광역시

#기업 애로 해소

물류단지개발 시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준용하여 **인허가 절차 간소화**

Brief Report

현황

민간사업자가 물류단지 개발 시 모든 인허가 절차를 직접 처리하는 과정에 평균 2~4년 소요

↓

개선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및 물류단지계획위원회를 운영하여 원스톱 행정서비스 및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1년 단축하고 물류단지개발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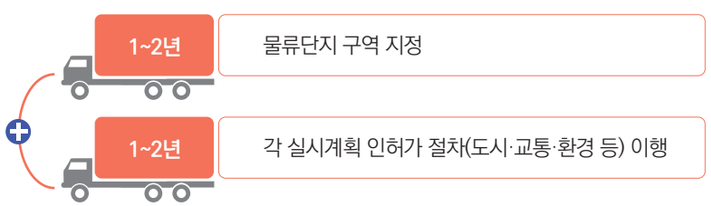
대전광역시 DAEJEON METROPOLITAN CITY

규제개선 배경

→ 2~4년 소요되는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로 공급에 차질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과 함께 택배물동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의 물동량은 2021년 30,317천톤에서 2031년 33,324천톤으로 연평균 약 1%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기업들의 생산품 보관시설, 물류시설이 부족하여 탈대전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신규물류단지의 공급이 절실해졌다. 개발가용지가 적은 대전으로서는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면적 500만㎡ 미만 물류단지를 개발하려면 「물류시설법」에 따라 물류단지 구역지정에 관한 물류정책위원회의의 심의 후 도시·교통·환경 등 각 인허가 절차의 이행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사업자가 모든 관계기관을 찾아다니면서 협의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은 물론 평균 2~4년의 행정처리 기간이 소요되어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용지를 공급하는 것이 어려웠다. 또한 입주기업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물류단지를 관리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체계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착공 전 행정처리 기간



규제개선 과정

→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전광역시는 물류단지 개발 시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준용하여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신속하게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의결을 거쳐 2023년 8월 조례를 공포하였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이다.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려면 도시계획, 환경, 건설, 교통분야 기관 등 필요한 관계기관을 찾아다녀야 했다. 하지만 교통건설국장을 센터장으로 하는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지원함에 따라 물류단지 절차문의 및 행정협의가 매우 수월해졌다. 또한 대전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물류단지계획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물류단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도시·교통·환경 등의 인허가 절차를 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하도록 하여 절차를 최소화하였다.

결과 및 기대효과

→ 기업 편의 및 물류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2012년 대비 2020년의 국내 택배물동량은 약 24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다. 대전시의 종합물류단지는 현재 2개뿐이며 더욱 가파르게 성장하는 물동량을 감안한다면 신규 물류단지의 개발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제정과 통합지원체계는 기업들의 편의와 성장에 큰 원동력이 되어줄 것으로 보인다. 인허가기간이 1년 가량 단축됨에 따라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물류단지를 공급함과 동시에 대전시에 위치한 기업들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물류단지를 찾아 다른 지역까지 가야 했던 제조업체들의 속앓이가 이번 제정을 통해 한번에 해소된 것이다. 물류단지 개발과 물류시설용지 공급이 활성화되면 생활물류 및 제조업 등의 물류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대전시는 이를 계기로 중부권 생활물류의 중심지로 거듭나 일류경제도시 도약의 발판을 다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 주요 물류시설 현황



대전종합물류단지



남대전종합물류단지

변화의 리더!
규제혁신을 말하다

Leader's Interview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물류시설 적기 공급"



우수상 : 김택정

대전광역시 교통건설국
운송주차과

Q 대전 물류시설의 현황과 기업,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A 대전은 물류단지가 2개소로 항만 등 물류 거점시설이 없지만 국토중심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택배 허브터미널 등이 대전 입지를 선호하여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 용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대전에는 우정사업본부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와 CJ대한통운 대전 허브터미널,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 로젠택배 대전물류센터 등 약 30여 개의 물류창고가 있으며, 2024년 쿠팡남대전FC 물류센터와 한진 대전 메가 허브 터미널이 운영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500㎡ 미만의 소규모 물류창고들이 주거지역에 위치하여 화물차의 도로 내 주·정차로 인한 교통통행 불편 및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Q 물류단지 개발 시 기업이 가장 힘들어하는 점은?

A 대전시 행정구역 면적은 539㎢로 이중 기개발지(면적:122㎢)와 개발불능지(390㎢)를 제외한 개발가용지가 27㎢(5%)로 신규 물류단지 대상 토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막상 찾는다 하더라도 민간사업자가 모든 관계기관을 찾아다니면서 각각의 관련법에 의한 저촉사항을 협의해야 하며, 이로 인해 보완사항이 발생하면 인허가 기간이 늘어나서 사업계획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Q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중점을 두고 추진한 부분은?

A 전자상거래 및 택배시장 성장 등 물류시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전은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의 부족으로 빠른 물류단지 개발과 부족한 개발 가용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민간의 물류단지 개발 유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와 민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불편사항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Q 규제애로 개선과정에서 힘들었던 부분과 이를 극복한 방법은?

A 대전시에 위치한 공장, 기업들의 이탈 등으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물류단지 개발 시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준용하여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의결을 거쳐 2023년 8월 공포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민간사업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려면 도시계획, 환경, 건설, 교통분야 기관 등 필요한 관계기관을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통건설국장을 센터장으로 하는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대전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물류단지계획위원회에서 물류단지개발관련 인허가 절차를 통합 심의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Q 인허가 기간의 감소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A 대전시 물류단지개발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사업을 시행하는 기업의 불편 해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물류시설용지를 적기에 공급하여 기업들의 유출 방지와 투자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소감 한 마디!

지방규제혁신과 관련하여 관련법이나 타 시·도 사례에서 절차간소화 등을 통해 시민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였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 적용하지 않았던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추진하였는데 그로 인해 상을 받게 되어 한편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다른 업무들도 시민들이 요구할 때 검토하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이 요구할 때 바로 이용할 수 있게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수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서울시 도봉구

#주민 생활 불편 해결

근린공원,
특정공원시설 규제 개혁

Brief Report

현황

특정공원 시설률 20% 초과되는 근린공원에는 운동시설의 추가 설치 불가

↓

개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여 야외운동시설 등에 대한 추가 설치가 허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공원이용 만족도 향상은 물론, 시설률 하향 조정으로 공원조성계획의 유연성 확보

도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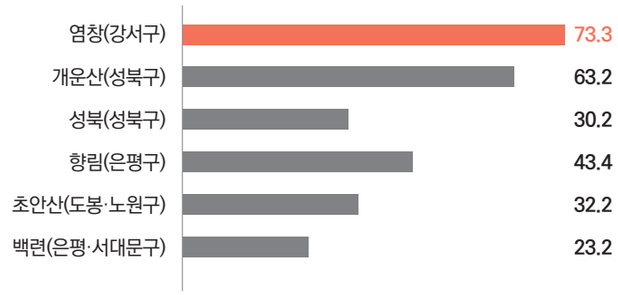
규제개선 배경

→ 실외 운동시설의 추가 설치에 대한 수요 급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특정공원 시설률 20%가 초과된 근린공원에는 운동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없다. 즉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도서관, 문화회관, 청소년수련시설, 노인복지회관, 운동시설 등의 특정공원시설은 해당공원시설 부지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공원녹지법」이 개정된 이후 17년이라는 세월이 경과된 현재, 시민들의 공원이용 수요는 많이 변화된 것이 사실이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실외 운동시설의 추가 설치에 대한 요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미 서울시의 6개 근린공원은 특정공원시설 비율이 20%를 초과한 상태이다. 서울시 도봉구는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현실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실외의 운동시설은 시민들에게 공원시설로 인식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특정공원시설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 근린공원 특정시설 비율 초과현황

(단위: %)



규제개선 과정

→ 건축물 미수반 실외 운동시설은 특정시설에서 제외

서울시 도봉구는 특정공원시설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2021년 4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토부에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수용곤란이라는 회신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에 멈추지 않고 규제개혁 신문고에 건의하고, 국토부 공원녹지법 제도개선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피력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고 25개 자치구청장 및 서울시 관계자와 긴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논의 결과 서울시는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조를 약속하였다. 마침내 2023년 2월, 약 2년여의 노력 끝에 국토부 규제개혁 심의회 안건상정을 통해 원안가결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었다. 법률개정을 추진 중인 개정안에는 '공원 내 일반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건축물 미수반의 실외 운동시설의 경우 특정시설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결과 및 기대효과

→ 시설률 하향 조정으로 공원조성계획의 유연성 확보

근린공원 특정시설은 공원 내에 건축물의 무분별한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되었다. 하지만 대다수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운동시설의 추가 설치를 규제하는 역효과를 낳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공지 확보를 통한 휴게공간의 제공이라는 근린공원의 목적과 운동시설 수요를 조화롭게 충족시키는 결과이다. 시민들의 공원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향상됨에 따라 많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개정안을 반영할 경우 특정시설률이 현격하게 개선될 수 있다. 건축물 미수반 운동시설이 특정공원시설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특정시설률 하향 조정으로 향후 공원조성계획의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개정안 반영시 특정시설률 개선현황

	개정 전	개정 후
도봉구 초안산	32.2%	6.3%
성북구 개운산	63.2%	4.8%
은평구 향림공원	43.4%	12.2%

변화의 리더!
규제혁신을 말하다

Leader's Interview

공원 내 운동시설 추가 조성으로 "주민만족도 향상"



우수상 : 김현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원여가과

Q 특정시설 설치 가능면적이 협소해진 이유는?

A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하여 근린공원이 근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근린공원 전체 총면적이 감소하였으며, 특정시설 설치 가능면적 산정은 전체 근린공원 면적에 따른 비율로 산정하기 때문에 더욱 협소해졌습니다.

Q 규제개선과정에서 특히 어려웠던 부분과 이를 극복한 방법은?

A 이는 도봉구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청 및 전국적으로도 해당되는 현안이기 때문에 다수 기관의 공감대가 필요하였으며, 따라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개정은 자치구의 권한으로는 개정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안건 상정 및 국토교통부 공원녹지법 제도개선 회의에 참석하여 도봉구의 의견을 개진하고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Q 근린공원 운동시설이 늘어나면 기대되는 효과는?

A 규제 개혁으로 공원 내 운동시설의 추가 조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민불편을 해소하게 되었고 더불어 공원이용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물 미수반 운동시설이 특정공원시설에서 제외되어 특정시설률이 하향 조정되므로, 향후 공원조성계획의 유연성을 확보하게 되어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분들이 요청하시는 다양한 운동시설 등을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하여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Q 시행규칙 개정안 반영 후 특정시설률의 수치적인 개선 효과는?

A 특정시설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반영할 경우 도봉구 초안산의 경우 특정시설률이 32.2%에서 6.3%로 낮아져 특정시설률이 현격하게 개선됩니다. 또한 성북구 개운산의 경우에는 특정시설률이 기존 63.2%에서 4.8%로 낮아지게 되고 은평구 향림공원의 경우에는 43.4%에서 12.2%로 대폭 개선됩니다. 서울시 자치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근린공원 내 특정시설률 개선에 따라 주민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Q 규제개선 후 주민들의 반응은?

A 도봉구 초안산근린공원 내 야외 운동시설 추가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들의 요구도가 높은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운동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요청사항이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이번 규제 개혁 결과에 따라 주민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어서 일을 추진하는 보람이 큽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소감 한 마디!

이번 수상과 관련하여 규제 개혁 등 항상 적극적인 행정을 실천하시고 직접 경진대회 발표도 해주신 공원여가과 이성일 과장님께서 너무 많이 애쓰셨습니다. 이리경 팀장님 이하 공원여가과 직원들과 함께 앞으로도 주민분들의 모든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혁신 행정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우수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애로 해소

Brief Report

현황

어부들이 육안으로 부이를 찾는 어려움으로 인해 조업시간 및 조업경비가 과다 소요

↓

개선

산·학·관 협력을 통해 저가의 보급형 AIS 전자해양부이를 개발하여 어구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함으로써 연료비 및 출어경비 절감, 조업시간 단축으로 연근해 어선경영 안정에 큰 역할 수행

Jeju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의 조업애로를 해소하는 AIS 전자해양부이로 조업효율 'UP'

규제개선 배경

→ 불법 AIS방식 전자해양부이 설치로 선박사고 위험

어부들은 보통 스티로폼 부이에 깃발을 꽂아서 육안으로 어망의 위치를 파악한다. 하지만 부이가 훼손되거나 조류에 의해 부이가 분실되어 어망을 분실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때문에 조업시간이 많이 걸리고 조업경비도 증가하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왔다. LoRa방식의 부이는 수신기·모니터 등의 추가 설치비용이 비싸고 타인의 어구위치는 식별이 어려운 것이 단점이어서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

또한 인증되지 않은 AIS 방식의 전자해양부이(선박자동식별장치)를 불법으로 운영하여 벌금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 기기는 선박으로 오인되어 선박 간 충돌사고의 발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AIS는 세계전파통신회의(WRC)의 전파규칙에 따라 선박, 어선에 설치하는 무선설비나 항로표지 등의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에 한하여만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도에는 어업인들의 조업에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인 부이의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어구 부이





규제개선 과정

→ 보급형 어구추적용 AIS 전자해양부이 개발 기술 확보



국립전파연구원 AIS 기술이용 전파법 개정 협의

제주도는 2019년 5월, 제주도어선주협의회의 민원을 접수하고 어업인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저가의 무선위치 추적용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제주대학교, 도해양수산연구원, 에스앤피글로벌 등 산·학·관 협업체를 구성하여 AIS기술이용 공동연구 MOU 협약을 체결하였다. 동시에 세계전파통신회의 AMRD(자율해상무선기기) 규정 도입에 대응한 개발을 추진하였다. 2020년 4월부터는 제주해양경찰청과의 협의, 제주전파관리소와의 신규지정 주파수 사용 관련 실증시험용 협조, AIS 전자해양부이에 대한 해양수산 국고보조사업 반영 협의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국립전파연구원 AIS 기술이용 전파법 개정에 협의하였으며 드디어 11월에는 블록형 자가발전 어구 표시 부이의 특허등록을 완료하였다. 제주도는 통신 출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에 전력을 기울였고 2022년 2월에는 해상 실증시험을 통해 4.5km 지점까지 오류 없이 송신신호가 수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23년 1월, 어업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해상시연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후 제품상용화를 위한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결과 및 기대효과

→ 출어경비 절감, 어선경영 안정을 위한 스마트 어업의 신호탄

제주도는 지자체 최초로 저가의 AIS 전자해양부이 개발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어구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연료비를 절감하고 조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보급이 확산되면 29톤 기준 근해 출어어선의 경우 제주도 14억 원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48억 원의 어업경비가 절감되는 등 연근해 어선들의 어선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향후 어업인 중심의 맞춤형 어구부이로 제품을 개발한 뒤 어선 자동화시설 사업 차원에서 정책부서와 연계하여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발은 국내 스마트 어업을 견인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스티로폼 부이 사용의 억제를 통해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한다는 부가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어 그 긍정적인 귀추가 주목된다.



보급형 AIS 전자해양부이 제품

변화의 리더!
규제혁신을 말하다

Leader's Interview

합법적인 AIS 전자해양부이로 "신속하게 어구 위치 파악"



우수상 : 김태정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해양환경연구과

Q 기존의 스티로폼 부이나 불법AIS 전자해양부이의 문제점은?

A AIS 기술이용 선박자동식별장치는 선박의 선명·침로·속력 등 항행 정보를 표시하는 장비입니다. 이는 주로 해상에서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어업인들의 경우 어선에서 어구의 위치를 쉽게 찾기 위해서 AIS를 어망에 부착해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AIS를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특히 인근 선박 항해장비 화면에 실제 선박과 동일한 신호가 표출되기 때문에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개발된 AIS 전자해양부이의 가장 큰 장점은?

A 이번에 개발된 AIS 전자해양부이는 합법적으로 신속하게 어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료비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조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이전에는 조류 등으로 인해서 어망을 분실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는데 그러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바탕으로 향후 스마트어업이 더욱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개선 후 성과 및 예상 파급효과는?

A 인기 어종인 참조기(126척)와 갈치(199척)를 잡는 근해어선만 대상으로 하여 29톤, 1항차를 기준으로 산출해보겠습니다. 그 경우 어선당 100~150만 원 저렴한 어구부이를 구매하게 되면 경제적 효과는 제주도가 14억 원, 전국적으로는 48억 원의 조업경비 절감이 가능해집니다. 해양수산부 국고보조 사업에 따른 전국적 조업애로 해소의 파급효과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 같습니다.

Q 전자해양부이 개발 후 현장의 반응은?

A 어업 현장에서는 불법 AIS 전자해양부이의 사용에 따라 범법자로서 벌금을 받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기대가 큽니다. 또한 부이의 훼손이나 분실에 따른 신속한 어망 위치 파악으로 조업능률이 높아지므로 어업인 소득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소감 한 마디!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어업인이 무선으로 어구를 쉽게 추적할 수 있는 전자해양부이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연근해어선 출어경비 절감 및 어업능률 향상을 통한 어선어업 경영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어 보람이 있었습니다. 향후 어선 자동화 시설 보조사업 차원에서 도정의 정책부서와 연계 보급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지방규제 개선과 적극행정을 장려해 각종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수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충청북도

#기업 애로 해소

K-곤충산업,
산업단지에서 미래를 꿈꾸다!

Brief Report

현황

산업단지 내에서 곤충의 가공과 유통은 가능하지만 생산은 불가하여 분리·운영해야 하는 불편 발생

↓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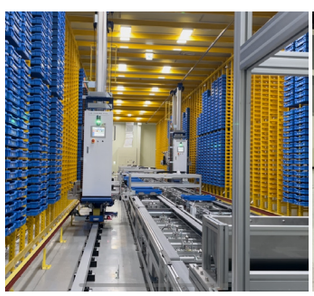
국토부의 산업입지법 개정안 미수용에 좌절하지 않고 법령 개정 다각화를 시도하여 산업부를 설득한 끝에 곤충생산업을 부대시설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산업집적법 개정 추진 협의

충청북도

규제개선 배경

→ 곤충의 생산-가공-유통까지 통합시스템 적용 필요

곤충산업은 국내 판매액이 2016년 225억 원에서 2021년에는 446억 원에 이를 정도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식용곤충과 더불어 의료용, 화장품, 사료 등의 신소재로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 시장전망은 더욱 밝다. 이에 정부는 곤충산업의 시장 확대 및 규제 완화를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2019년부터는 곤충산업 육성지원 사업,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곤충가공업·유통업은 산업단지 내에 입주가 가능하지만 곤충생산업은 입주가 불가하여 기업들이 중복투자를 해야 하는 비효율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르면 곤충생산업은 농업(기타축산업)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곤충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생산-가공-유통을 연계한 ICT 자동화 통합시스템을 적용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대량생산 및 품질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ICT 곤충 생산시설



ICT 곤충 통합시스템

규제개선 과정

→ 법령 다각화 시도로 「산업집적법」의 법령 개정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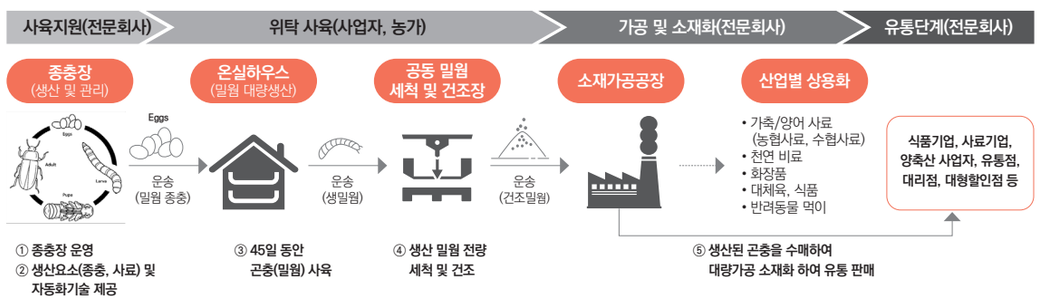
2021년 9월, 산업단지 내 곤충생산 불가에 따른 기업애로를 접수한 충청북도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 먼저 기업 현장을 견학하고 검토회의와 자문을 거쳐 개선안을 준비한 후 국토부에 「산업입지법」 개정을 건의하였다. 하지만 산업단지의 조성취지에 어긋나고 형평성 문제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후 2023년 행안부 규제개혁 중점추진 분야에 선정되어 재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국토부는 재차 수용곤란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충청북도와 행안부는 규제개선 관련 법령 다각화를 시도하여 「산업입지법」의 대안으로 「산업집적법」의 개정도 도출하였다. 그리고 2023년 4월, 지방규제개선 관계회의를 통해 산업부로부터 일부수용 의견을 받고 12월까지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협의하였다. 이로써 생산된 곤충이 외부로 반출되지 않고 원자재로서 제조공정에 모두 사용되는 경우 곤충생산업을 부대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결과 및 기대효과

→ 곤충산업 전문화로 가격경쟁력 향상 및 대체시장 진출기반 마련

곤충생산시설의 ICT 자동화는 고정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여준다. 예를 들어 갈색거저리 유충의 생산단가는 개별농가가 24,831원/kg이지만 자동화를 통하면 2,293원/kg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또한 곤충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오일, 단백질 등의 신소재 개발로 대체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2021년 국내 대체가능 시장 규모는 약 13조원에 달하며 특히 해외의존도가 75.1%인 양축용 사료원료의 자급률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무엇보다 기업과 농가의 상생방안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한다. 즉 대규모 자본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동화부화장 및 가공 및 유통은 기업이 전담하고, 사육은 농가에 위탁하여 농촌의 안정적 소득원을 창출하는 것이 곤충산업과 충청북도가 그리는 청사진이다.

기업과 농가의 상생 방안 프로세스(예시)



변화의 리더!
규제혁신을 말하다

Leader's Interview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으로 "곤충산업의 성장 가속화 기대"



우수상 : 김국진

충청북도 투자유치국
기반조성과

Q 곤충산업의 현황과 활용분야, 시장전망을 소개한다면?

A 곤충에게는 인류가 이용 가능한 특성 및 유용물질이 다수 존재합니다. 같은 양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데 있어 가축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히 적어 미래 지속가능 생물자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세계 곤충시장은 2019년 기준 약 8억 8,200만 달러에서 2024년 약 21억 64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곤충판매액도 2016년 약 225억 원에서 2021년에는 약 446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국가에서 몇몇 곤충을 주로 식용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반면 현재는 곤충의 분리·정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단백질, 아미노산 등 유용한 물질을 오일, 분말 등으로 소재생산이 가능해져 식품, 사료, 화장품, 의약품, 신소재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곤충의 장점과 상품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대기업에서도 투자를 할 정도로 곤충시장의 전망은 밝습니다.

Q 곤충생산업의 입지규제 개선과정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A 곤충산업은 기술의 발달로 가공뿐만 아니라 부화 및 사육시설도 재래식에서 자동화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애로를 접하고 처음에는 '곤충생산을 왜 비싼 산업단지에서 하려고 하지?'하는 의문이 생겼었습니다. 하지만 먹이 수급, 환경제어 등이 자동화된 수직형 곤충생산 시설을 견학하고 나서 그 의문은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령 개정을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산업단지는 공장이라는 고정관념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곤충가공업은 제조업으로 산업단지에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과 곤충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곤충의 생산·가공·유통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곤충생산업을 주업종이 아닌 원재료 확보를 위한 부대시설로 접근하였는데 이러한 접근 방법이 중앙부처의 부담을 덜어 규제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Q 규제개선이 곤충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A 왜 기업이 개별입지보다 산업단지를 선호할까요? 산업단지는 도로, 전기, 폐수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인허가 절차와 부지확보에 따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세제 혜택 및 건폐율, 용적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제 산업단지에서도 곤충생산이 가능해졌으므로 곤충기업도 이러한 산업단지의 혜택을 누리며 대량생산을 통한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여 보다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Q 곤충업 관련, 기업과 농가의 상생방안이 있다면?

A 곤충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려면 위생안전 및 품질관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농가의 곤충사육은 먹이원 수급 및 환경제어 미흡으로 중금속 노출 위험 및 성분 차의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자본력 부족으로 분리·정제기술 개발 및 판로 개척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들은 기업과 농가가 분업화를 통해 해결이 가능할 거라 생각됩니다. 대규모 자본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먹이원의 공급, 부화, 가공 및 유통은 기업에서 전담하고 상품화를 위해 기간이 소요되는 사육은 농가에 위탁하면 기업과 농가가 상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소감 한 마디!

우선 기업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했던 법령 개정이 관련부처를 설득하는 데 약 2년이 소요되었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령 개정을 추진하며 역량의 한계를 느끼고 막막할 때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함께해주신 행안부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으로 주도하여 추진한 규제개선의 성과와 경진대회의 수상은 저에게 큰 경험이 되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규제개선을 하며 얻은 가장 큰 교훈은 공유와 공감이었습니다. 여러 사람과 의견을 나누다 보니 공감대가 형성되고 같이 고민하니 새로운 길이 보였습니다.

장려상
(행정안전부장관상)

경상북도
(경상북도개발공사)

#지역경제 활력 제고

Brief Report

현 황

중수도 시설은 설치한 개발사업 시행자가 운영·관리해야 한다는 규제로 설치 후 사실상 방치 수준

↓

개 선

환경부의 법령 개정(예정)에 따라 중수도의 운영주체를 개발사업 시행자와 중수도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협의하여 정하게 됨으로써 중수도의 효율적인 운영 기대

경상북도개발공사
GYEONGSANGBUKDO DEVELOPMENT CORPORATION

중수도시설 운영
관리주체 변경 및 설치기준 완화

규제개선 배경

→ 중수도 설치 후 운영·이관의 어려움으로 사실상 방치

중수도란 개별시설물이나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않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뜻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광단지,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국가,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기업은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중수도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설치한 자가 운영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지자체에 이관이 불가능하고 유지비용이나 소유권 등의 문제로 시설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상북도의 개발사업 중수도 역시 관리 불편과 비용을 이유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개발사업시행업자는 유지관리 경험이 부족하여 위탁관리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또한 개발사업지구 내 필지 분양시기가 불확실하여 중수도 시설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개발사업 중수도 설치 현황

개발 사업자	개발 사업	사업명	주요처리 공법	생산량 (㎥/일)	이용 용도	비 고
경상북도 개발공사	도시 개발	임당역세권 도시개발	응집침전, 소독	120	조경용수 도로청소 용수	수요부족 미운영, 사용시 경제성 없음
	산업 단지	경산1-1일반사업단지		50		필지 미분양에 따라 재이용원수 유입 없음
천안시	도시 개발	부성지구	막여과 생물학적처리	300	조경용수 세척용수 하천유지	
		성거오목마을		10	조경용수	

규제개선 과정

→ 법령 개정으로 지자체와 협의 하에 중수도 이용 가능

경상북도개발공사의 물 재이용시설 운영에 관한 애로사항을 접수한 경상북도는 중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관련 규제의 완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개발사업 완료 후 새롭게 설치된 도로·공원·철도·수도 등의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이때 중수도 시설을 공공시설로 보아 지자체에 시설 설치 후 운영주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환경부, 국토부, 법제처의 질의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경상북도는 행안부 권역별 현장방문 중점과제로 건의하였으며, 또한 행안부-환경부-경상북도-경상북도개발공사 부처조정회의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였다. 그 결과 소관부처인 환경부를 통해 개발사업자와 지자체가 협의하여 중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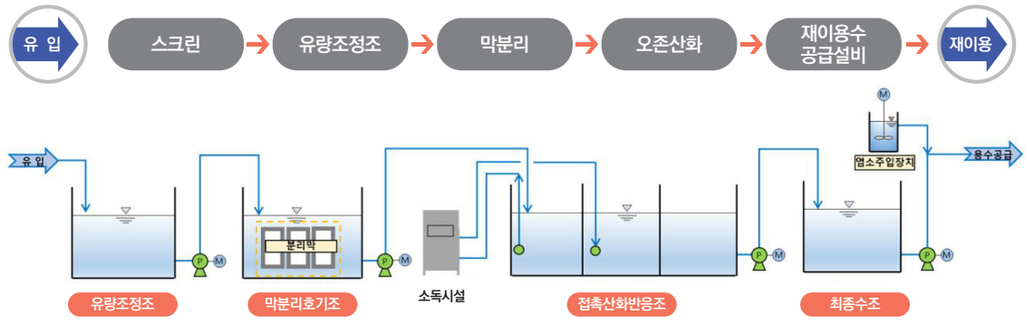
중수처리시설 및 저류조

결과 및 기대효과

→ 중수도 설치 및 운영 활용성 제고 기대

법령이 개정되면 중수도의 운영 주체를 개발사업 시행자와 중수도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조경용수, 청소화장실용수, 세척살수용수 등을 개발사업구역 내의 공공시설물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향후 중수도 설치 및 운영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개발계획 초기에 미리 관리주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경상북도는 내다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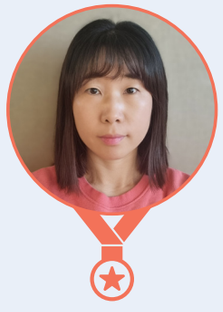
중수도시설 모식도



변화의 리더!
규제혁신을 말하다

Leader's Interview

효율적인 물자원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장려상 : 박나영

경상북도(경상북도개발공사)
법무혁신담당관실
(스마트도시사업처)

Q 중수도 시설 운영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현실적 어려움은?

A 국가와 지자체, 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에는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이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지요.
즉 중수도라는 것은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않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하지만 개발사업 시행 중 설치된 중수도가 현장에서는 사실상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된 이유는 사용 비용의 경제성 부족, 필지 미분양에 따른 재이용원수 미유입, 지자체 관리 불편 등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Q 규제개선 과정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한 부분은?

A 이미 설치된 중수도가 방치되지 않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실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중수도를 공공시설로 보아 지자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새롭게 설치된 도로·공원·철도·수도 등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중수도를 공공시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 국토부, 법제처 질의회신을 진행했고 그 결과에 따라 공공시설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사업 시행자가 중수도를 설치한 후에 그 운영관리 주체를 관할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Q 규제개선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의 긍정적인 사례가 있다면?

A 경상북도에서는 도와 기초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 상공회의소, 공공기관 등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규제개선 사례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제도 지방공기업인 경상북도개발공사와의 소통 과정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법령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이 있음을 알게 되어 행안부와 함께 규제개선을 진행하게 된 건입니다. 특히 행안부-환경부-경상북도-경상북도개발공사와 함께한 부처조정회의가 규제 해결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와 개발공사는 실제 개발사업 현장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중수도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을 적극 어필하면서 중앙부처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 발굴된 과제가 묻히지 않고 규제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소통과 협력의 힘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Q 규제개선으로 인한 성과, 그리고 향후 기대되는 효과는?

A 해당 내용을 반영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개발사업자와 지자체가 개발사업 시행 전에 중수도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여 시설 설치 후에는 개발사업구역 내의 공공시설물 조경용수, 청소화장실용수, 세척살수용수 등에 충분히 재이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과제는 일부 시도에 국한된 사안이 아닌 전국에 적용될 수 있는 효율적인 물 자원 활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사용했던 물을 재처리하여 사용하는 처리수의 재이용은 가용수자원의 확보와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소감 한 마디!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좋은 결실로 마무리되어 뜻깊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틀에 박힌 규제의 적용은 기업 활동과 도민 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행안부를 통한 정기적인 규제개선 건의 외에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공모전 운영 등을 통해 생활 속 규제 발굴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기초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여 도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장려상
(행정안전부장관상)

대구광역시 동구

#기업 애로 해소

산업단지 내 제조업체 자체판매장에서 OEM 생산제품 판매

Brief Report

현황

OEM 생산제품을 판매하려면 산업단지 내 생산시설을 갖춰야 하므로 영세업체의 판로 확보에 난항

↓

개선

몇 차례의 건의와 수용불가 의견, 다시 수정 건의안 제출 등 약 6년의 긴 노력 끝에 자체 공장에서 생산한 일부 부품으로 생산된 OEM제품에 대해 판매 허용하도록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 부담 완화

대전광역시 동구

규제개선 배경

→ 제품판매장에서 OEM 생산제품 판매 불가

대구혁신도시 내 첨복단지는 의료R&D지구와 첨단의료복합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150여 입주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제품판매를 위한 판로 확보와 제품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공장의 부대시설로 제품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지만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OEM 생산제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산업단지 내에 생산시설을 갖추거나 유통전문판매업 자격을 취득한 후 별도의 다른 장소에서 판매하여야만 한다. 영세업체들의 입장에서는 별도의 생산시설이나 판매장을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여건이라 관련 규제에 대한 개선을 지난 2017년부터 요청해오고 있었다.



규제개선 과정

→ 6년만의 결실, OEM 생산제품의 일부판매안 수용

대구광역시 동구는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7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제품판매에 관한 규제개선을 건의하였다. 관련업종이 밀집한 산업단지의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 타기업 및 관련제품을 포함한 제품판매를 전면허용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2021년까지 이어진 건의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근본 조성취지, 형평성 문제 등으로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OEM 생산제품의 판매허용으로 범위를 좁혀 재요청하기로 하고 2023년 3월 기업애로해결 및 규제개선합동간담회 논의를 거쳐 규제개혁 신문고에 건의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답변은 여전히 '수용불가'였고 이에 대구광역시, 전문가, 기업이 모여 건의안을 면밀히 재검토한 끝에 건의안을 변경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내 자체 공장에서 제품의 일부 부품을 생산하고 그 부품을 이용하여 OEM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허용하도록 규제개선을 요청한 것이다. 이를 행정안전부 건의과제로 제출하고 규제개혁 신문고에 재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23년 9월 수용 의견을 받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부대시설의 범위

개정 전	개정 예정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로 한정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 또는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부품으로 하는 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로 한정

제품 판매장

결과 및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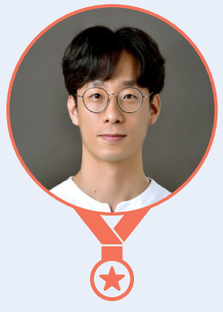
→ 영세업체의 기업경영 환경 개선 기대

산업단지 내 많은 영세업체들은 이번 규제개선 결과를 기꺼이 반겼다. 일부 OEM 생산제품에 대해 자체 판매장에서의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기업들은 이제 신규 판매장 설치에 대한 부담이 사라졌다. 또한 자체 판매장에서 해당제품에 대한 통신판매도 가능해지면서 판로 확보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영세업체들의 기업경영 환경이 한층 개선되었고, 동시에 협업을 통한 제품생산으로 산업단지의 조성 취지를 만족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루게 되었다.

변화의 리더!
규제혁신을 말하다

Leader's Interview

판매전략 다양화로 영세 입주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장려상 : 박상욱

대구광역시 동구 기획예산과

Q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제품판매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법은?

A 산업단지, 특히 우리 대구 동구에 위치해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우는 용도 계획에 근린생활시설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장을 설치하려면 산업단지 밖의 부지에 판매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등 영세 입주기업들로서는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산업단지의 설치 목적은 기업들의 신제품 연구·개발 및 제조 분야에 이점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범위를 확장해 판매와 관련해서도 규제를 완화한다면 입주기업들의 생산품들을 공동판매 시설에서 모두 전시하고 함께 판매하여 상시 개최되는 산업박람회처럼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영세업체들이 판매와 관련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한 과정을 소개한다면?

A 산업단지에서 판매와 관련한 규제내용은 2017년부터 입주기업들이 지속해서 개선을 요청해 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구시에 지역 내 기업이 판매제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구시 규제담당팀과 이야기하여 우리 구청에서 해당사항을 건의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처음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를 하였으나 OEM 생산제품 판매제한 규제완화는 자칫 산업단지 내 용도구역 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수정하였고 다시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을 통해 규제완화를 건의하였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기다리던 중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규제개혁추진단 대구 정책간담회에 담당 팀장님과 함께 참여하여 다시 한번 규제완화를 요청하였고 마침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수용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Q 개선과정에서 가장 힘든 점과 가장 보람된 점은?

A 규제과제를 발굴해서 자료를 작성하고 건의를 하였을 때 중앙부처의 규제개선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는 과정이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에서도 자료를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듣고 실제 현장 답사를 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청한 내용이 과연 수용이 될까? 거부될까? 거부되면 다음엔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으로 답변을 기다리며 마음을 졸여야만 했던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규제개선 내용이 수용되어 좋은 소식을 알려드렸을 때 기쁘게 소식을 들어주시는 주민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규제개선과제 수용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성취감과 함께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Q 규제애로 개선으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는?

A 산업단지 내의 자체 판매장에서 OEM 생산제품에 대한 판매제한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면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입주기업들은 별도의 판매장을 설치하지 않고 자체 판매장을 이용해서 판매허가를 받아 자체 생산하지 않았더라도 기업들이 연구·개발한 물건들을 고객들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판매 등 연구·개발한 물건들에 대한 판매 전략 다양화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전국 모든 산업단지에 공통 적용될 사안으로 별도의 판매장 설치에 부담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들의 경영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소감 한 마디!

규제혁신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큰 요건은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혁신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지자체의 공무원들은 항상 기업인분들과 주민분들과 접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현장에서 그리고 실생활에서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가장 먼저 접하고 그 어려움을 잘 아는 분들은 역시나 기업인분들과 주민분들입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규제개혁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려상
(행정안전부장관상)

부산광역시

#지역경제 활력제고

Brief Report

현황

친수구역 조성사업
준공 후 10년간
지구단위계획 유지
규정으로 인해
사업시행자들의 부담 가중

↓

개선

택지개발지구나
공공주택지구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환경부와 협의한 끝에
지구단위계획 유지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지침 개정을 통해
조속한 사업추진 및
사업의 조기 활성화 전망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준공된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구단위계획 관리 규제 일부개정**

규제개선 배경

→ 준공 후 10년간 지구단위계획 변경 불가

친수구역 조성지침(환경부훈령)에 따르면 준공된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실시계획 승인 시 포함·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준공일로부터 10년간은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들은 조기 사업준공(부분준공 등) 이행을 불합리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어 사업(부분)준공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이 규정이 급변하는 현실적 여건과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활성화가 지연될 경우 당초 계획을 보완·개선하는 등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활성화 촉진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기회 또한 지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더 적극적이고 유연성 있는 대처를 위해 규제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회의



규제개선 과정

→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사례를 고려하여 5년으로 단축

개발사업지구의 준공 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 제한을 둔 규정은 자족기능 확보, 지가 상승 예방, 난개발 방지를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부산광역시는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등 다른 개발사업의 운영사례를 고려하고 급변하는 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한기간의 단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변경제한 기간은 택지개발지구와 공공주택지구 모두 5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발사업지구의 준공 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한기간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지구
330만㎡ 이상 10년 → 5년 변경	5년 이내 변경 제한, (도시관리계획) 5년 마다 재검토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2013.9.5.개정)

2023년 3월 부산도시공사의 규제개선 건의를 바탕으로 부산광역시는 소관부서와 협의한 후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회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환경부와 적극 협의하였고 7월에는 지구단위계획 유지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지침 개정이 현실화되었다. 또한 부분준공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전체 준공까지 변경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조항 신설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결과 및 기대효과

→ 조성사업의 조기 활성화 및 지속가능 발전의 밑거름

부산광역시는 준공 후의 제약사항에 대해 사업시행자들의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향후 조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준공된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조기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회환경과 사업여건이 급변하고 있고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현실 속에서 이번 규정 개정은 사업효율성을 한층 높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감도

변화의 리더!
규제혁신을 말하다

Leader's Interview

친수구역 준공 후에도 "살기 좋은 지역으로 지속 성장"



장려상 : 최성환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Q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면?

A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2km 범위 내의 지역 즉 친수구역을 국가하천과 조화롭게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조성·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국가하천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 삶의 질과 재산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으로 국가하천인 낙동강 주변지역에 친수구역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스마트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 및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를 추구하는 국가시범도시 사업입니다.

Q 지구단위계획 유지기간 규정에 주목한 이유는?

A 환경부 훈령인 친수구역 조성지침 제41조에 따라서 준공된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실시계획 승인 시 포함·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준공일로부터 10년간은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급변하는 현실 여건과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친수구역(사업구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적극적이고 유연성 있는 대처에 장애가 됩니다. 물론 개발사업 지구의 준공 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한 규정은 자족기능 확보 및 지가상승 예방, 난개발 방지 등을 고려한 규정이긴 합니다. 하지만 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 등 타 개발사업의 운영사례와 급변하는 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친수구역 조성사업 준공 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한기간의 단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Q 규제개선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A 우리 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에코델타시티의 인근에서는 디지털물류시범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부산시 기업유치 전용산업단지 추진, 인근 맥도생태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추진 등 다양하고 빠르게 주변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에코델타시티의 친수구역 조성사업 준공지구 내에서도 주변의 이런 급변하는 여건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유지기간 이내에 변경 압력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규제애로 개선 후 예상되는 효과는?

A 친수구역 조성사업 준공 후 지구단위계획 유지기간의 규제개선은 해당 사업구역 주변의 급변하는 여건과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환경 변화를 유연하게 반영하게 됩니다. 이는 해당 사업구역의 준공 후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성 및 효율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쇠퇴를 막고 살기 좋은 친수구역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 에코델타시티 사업이 성공적인 모델이 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소감 한 마디!

규제개선은 결코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사업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와 우리 시 규제혁신추진단, 도시균형개발과, 환경부 수자원관리과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기에 이런 값진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또한 중앙부처 협의에 힘을 보태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에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저항이 있다면 변화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규제를 개선하고자 할 때는 언제나 저항이 따릅니다.
저항에 굴하지 않고 마음을 열도록 설득하고 또 설득하여 많은 제도가 국민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바라고 노력하겠습니다.

장려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울산광역시

#지역경제 활력제고

탈울산 예방 및 인구유입 유도를 위한 **도시계획 정책 규제 대폭 완화**

Brief Report

현황

수위 높은 울산광역시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으로 개발수요가 인근지역으로 이동하여 인구 감소

↓

개선

철저한 사례분석을 통해 경사도 기준은 기존대로 유지하고 입목축적 기준은 도시지역 100% 미만, 비도시지역 125% 미만으로 완화하여 개발가능지 면적이 3배 증가함으로써 지역 개발 경쟁력 확보

울산광역시

규제개선 배경

→ 수위 높은 개발행위 허가기준으로 울산을 떠나는 개발수요

2015년 약 117만 명이었던 울산광역시의 인구는 2022년말 현재 112만 명으로 감소함으로써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취업과 주거의 문제로 인한 타 지역 이동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울산광역시는 산업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유출을 방지하며 새로운 인재를 유입하여 완전한 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울산광역시에는 현대자동차 전기차 생산과 관련한 2차전지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규모 제조업 공장들의 입지 수요가 있다. 하지만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토지 경사도 및 임상기준이 인근지역에 비해 현저히 강화되어 있어 개발이 용이한 인근지역으로 개발수요가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허기기준을 완화하여 형평성과 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을 잠재우고 지속적인 인구정착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도시계획분야의 정책 마련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기준 현황

구 분	울산	경주	양산	밀양
입목축적	50%	150%	150%	150%
평균경사도	17도	20도	21도	25도

규제개선 과정

→ 사례조사·분석을 통해 시 특성에 맞는 기준 완화

울산광역시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건강한 개발을 통해 인구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적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입목축적 기준, 경사도 기준의 분야별로 검토를 시작했다. 먼저 입목축적 표준지 100개소를 선정하여 조사하고 기준 완화 시 개발가용지 면적 증가비율과 적정 산림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타 지자체 개발사례를 조사·분석하여 경사도 적정기준을 재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행하여 경사도 기준 완화 시 산림훼손 정도 및 도시경관 변화를 예측하였고 최종적으로 평균경사도를 현재의 기준인 17도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견학을 통해 직접 보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울산광역시 특성에 맞는 '입목축적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를 도출함으로써 개발가용지 면적 증가와 개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입목축적 기준 완화 도출



결과 및 기대효과

→ 개발가능지 면적의 3배 증가로 경제활성화 및 인규유입 기반 마련

울산광역시는 입목축적 기준 완화로 인구 및 자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개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기준 완화를 적용할 경우 개발가능지 면적은 도시지역이 35.59㎢, 비도시지역이 107.05㎢로 전체 약 142.64㎢가 됨으로써 약 3배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도시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울산광역시는 훼손지와 불량경관 위주로 개발·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적극적인 개발이 가능한 비도시지역은 민간개발을 유도하여 산업시설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원주택단지 및 은퇴자마을을 조성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인구유입의 기반을 다져나갈 예정이다.

개발가능지 면적의 변화

구 분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발가능지 면적 (㎢)		현재기준 대비
		입목축적	평균경사도			
현재기준		50% 미만	17도 미만	46.48		
개선	도시지역	100% 미만		35.59	142.64	약 3.07배
	비도시지역	125% 미만		107.64	142.64	

변화의 리더!
규제혁신을 말하다

Leader's Interview

입목축적 기준 완화로 “지역개발 경쟁력 강화, 인구유입 활성화”



장려상 : 김지원
울산광역시 도시국 도시계획과

Q 탈울산 및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은?

A 울산시는 2015년까지 약 117만3천여 명의 인구를 기록했지만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퇴직이 시작되면서 전원생활을 위해 인근 교외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등 2016년부터 인구감소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 전기차 생산과 관련한 2차 전지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규모 제조업 공장들의 입지 수요가 있음에도 인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시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인해 개발이 용이한 인근 지역으로 개발수요가 빠져나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적정 기준에 대한 논란과 함께 기준 완화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Q 인구유입을 위해 추진한 해결방안을 간단히 소개한다면?

A 탈울산 방지를 위해서는 은퇴자들의 정주환경은 물론 취업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마련으로 청년들의 유출을 방지하고 새로운 인재 유입을 통해 산업인구를 늘리고 혼인율과 출생률을 증가시켜 완전한 정착을 유도할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계획분야 대책 방안으로 상대적으로 강화된 우리시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의 완화를 추진한 것입니다.

Q 개선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과 보람있었던 부분은?

A 과거 기준완화 등의 정책적 업무에 대한 소극적 관행으로 인해 ‘변화’에 ‘복지부동’으로 보수적 관행을 고수해 왔으나 이번에 과감히 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변화 없는 고정적 이미지의 법 기조에서 탈피하여 사용자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는 ‘서비스행정’의 인식을 실천하는 것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한 보람도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시 특성에 맞는 허가기준의 적정 수준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준별 전국 사례조사를 통한 분석과 100개소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무자 등 현업 허가 업무담당자 및 부서장들과 현장답사 및 간담회를 통해 현행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나갔습니다. 개선안에 대하여 시나리오별로 시뮬레이션하여 기준 완화 수준에 따른 산림훼손 정도 및 도시경관 변화 예측, 산사태 발생 위험도와 안전사고 위험도 분석, 개발가용지 규모 산정 등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개발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 확보와 지속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평균경사도 기준은 현재의 기준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이 도시를 관통하여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이원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시의 특성을 감안하여 입목축적 기준은 현행 50% 미만에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분하여 각각 100%, 125% 미만으로 상향하여 우리시 특성에 부합하는 적정기준을 적용하여 도시 균형발전을 유도하였습니다.

Q 규제개선으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는?

A 입목축적 기준 완화로 인구 및 자본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개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도시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양호한 경관은 보전·관리하며 도심지 내 훼손지 및 불량경관 위주로 개발 및 정비가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강한 개발을 통한 인구유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도시지역은 도시지역보다 적극적인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민간개발을 유도하여 경제활동(산업시설) 유치로 인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전원주택단지 및 은퇴자 마을 조성을 통한 정주환경 마련, 비도시지역 기반시설 확충 등 인구유입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소감 한 마디!

지방소멸 위기에 대비한 도시계획 정책의 일부분으로서 ‘인구가 사라지고 없는데 규제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민선8기 정책 방향에 발 맞추어 진행된 현안업무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듯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하나씩 바꿔나간다면 지방시대 선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개선된 허가기준을 적용하여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운영하면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와 추가적으로 개선할 방향을 모니터링하고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려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인천광역시

#기업 애로 해소

Brief Report

현황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중토위와 협의하지 않은 재개발정비사업을 인정하지 않아 사업 장기화

↓

개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통해 사업시행기간을 만료하여 기존 사업인정을 실효시킨 후 다시 새로운 사업인정을 취득함으로써 재개발사업 재추진

인천광역시

전국 최초 토지보상 사업인정 관련 **가이드라인 설정**

규제개선 배경

→ 재개발정비사업의 발목을 잡는 중토위 사업인정 관련 법령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인정을 하려면 공익사업의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즉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지 않은 사업은 사업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이다. 인천여상 주변의 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도 이 법령을 근거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업인정을 해주지 않아 수용재결이 불가하게 되었다. 속도감 있는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보상 관련 사업인정이 되어야 하지만 이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어 사업성 저하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는 토지보상 사업인정과 관련한 협의 시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국토부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관련 규정에 최초라는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판단이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는 이를 바탕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사업의 돌파구를 찾기로 하였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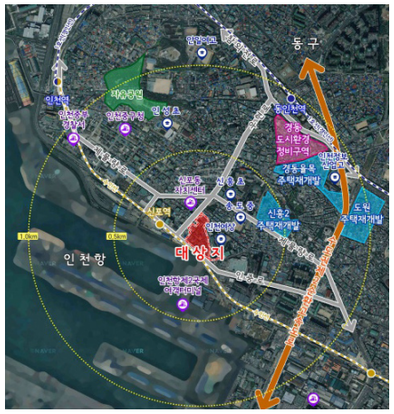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②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 · 인가 · 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 · 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규제개선 과정

→ 기존사업인정은 실효하고 새로운 사업인정을 받는 방안 협의

인천광역시는 규제개선을 위하여 2021년 10월부터 1년여에 걸친 대장정을 시작하였다.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법령 해석에 대해 협의하고 중앙부처에 수차례 현안사항에 대해 질의하였다. 또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도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서울시 성북구 및 수원시 등의 지자체와 수시로 소통하며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추진과정에서 인천광역시가 중점을 둔 것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취소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존 사업인정 실효 및 새로운 사업인정을 받는 방안이었다. 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사업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사업은 취소되지 않으나, 「토지 보상법」상의 사업인정은 사업기간이 만료될 경우 실효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사업기간 단축)를 통해서 사업시행기간을 만료하여 기존 사업인정을 실효시킨 후 새로운 사업인정을 받는 의제에 관해 협의를 요청하였다. 이를 토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고 마침내 2022년 11월 '인천여상 주변 정비사업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결과 및 기대효과

→ 전국 지자체에 적용하여 재개발사업 활성화

협의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답보상태에 놓였던 정비사업은 이번 협의취득에 따라 수용재결 처리가 가능해져 조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인천여상 주변 정비사업뿐 아니라 내항 재개발 등 원도심지역 활성화에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9년 「토지보상법」개정 후 최초인가 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전국 최초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현재 타 지자체 재개발구역에서도 이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해결 중에 있으며, 향후 민간 재개발사업 구역 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를 받지 못한 도시개발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어 관련사업들이 활발하게 재추진될 전망이다.



변화의 리더!
규제혁신을 말하다

Leader's Interview

한발 더 빨라지는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사업"



장려상 : 김종근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과

Q 인천여상 주변 재개발정비사업이 난항을 겪은 이유는?

A 「토지보상법」 상 사업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중토위와 협의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여상 주변 재개발정비사업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중토위 협의를 받지 못하여 수용재결을 할 수 없었으므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체된 상태였습니다.

Q 규제개선을 위해 고려한 해결방안은?

A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취소하지 않으면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새로운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토위 입장은 최초 인가 때 사업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변경인가 시에도 사업인정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저희의 입장은 변경인가 때에도 사업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도시정비법」 상의 사업시행계획인가와 「토지보상법」 상의 사업인정의 차이점이 실효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사업기간이 만료된다 하더라도 실효되지 않으나 사업인정은 사업기간이 만료되면 실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만료시켜 기존에 중토위 협의를 받지 않아 인정되지 못했던 사업인정은 실효시키고,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을 통해 중토위 협의를 거치고 새로운 사업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Q 개선과정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보람있었던 부분은?

A 「토지보상법」 개정 후에 중토위 미협의로 인해 사업인정을 받지 못한 첫 사례였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협의 시기에 대한 부분도 중토위와 국토부의 관련법 해석이 달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찾기 위해 문의하고 협의하며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최종적으로 중토위에서도 이 방안에 대해 인정해주셨고 이 방식으로 타 지자체도 도움이 됐다는 걸 들었을 때 1년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Q 사업인정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면?

A 「토지보상법」에 따라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중토위 협의를 받지 못해 사업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통해 사업기간을 만료하여 기존에 인정받지 못했던 사업인정을 실효시키고,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시 중토위 협의를 통해 새로운 사업인정을 받는 방식입니다.

Q 규제애로 개선으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는?

A 인천여상구역 외 타 지자체의 정비사업구역에 「토지보상법」 개정 이후 중토위 협의를 놓쳐서 사업인정을 받지 못한 구역들이 있었고 이 방안으로 해결한 구역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방안은 「도시 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뿐 아니라 「토지 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이 필요한 모든 사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이런 문제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구역들이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사업 및 각 도시개발사업들도 빠르게 추진되어 지역발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소감 한 마디!



처음에는 단순히 제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진행했던 일이었는데 이렇게 우수사례로 선정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로 인해 타 지자체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너무 보람되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재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업무를 하고 있지만 현재의 업무를 하면서도 규제혁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어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려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전라남도 광양시

#기업 애로 해소

광양 국가산단 신산업 유치를 위한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

Brief Report

현황

현행 법령상 산업단지 내 사업시행자의 협력기업 외 입지 불가로 신산업 투자 유치 불가

↓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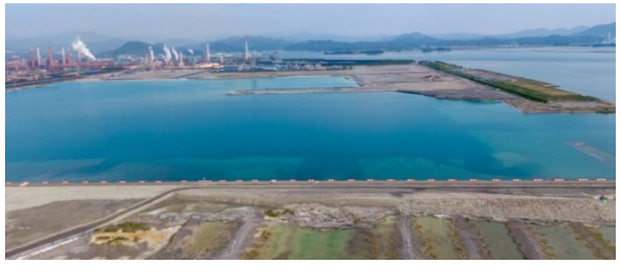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기업이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실수요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처분제한(5년) 예외대상에 첨단기술·녹색기술 사용기업이 포함되어 투자 활성화

광양시 Gwangyang

규제개선 배경

→ 산업단지 내, 사업시행자의 협력기업 외 입지 불가

광양국가산업단지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유수면 매립 및 단지조성·개발을 통해 공장을 유치하는 실수요 산단으로서 제철 및 관련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승인받아 산업단지를 개발 중이다. 최근 광양국가산업단지는 수소환원제철, 2차전지, 수소 등 신산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현행 법령에 의하면 제철 및 관련산업(공동생산 제품생산 또는 협력기업)만 직접 투자하거나 동종 업종의 토지 임대만 가능하게 되어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양국가산업단지의 신산업 투자는 사실상 유치가 불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전라남도 광양시는 이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규제개선 과정

→ 실수요기업 처분제한 예외규정 마련

최근 산업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첨단산업 육성과 신산업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광양시는 특정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의 경우 협력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기업이 적기에 투자하는 데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내부적인 회의 결과 산업단지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녹색기술 사용기업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처분제한(5년) 예외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였다. 광양시는 2022년 8월부터 국무조정실 및 국토교통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적극적인 추진 결과 국무총리 현장 방문을 비롯한 검토·협의·심의과정 등을 거쳐 1년여만인 2023년 10월에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될 수 있었다.



국무총리 현장 방문

결과 및 기대효과

→ 광양국가산단에 친환경 미래소재 클러스터 구축 계획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의거하여 이제 기업이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실수요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처분제한(5년) 예외대상에 첨단기술의 육성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첨단기술 및 녹색기술 사용기업이 포함되었다. 광양국가산업단지 동호안 부지의 개발 후 신산업 투자가 가능해진 것이다. 따라서 광양시는 향후 10년간 광양국가산업단지 동호안 부지에 약 4조 4천억 원을 투자하여 2차전지 소재, 수소 등 친환경 미래소재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포스코그룹 동호안 투자 계획
자료 : 포스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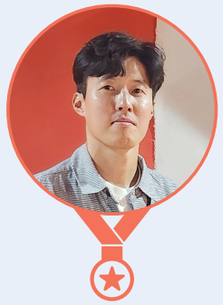
1. MHP(니켈 중간재) 정제사업
2. 제2 LNG터미널
3. 배터리용 고순도니켈 생산
4. 흑연전극봉 생산
5. LNG 활용 열·전기 생산
6. 전구체 양극재 생산
7. 부생수소 생산
8. 연료전지 발전
9. 침상코크스 생산
10. 블루수소 생산
11. 청정암모니아 저장
12. 암모니아 분해 수소 생산

※ CTS : 대형화물 야드

변화의 리더!
규제혁신을 말하다

Leader's Interview

100만 평 신규산업용지 확보로 "미래 신산업 대규모 투자유치"



장려상 : 곽기백
전라남도 광양시 산단택지과

Q 2050 탄소중립으로 인한 철강산업의 변화와 투자계획 중인 신산업을 소개한다면?

A 현재 국내 철강산업은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용강로를 통한 철강제품 생산이 아닌 수소환원제철로 전환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에 포스코그룹은 수소환원제철뿐만 아니라 제철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통해 에너지발전, 이차전지, 수소산업 등을 개발하여 투자계획 중이었습니다. 현재 국내 산업단지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코가 1980년대부터 직접 매립·취득·개발할 수 있는 광양국가산단 동호안 부지가 황금의 땅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앞으로 향후 10년간 약 4조 원 이상을 투자하여 광양국가산단 동호안 부지 약 90만평에 신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Q 규제개선 추진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A 기업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보다 빠르게 개선하기 위한 속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광양국가산단은 투자할 수 있는 산업용지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로 인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기업과 지자체·중앙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빨리 규제를 개선하고 투자를 촉진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국무조정실·국토부와 지자체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국무총리님의 현장방문, 지방균형발전위원회 등의 끊임없는 관심을 통해 보다 빠르게 규제개선이 완료될 수 있었습니다.

Q 규제개선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의 긍정적인 사례가 있다면?

A 문제를 직면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해결하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계속해서 토의하고 아이디어 발굴과 수정을 통해 현재의 결과를 토출해 냈습니다. 규제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포스코홀딩스 친환경인프라팀, 포스코 투자엔지니어링실 설비확장부지조성TF팀, 광양시 법무팀 직원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사무관님들, 바쁘신 와중에도 지방에 규제개선을 위해 매번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친절하게 응대해 주신 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Q 규제개선으로 인한 성과, 그리고 향후 기대되는 효과는?

A 소멸해가고 있는 지방에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행정이 활로를 만들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미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 이차전지 등 신산업이 우리 지역에 유치됨에 따라 우리 광양국가산단이 국내 미래신성장 동력발전의 메카가 될 전망이므로 우리 지역민들이 걸고 있는 기대가 큽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소감 한 마디!

세계경기의 침체 속에서 규제개선만으로 약 100만 평 규모의 신규산업용지를 확보하게 되었고 미래신산업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유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규제혁신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 중 하나라는 의미와 함께 규제혁신에 대한 지방지치단체의 강한 의지와 적극적인 조직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산업·교육·주민 실생활에 관련된 규제개선을 지속 발굴하여 민·관이 함께 상생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장려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충청북도

#기업 애로 해소

규산염계청관제 사용으로 ‘블로우다운수 배출 규제’ 해결

Brief Report

현황

보일러 응축수·블로다운수를 폐수로 적용함으로써 폐수량 급증 및 기업 부담 가중

↓

개선

인산염(P2O5)청관제의 대체물질인 규산염(SiO3)청관제를 발굴·사용함으로써 수질오염도를 공업용수 수준으로 감소시켜 개선된 보일러 응축수를 불필요한 2차 처리 없이 우수관로로 직접 방류하도록 개선

충청북도

규제개선 배경

→ 응축수·블로우다운수의 폐수 적용으로 기업 부담 증가


보일러 블로우다운수 저장시설

간접냉각탑 및 보일러 블로우다운수는 2020년 이전까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배출량에서 산정을 제외하였다. 하지만 2020년 이후부터는 통합환경허가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 환경부 사전조사를 통하여 인산염청관제 사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인(P)이 함유되어 있음이 밝혀짐으로써 폐수배출시설로 적용하게 되었다.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에 유입시켜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전량 처리 후에 방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응측수·블로우다운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할 경우 폐수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공공폐수처리장의 설계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산업단지 입주공장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해야 한다. 때문에 폐수배출 기업의 증설이나 신규 사업장의 입지가 불가능해지고 폐수 유입관로 설치공사비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 부담도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규제개선 과정

→ 대체물질인 규산염(SiO3)청관제 발굴로 오염도 개선

충청북도는 2022년 10월부터 관련기업들과 함께 환경컨설팅을 운영하고 기업 애로를 해결해나갔다. 먼저 보일러 블로우다운수의 수질검사를 통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총인(T-P) 배출의 원인이 인산염(P2O5)청관제 사용으로 인한 인(P) 배출 때문임을 밝혀내었다. 따라서 대체물질로서 규산염(SiO3)청관제를 발굴하고 이를 사용하여 오염도 검사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환경기준으로 ‘매우 좋음(Ia)’등급임을 확인하였으며 총인(T-P), 총질소(T-N), 총유기탄소(TOC) 감소 등 수질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을 파악하였다. 보일러 블로우다운수 전기전도도 역시 식품용 규산염청관제 사용 전 1,000uS/cm에 비해 600~800uS/cm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과학적 분석자료를 근거로 충청북도는 규산염계청관제를 사용하여 오염도가 개선된 보일러 응축수를 불필요한 2차 처리 없이 방류하도록 개선하고 우수관로 직접 방류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수리하였다.

식품용 규산염청관제 사용 후 오염도 검사 결과

(단위 : mg/L)

시험항목 / 시료명	BOD	SS	T-N	T-P	n-H	구리	카드뮴	철	TOC	퍼클로레이트
보일러응축수	0.4	3.3	0.34	불검출	불검출	0.007	불검출	0.014	0.9	불검출
공 업 용 수	0.1	0.0	1.42	0.004	불검출	불검출	0.014	0.023	2.1	0.008
배출허용기준	10	10	20	0.3	5	3	0.1	10	15	0.3

결과 및 기대효과

→ 폐수이송 관로비용 및 인허가비용 크게 절감

규산염(SiO3)청관제(7,500원/L)는 인산염청관제(1,500원/L)에 비해 5배가량 높은 가격이 걸림돌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관내 기업협의체의 다량구매를 통해 납품단가를 4,500원/L으로 조정하여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켰다. 이제 불필요한 행정규제 개선을 통해 공공폐수처리장 용량 부족에 따른 유입 거부를 비롯하여 블로우다운 폐수 배출규제와 관련한 민원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번 사례를 토대로 LG화학 나주공장이 냉각탑 블로우다운수 방지시설 설치면제와 우수로 직접 방류 허가를 받는 등 타 시도에도 적극 전파되고 있다. 한편 충청북도는 한국환경연구원(KEI)의 분석 결과에 따라 폐수처리계통을 간소화함으로써 폐수관로공사비용, 공공폐수처리장 증설비용 등 불필요한 시설공사비용과 인허가 비용을 1천억 원 이상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선된 보일러 응축수의 우수관로 직접 방류



변화의 리더!
규제혁신을 말하다

Leader's Interview

불필요한 관로 설치비용 및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장려상 : 김진국

충청북도 환경정책과

Q 산업폐수 관리에 주목하게 된 배경은?

A 2020년 이전에는 용수와 제품이 직접 접촉이 없는 경우 인허가 대행기관 및 사업장 자체 해석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시켜 관리하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후 환경부에서 통합환경허가 대상의 사업장을 사전조사할 때 인산염청관제 사용이 원인이 되어 블로우다운수에 수질오염물질 인(P)이 함유되어 있음을 인지하였고 그에 따라 폐수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그와 관련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Q 응축수·블로우다운수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A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변경신고) 인허가 간소화와 불필요한 경비의 절감입니다. 폐수(블로우다운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까지 이송할 경우 관로 설치 공사 비용이 수천에서 수십억 원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비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과학적 자료 근거(방류수 수질기준 이내, 공업용수 수준)로 블로우다운수의 불필요한 2차 처리 없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도 주관 환경컨설팅의 주요 활동내용을 소개한다면?

A 도내기업이 보일러 응축수, 블로우다운수 폐수 적용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인허가 부서, 사업장, 환경전문엔지니어기업,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활동 내용은 현황 및 수질분석, 대체약품 발굴과 현장적용, 대체약품 적용 후 수질변화 분석 및 하천에 미치는 영향 분석입니다. 그리고 대체약품인 규산염 청관제 납품단가를 40% 저감시켜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킨 것도 성공적인 활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규제개선으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는?

A 먼저 수생태계 측면에서 보면 부영영화의 지표 오염물질인 총인(T-P) 배출량 저감입니다. 기존의 인산염청관제 사용에 따른 블로우다운수의 총인(T-P) 농도는 0.08ppm 정도 였는데 규산염 청관제 전환 후 총인(T-P) 배출농도는 0ppm으로 저감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 절감 효과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기업의 폐수이송관로 설치비용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블로우다운수를 인근 우수로에 배출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공공폐수처리장의 증설이 필요 없게 되어 국비예산이 절감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의 A박사는 충청북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필요한 시설공사 비용을 1,000억 원 이상 절감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소감 한 마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접근해서 인허가 부서가 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고자 시작했던 업무가 '적극행정'이란 감투를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업무를 추진할 때 공무원으로서 가장 두려운 존재인 '감사'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방류수 수질 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어 하나의 틀을 깬다는 것에 큰 중압감이 있었고 이 일을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고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기업과 민원인 입장에서 관련업무를 다시 생각하여 신뢰받는 공직문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PART IV

25건의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펼친 적극행정의 결과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주민 생활편의를 제고하여 삶의 질을 높인 사례들로서
추진과정의 노력, 개선효과, 확산가능성을 감안하여 선정됩니다.

➔ 1. 기업경영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경상남도 합천군,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 2. 주민 편익 증진 및 사회적 가치 제고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청도군, 광주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 3. 행정절차 간소화 및 효율화

경기도 안양시, 경상남도 남해군, 경상남도 창원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라북도 정읍시,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북도 청주시



☆☆☆

경상남도 합천군

농업생산기반시설물 관리 및 농업용수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Brief Report

현황

농업생산 기반 시설물의 관리 주체 이원화로 시설물 이용자인 농민들의 불편 발생

↓

개선

상생협의체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전반적 수리시설 문제에 대해 협력하고, 상시소통창구 운영을 통해 농업생산시설물 관리 및 농업용수 관련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농민 불편 해소

규제개선 배경

→ 시설물 관리주체가 달라 민원대응 및 처리과정 불편

농촌지역에는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관정 등 다양한 농업생산 기반시설물이 있으며 주된 관리주체는 지방자치단체와 농어촌공사이다. 따라서 농업생산 기반시설물의 개보수 및 농업용수 공급은 시설물 관리주체에 따라 합천군(읍·면사무소 포함) 또는 농어촌공사에 민원을 제기해야 한다. 그런데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시설물 이용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디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주로 읍·면사무소로 연락을 하게 된다. 이때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농어촌공사인 경우가 적지 않아 즉각적으로 민원응대를 하기 어렵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여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실제로 시설 수는 지자체가 81%로 더 많지만 관리면적은 농어촌공사가 70%로 더 넓다. 또한 민원 접수 후 처리결과에 대한 소통 부재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군민 누구나 쉽게 불편사항을 신고하고 건의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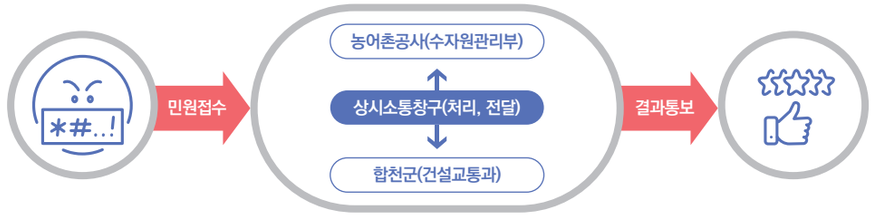
계	계		농어촌공사		지자체	
	시설수	면적(ha)	시설수	면적(ha)	시설수	면적(ha)
농업생산 기반시설 (비율/%)	73,461 (100%)	682,728 (100%)	14,170 (19%)	476,035 (70%)	59,291 (81%)	206,693 (30%)

규제개선 과정

→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상시소통창구 운영

경상남도 합천군은 '농업생산시설물 관리 및 농업용수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2023년 1월, 상시소통창구 운영을 위한 읍·면·농어촌공사의 의견을 수렴한 뒤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상시소통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합천군, 합천군의회, 농어촌공사 및 주민대표 등 14명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연 2회 이상 모여 농업용수 공급과 전반적인 수리시설 현안문제에 대해 함께 협력하고 의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후 합천군 농업생산 기반시설 수리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농업용수 공급 관련 민원 현장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농민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상시소통창구 운영



결과 및 기대효과

→ 운영 후 200건 이상의 농업용수 민원을 원스톱 처리

상시소통창구는 농업생산 기반시설 민원접수 창구로 농어촌공사의 수자원관리부와 합천군의 건설교통과가 협업으로 운영한다. 민원이 접수되면 합천군 및 농어촌공사의 시설관리자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처리한 뒤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직접 통보 처리한다. 2023년 2월 운영을 시작한 상시소통창구는 현재까지 200건 이상의 농업용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행정 신뢰도를 높여왔다. 또한 합천군은 앞으로도 관련기관 및 관계자 협의를 통해 가뭄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합천군-한국농어촌공사 업무협약

수질개선과 062-613-4291

☆☆☆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입주기업 초기 공공폐수처리비 감면으로 **경영환경 개선**

Brief Report

현황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낮은 가동률과 소규모 용량으로 처리단가가 높아져 과다한 사용료 청구

↓

개선

전국 최초로 적극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에 대한 오·폐수사용료를 하수도 요금 기준으로 감면 지원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낮추고 신뢰성은 높여 기업생산활동 및 투자의욕 고취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규제개선 배경

→ 형평성에 어긋난 과다한 오·폐수 사용료로 기업 부담 가중

평동3차 산업단지 지역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는 「광주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21조에 따라 입주기업 등 원인자 부담으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용량과 산업단지 초기 낮은 시설 가동률로 인해 상대적으로 처리단가가 높은 탓에 사용료가 과다하게 청구되었다. 이는 입주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면서 투자와 생산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반면 평동1차·평동2차·하남·진곡산업단지는 오·폐수 사용료를 하수도요금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어 서로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광주광역시는 이에 대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사용료 부과현황(2022년)

(단위:천원)

구분	1단계용량 (현유입량)	합계		'22. 5월분 까지		6월분 부과		7월분 부과	
		부과	감면 (오수)	부과	감면 (오수)	부과 (폐수)	감면 (오수)	부과 (폐수)	감면 (오수)
합계	-	137,872 (40,344)	333,022	34,925	183,283	46,679 (22,020)	75,761	56,268 (18,324)	73,978
평동3차	550㎥/열 (260)	54,317	271,129	34,925	183,283	9,301	50,750	10,091	37,096
빛그린	2,000㎥/열 (710)	83,555 (40,344)	61,893	-	-	37,378 (22,020)	25,011	46,177 (18,324)	36,882
에너지밸리	1,000㎥/열 (400)	-	-	시	운	전	중		

6월 빛그린 사용량 **폐수** 9,124(GGM 9,124), **오수** 11,032(GGM 4,299)

7월 빛그린 사용량 **폐수** 10,611(GGM 10,611), **오수** 28,754(GGM 5,436)

규제개선 과정

→ 전국 최초, 조례 개정으로 오·폐수 처리비용 감면

광주광역시는 간담회를 실시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평동3차 산단 오·폐수처리 사용료 감면에 대한 검토 및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2022년 1월 신속하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를 개정하여 전국 최초로 오수(생활하수)처리 사용료를 하수도 요금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9월에는 폐수처리 사용료 확대 개정을 추진하여 마찬가지로 하수도 요금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 8월 사용료 기준, 1개 기업체(소)당 월 375,000원의 오수처리 사용료를 지원하였고 폐수처리 사용료 또한 조례개정 시행 후 1개 업체에 10,271,000원의 금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 전후 사용료 환산 비교(2022.8월분 기준)

(단위:천원)

규제개혁 (조례개혁)	대상 (기업체등)	지원금액 (감면)합계	오수처리 사용료		비고
			시행전	시행후	
사용료(오수)	195개소	73,081	103,458	30,377	

결과 및 기대효과

→ 기업의 부담 해소로 기업생산활동 및 투자 활성화

월별 운영비 집행금액을 반영하여 유동적이었던 오·폐수처리 단가를 하수도요금 단가로 적용하여 사용료를 부과함에 따라 입주기업들의 부담은 크게 해소되었고 신뢰도는 높아졌다. 이는 인정적인 기업운영을 통한 기업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 확대로 이어져 지역 투자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산업단지 입주가 활성화되고 공공폐수처리설 가동률이 상승할 경우 지원금액은 감소하겠지만 사용료 지원을 받는 기업체는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규제개선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한 모범적인 사례로 산업단지가 많은 타 시도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과 053-803-5264

대구광역시

최소 설하중 기준 적용 완화로 **산업단지 지붕에 태양광 설치**

Brief Report

현황

최소설하중 건축규제 강화로 3조 원 규모 친환경산업단지 조성 민자사업의 투자철회 위기 발생

↓

개선

지역별 적설량 및 해외기준 사례, 평가보고서 등의 자료로 협의 끝에 지역별 적설량 및 적설빈도에 따라 최소설하중을 다르게 적용할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추진 정상화 및 지역매출 증대효과 기대

규제개선 배경

→ 최소설하중 하한치 규정 강화로 건축물 구조보강비 증가



스마트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업무협약

2022년 12월 대구광역시는 한화자산운영(주)과 「대구스마트 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사업의 MOU를 체결하였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공장지붕 및 유휴부지에 1.5GW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민자 3조 원 규모의 사업이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건축물 구조보강비 과다로 인한 사업성 저하로 투자철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2022년 10월 개정된 건축구조기준에 의해 최소설하중 하한치가 0.5kN/㎡에서 1.0kN/㎡으로 2배가 상향되었기 때문이다. 개정 전에는 지역별 적설량·적설빈도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지역별 적설량·적설빈도에 따른 구분 없이 일괄 적용함에 따라 태양광 설치 시에 건축물 구조보강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대구광역시는 투자철회 위기에 놓인 태양광 프로젝트를 재개할 방안을 찾아야만 했다.

규제개선 과정

→ 지역별 적설량에 따라 최소설하중 구분 적용 근거 마련

대구광역시는 2023년 1월부터 신속하게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에 규제개혁을 신청하고 최소설하중 기준 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센터,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을 방문하여 협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해외 구조기준 개정방향 사례와 지역별 100년 주기 적설량 및 적설빈도 자료 등을 통해 지역구분 없는 일괄상향의 불합리성을 강조하였다. 그 결과 4월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붕에 작용하는 설하중의 영향이 지붕의 최소활하중(1.0kN/㎡)보다 크지 않을 경우에는 하중조합을 고려한 구조설계 시 '4. 설하중'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었다.

결과 및 기대효과

→ 구조보강비용 2,691억 원 절감, 지역매출 1조 원 증대 예상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과 함께 지역별 적설량 및 적설빈도에 따라 최소설하중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대구광역시는 좌초 위기에 놓였던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약 2,691억 원의 구조보강비용이 절감되고 지역기업 일자리 창출을 통해 약 1조 원의 지역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연간 95만 톤의 CO2 감축으로 온실가스를 약 10.6%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광역시는 향후 지역별 모든 건축물 축조 시에 구조보강비 부담이 합리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광역협력담당관 053-803-6172

☆☆☆

대구광역시

혁신도시 입주기업
기숙사 규제 해소

Brief Report

현황

신서혁신도시 내 공장 부속건물에 해당하는 기숙사 입주 승인이 불가하여 기업 애로 발생

↓

개선

소관부서별로 적극적인 관련법령 검토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유연하게 해석하여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기숙사 건립이 허용되어 향후 기업투자 유치 및 청년인구 유입과 함께 혁신도시 활성화 기대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규제개선 배경

→ 혁신도시 내 기숙사 입주 승인 불가로 투자유치 난항

대구광역시는 ㈜덴티스와 401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신서혁신도시는 도심에서 멀고 교통여건이 좋지 않아 신규 직원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 공장부지 내에 기숙사를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혁신도시 내의 주택용지는 이미 분양이 완료되어 기업의 사택 건립이 불가능하므로 ㈜덴티스는 공장의 부속용도로 직원복지용 기숙사 건립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대구광역시는 ㈜덴티스의 입주 승인을 신청하고, 전국 혁신도시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 규제 완화 간담회에 참석하여 규제 개선을 건의하였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준에 따라 의료R&D 클러스터 용지 내에 공장은 입주할 수 있지만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승인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견지하였다. 이에 따라 신서혁신도시 입주기업의 인재 채용 및 입주에 애로가 발생하게 되었다.

(주)덴티스 대구 제3공장 설립 투자협약



규제개선 과정

→ 여러 관련법을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 기준 개정

2023년 3월, 대구광역시는 관련 부서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소관부서별로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법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공장 기숙사가 아닌 공동주택을 불허하고 있으며 법률 취지상 공동주택은 아파트, 빌라 등 주거용도이므로 기숙사 설치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에 대구광역시의 입주기업 기숙사 승인 입장을 통보하고 불허용도인 공동주택에서 종업원 복리후생 용도의 기숙사를 제외하도록 개선을 요청하였다. 2023년 4월,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지구단위계획 기준 개정이 시달되었고 ㈜덴티스 입주승인이 완료되었다.

결과 및 기대효과

→ 규제개선으로 기업 투자유치 및 청년인구 유입

이번 규제개선은 관련법령을 적극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유연하게 해석한 것이 주요했다. 지구단위계획에 명시적으로 불허함을 규정하지 않았으며 관련 법에도 저촉사항이 없고 오히려 허용하고 있으므로 법 취지상 공동주택과 기숙사는 별개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의 지리적 위치 및 교통여건의 불편에 따른 청년 인재 채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입주기업의 기숙사 건립이 허용되면서 대구광역시는 401억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규제 걸림돌이 해소됨에 따라 향후 기업 투자유치 및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청년인구 유입을 통해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신서혁신도시 전경 (자료출처:영남일보DB)



미래전략과 042-611-6013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업실증 지원 대상을 **전국의 중소벤처기업으로 확대**

Brief Report

현황

테스트베드 지원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지만 관외 소재 기업 및 연구기관에 대한 참여 제한으로 개발 기술의 실증 장소와 기회 부족

↓

개선

지원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의 실증수요기관에게 문을 개방하고 행정데이터, 참여자 모집 등의 행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테스트베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전국 중소기업의 실증수요 충족

규제개선 배경

→ 관외 혁신기술 기업들의 실증 장소 및 기회 부족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혁신기술의 성능 및 효과 실증에 필요한 공공인프라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2월 전국 최초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에서는 지원대상을 관내 기업과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의 연구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소재한 혁신기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들은 개발한 기술을 실증할 장소와 기회의 부족으로 기술 고도화와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혁신기술 기업들로부터 제기된 애로사항을 청취한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테스트베드 운영을 이전보다 더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규제개선 과정

→ 테스트베드 지원조례 개정으로 전국 중소기업 실증수요 충족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미국에서 개최된 CES(기술전시회)를 참관하던 중 국내 참여기업들과의 대화를 통해 기업들의 실증 관련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할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소재지 관내 제한을 없애고 전국의 기업 등에게 테스트베드 활용 기회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따라서 의회와 협력하여 2023년 3월 테스트베드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조례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즉 유성구 공공인프라 자원의 활용대상을 전국 실증수요기관으로 확대하고 공공인프라 지원에 한정되었던 지원내용을 행정데이터, 실증에 필요한 참여자 모집 등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테스트베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전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증수요를 충족시키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테스트베드 지원 조례 개정



결과 및 기대효과

→ 기업 유치 및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기대

조례 개정과 함께 타지역 소재 기업의 관심 및 지원도 늘어났다. 2023년에는 대전시 서구와 천안시 등 관외 기업의 테스트베드 제안 참여 및 검토가 이루어졌고, 천안시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테스트베드 지원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실증하기 좋은 환경은 다시 기업 유치로 이어지면서 지역 혁신의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국의 우수한 혁신기술들을 행정업무와 연계·활용하여 체감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유성구는 기대하고 있다.



테스트베드 운영 업무협약

부산광역시 금정구

일반공업지역 전국 최초 '중소기업특별지원 지역' 선정

Brief Report

현황

산업시설 노후화, 경영난 악화 등으로 폐업 위기에 놓였지만 준공업지역에 해당되어 정부지원 미비

↓

개선

설문조사, 지역현황 분석, 유관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간담회 개최 등 체계적인 추진 과정을 거쳐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어 기업경영의 정상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규제개선 배경

→ 준공업지역으로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금사공업지역

1960년대 준공업지역으로 조성된 금사공업지역은 1960~1970년대에 호황을 누렸으나 산업시설의 노후화, 인력의 고령화, 코로나19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다. 1990년대 방식의 산업구조, 자체적인 신기술 개발의 한계 등으로 현재의 생산방식 및 기반시설로는 향후 전반적인 산업의 쇠퇴와 경영·재정의 악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근에 첨단산업단지가 구축되면서 공장 등의 사업체가 이전하고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어 고용상의 어려움도 겪고 있다. 하지만 금사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에 해당하여 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지원 혜택이 미비하고 내·외부적인 문제로 인해 중소기업의 폐업이 지속되고 있다. 기존 산업단지가 아닌 일반공업지역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원사업의 대상, 요건 등에서 세부적으로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통해 기업 도산의 위기에 직면한 금사공업지역 중소기업의 활로를 모색해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활성화 추진단 발대식 개최



금사공업지역 공장 현황

규제개선 과정

→ 일반공업지역 최초로 특별지원지역 지정으로 재도약 기회 마련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지역 내 업체들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지정 신청에 주력하기로 했다. 2022년 6월, 관련 회의를 개최하여 지정조건 완화 및 확대를 통한 지정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하였고 지역·사업체현황 파악,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끊임없는 소통 및 자료검토를 진행하였다. 또한 금사공업지역 내 주민·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부산 중기청 등 유관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간담회도 진행하였다. 이처럼 체계적인 추진과정을 거쳐 신청한 결과 2023년 1월 일반공업지역으로는 최초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다.



중소기업 특별지원구역 신규 지정

결과 및 기대효과

→ 기업역량 강화로 경영 정상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금사공업지역은 조세 혜택, 계약 우대를 비롯하여 자금·기술개발·판로 등 44개 사업지원 등의 사업우대 지원을 받게 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이를 계기로 금사공업지역 중소기업들이 내재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사업발굴 검토, 유관기관 연계, 기업역량 강화를 통해 경영 정상화 및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는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으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다시 활성화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서울특별시(서울교통공사)

유찰상가 합리적 예정가격 적용으로 **소상공인 사업 참여 편의 증진**

Brief Report

현황

물가, 인건비 등 영업환경의 악화로 지하철역 상가의 소상공인 중도해지 증가 및 입찰 의지 저하

↓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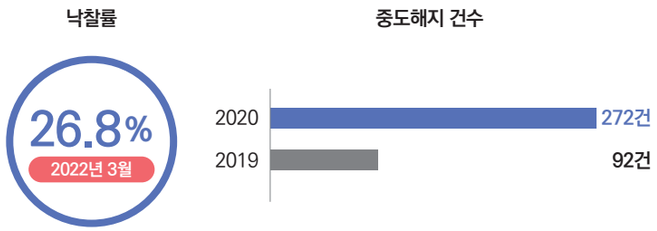
2회 유찰 시부터 5번까지 예정가격 10% 감소방안을 적용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입찰 단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기업 및 소상공인 상가 입찰 참가율을 높이고 소비·구매 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서울교통공사 Seoul Metro

규제개선 배경

→ 적극적 상가입찰 참가를 위한 합리적인 예정가격 필요

서울교통공사는 입찰을 통해 1~8호선 역사 내 상가를 임대·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및 소비행태 변화 등에 의해 유찰 또는 중도해지가 증가하였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임대료 감면사업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등으로 인한 영업적자가 상승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실제로 감면 전 2019년 연간 92건이었던 중도해지는 감면 후인 2020년 3월부터 1년간 272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임대상가 입찰 시에는 초기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나 2022년 3월의 경우 낙찰률이 26.8%일 정도로 저조하여 계속적인 유찰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의 사업성공 기회와 지역시민의 소비기회가 감소되고 있어, 적극적인 입찰 참가를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예정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였다.



규제개선 과정

→ 2회 유찰 시 10% 감액 후 예정가격 적용으로 입찰 활성화

서울교통공사의 부대사업처는 합리적 예정가격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상가 4회 유찰 시에 재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예정가격을 적용해왔으므로 6~12개월의 공실이 발생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었다. 이를 2회 유찰 시부터 5번까지 10%로 감액하여 예정가격을 적용한다면 공실이 1~3개월로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방안을 토대로 2021년 4월 관련 안건을 서울시 사전컨설팅에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위배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도 실시하였다. 2022년 7월, 자문 결과를 참고한 서울시의 컨설팅 회신과 함께 12월에는 상가관리규정 개정을 통한 합리적인 예정가격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상가 입찰에 관한 합리적인 예정가격 적용 방안

현 행		개선(안)
4회 유찰 시 감정평가 재의뢰하여 기초가격 변경 후 새로운 입찰 진행	제5조	• 2회 유찰시 기초가격 100분의 10 감액 조정하여 새로운 입찰 진행 • 단, 새로운 입찰은 5회까지 가능
현행 입찰절차		**개선 후 입찰절차**
유찰(1회)/기초가격 100원 • 유찰(2회)/기초가격 100원 • 기초(3회)/기초가격 100원 • 유찰(4회)/기초가격 100원 • 재감정평가 실시 → 6~12개월 공실상가 발생		**최초 입찰(기초가격 100원) 2회 유찰** • 새로운 입찰(기초가격 90원) 2회 유찰 • 새로운 입찰(기초가격 81원) 2회 유찰 • 새로운 입찰(기초가격 72원) 2회 유찰 • 새로운 입찰(기초가격 64원) 2회 유찰 • 새로운 입찰(기초가격 57원)

결과 및 기대효과

→ 입찰 참가율 제고 및 소비자의 구매기회 확대

예정가격은 무엇보다 수요와 공급이 맞는 수준에서 형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 입찰 참가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찰가격이 현실화됨으로써 소상공인의 기대 수익률도 더불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상공인에게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해줄 뿐 아니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구매기회를 확대해줌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첫 '공공토지비축사업' 활용

Brief Report

현황

울산하이테크밸리는 경기침체 및 지가 상승으로 인해 사업성이 악화되어 장기간 사업 중단 위기

↓

개선

공공토지비축사업에 신청·협의한 끝에 일반산업단지로는 최초로 사업에 선정되어 하이테크밸리 2단계 조성사업에 착공하였으며 10년 간 5조5천억 원의 생산고용유발효과 및 4만9천 명의 고용유발효과 기대

규제개선 배경

→ 지자체의 일반산업단지는 공공토지비축 대상에서 제외

울산하이테크밸리는 2007년 산업단지로 지정된 이후 경기침체 및 지가 상승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인하여 장기간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사업추진방안을 고민하던 울산광역시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공공토지비축사업에 신청하였다, 공공토지비축사업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장래에 이용·개발이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적기적소에 저가로 공급하는 수급관리시스템으로서 주로 국가산업단지나 도로·공원 등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지자체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일반에게 매각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일반산업단지를 공공토지비축 결정한 사례가 없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하지만 울산광역시는 비축대상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사업투자를 벗어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의 대규모 산업단지와 도심융합특구 등의 공공토지비축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규제개선 과정

→ 공공토지비축사업 선정으로 2단계 조성사업 공사 착공

울산하이테크밸리는 2020년 울산경제자유구역 및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 고시된 국가정책사업이다. 울산광역시는 이 점을 강조하여 2022년 1월 공공토지비축 신청을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를 방문하여 선정 필요성에 대해 설득하고 협의하였다. 그 결과 7월에 지자체 가운데 최대 규모인 575억 원의 공공토지비축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 3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동안 단계별 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공사비가 증액되어 사업비 부담이 컸으나 공공토지비축을 통해 5월에는 하이테크밸리 2단계 조성사업 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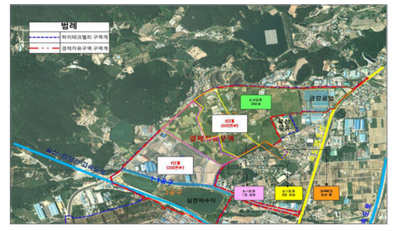


울산 HTV 일반산업단지 공공토지비축사업 업무협약

결과 및 기대효과

→ 10년간 5조 5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예상

울산광역시는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조기 착공이 가능해져 연간 50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산업단지의 조성이 완료되면 10년간 생산유발효과는 5조 5천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4만 9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고부가가치 사업인 자동차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등의 공장라인이 가동되면 이를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부가가치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해서는 미래형 첨단산업 및 소재·부품·장비산업 위주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므로 이번 선정은 공공토지비축 대상의 다양화와 함께 국도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이테크밸리 2단계 조성사업

산업단지의 조성 효과



농정국 농정과 033-249-2706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급방식 개선으로 사용편의 증진

Brief Report

현 황

매년 실물카드 재발급에 따른 사용자 불편, 카드제작비용 부담, 플라스틱 배출로 인한 환경문제 발생

↓

개 선

선불식 충전카드 대신 기소유 카드에 포인트 지급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사용자 편의를 높이고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며, 카드 제작에 대한 금융기관의 부담과 폐기 플라스틱 배출 부담도 해소

강원특별자치도

규제개선 배경

→ 선불식 충전카드 형태는 이용에 많은 불편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거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만 20~75세의 영농종사 여성을 대상으로 연간 20만 원의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좋은 취지 속에서도 여러 불편함이 제기되고 있었다. 매년 지원 대상자는 대부분 동일한 여성농업인이 선정됨에도 불구하고 매번 새로운 바우처 전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을 위해서는 대상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데 특히 농번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는 은행영업시간 내 방문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카드를 수령하지 못하거나 뒤늦게 발급받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은행의 경우는 매년 3만 개가 넘는 바우처 전용카드를 제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다량의 플라스틱 카드 제작과 폐기는 탄소중립 및 농업환경보전 실천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규제개선 과정

→ 전국 최초, 기존 카드에 포인트로 바우처 지급

복지바우처의 정책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용 측면에서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2023년 1월 관계기관 제도 개선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매년 선정되는 지원 대상자가 대부분 동일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개선방안은 빠르게 도출되었다. 즉 선불식 복지바우처 전용카드를 매년 새롭게 발급하는 대신 대상자가 소유한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안이었다.

이 경우 카드 수령을 위해 은행에 방문할 필요가 없이 기존 소유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3월, 사회보장제도 긴급 변경 협의를 요청하여 신속한 협의를 거치고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변경하였다. 이어 도·시군·NH농협은행 강원본부와 업무협약을 맺음으로써 2023년 2분기부터 변경된 지급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지침 변경

	변경(전)	변경(후)
신청절차	신청·선정 → 은행방문수령 → 사용	신청·선정 → 사용
지급방식	선불식 복지바우처 전용카드 매년 발급	대상자가 이미 소유한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사용편의		사용 금액 및 잔액 알림 서비스 제공, 가맹점 안내 등 편의 제공

결과 및 기대효과

→ 카드발급액·사용액 증가, 행정·재정적 부담 감소

개선된 제도에 대한 반응과 효과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지원대상자들은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카드 사용시기를 놓치는 불편함이 사라졌다. 무엇보다 카드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다음해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발생되는 민원이 해소되었다. 또한 포인트를 우선 차감하는 방식을 통해 불필요한 잔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이 편리하며 더불어 예산사업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매년 카드 신규제작에 대한 금융기관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줄어들며 사용 후에 폐기되는 플라스틱 배출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다. 제도 변경 이후 전년 대비 발급액이 26.1% 증가하는 성과를 거둔 강원특별자치도는 향후 설문 등을 통해 개선안에 대한 효과와 보완점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발급 및 사용현황 비교

구 분	변경(전) *'22.5.기준	변경(후) *'23.5.기준	증감(율)
확정인원	26,354명	29,868명	13.3%
발급금액	4,574,200,000원	5,768,800,000원	26.1%
사용액	1,452,664,067원	2,068,159,850원	42.4%

해양항만과 055-211-3919

☆☆☆

경상남도

무역항 선박속력 제한 완화로 **선박사고 예방**

Brief Report

현 황

장비 발달로 항해 안전 여건이 개선되었지만 최고 속력 5노트 이하 제한으로 오히려 안전 운항 저해

↓

개 선

전문기관의 의견 수렴 및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선박속력 제한구역 규정을 개정하여 통영항 구역 여객선 제한 속력을 8노트로 상향함으로써 여객선 승객의 편의 제고 및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

경상남도 GYEONGNAM

규제개선 배경

→ 5노트 이하의 선박속력 제한규정이 안전운항 저해

최근 어선은 감소 추세에 있는 한편 항해 장비는 발달하면서 항행 안전 여건이 많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항행 최고속력을 5노트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이 오히려 안전운항을 저해하고 있어 관련기관들로부터 규정 완화에 대한 요청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경상남도는 2022년 4월 남해해경청으로부터 통영항 선박속력 제한구역 조정 요청을 접수하고 본 건에 대한 전문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통영 감성돔자망자율공동체는 항주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박 규모에 따른 선박속력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여객선사·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여객선은 저속운항 시 배 항주파가 과다 발생하여 어선조업에 피해가 발생하며 정시성 확보와 승객편의를 위해 8노트 또는 10노트 이하의 속력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경상남도는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무역항별 선박속력 제한구역 위치



통영항(3개구역)



진해항 | 통영항(동호만) | 통영항(도남만) | 통영항(통영운하)

규제개선 과정

→ 선박속력 제한규정 개정으로 최고 속력 8노트로 상향 조정

경상남도가 한국해사컨설팅에 의뢰한 2022년 무역항 통항 안전성 평가 연구용역 결과 통영운하는 빠른 조류로 인해 항행 최고 속력 5노트 이하는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상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22년 6월에 1차적으로 통영항·삼천포항 선박속력 제한구역 조정안 마련과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며, 이어 11월에는 '무역항별 선박속력 제한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2월에 개정·고시하였다. 이로써 통영항 여객선의 항행 최고 속력은 5노트에서 8노트로 상향 조정되었다.

경상남도 무역항 선박속력 제한구역 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 무역항별 선박 항행 최고속력 …… 통영항 아래 선내의 경우에는 최대속력 5노트 이하로 운항하여야 한다.	제3조	제3조(선박속력 제한) ① …… 다만 별표1의 2. '통영항'은 8노트 이하로 운항하여야 한다.

결과 및 기대효과

→ 항주파 발생 감소로 선박사고 예방 및 승객편의 제고

항만의 여건과 선박 규모 등을 고려한 무역항별 선박속력 제한규정의 개정은 시의적절한 개선으로 평가받는다. 그동안 선박이 항해하면서 생기는 파도인 항주파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여객선의 경우 풍압면적이 넓어서 5노트 이하로 저속운항할 경우 배 멈춤과 출발을 반복하게 되므로 항주파가 과다 발생하여 어선조업에도 피해를 끼쳤다. 경상남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선박사고 예방과 무역항 내 질서 유지, 그리고 여객선 승객들의 편의 제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축과 054-480-5513

☆☆☆

경상북도 구미시

불법 난립하던 옥상 위 비가림시설 인·허가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정식건축물로 인정**

Brief Report

현황

옥상 누수를 해결하기 위한 비가림시설 설치 시 「건축법」상의 명확한 지침이 없어 전국적으로 불법 양산

↓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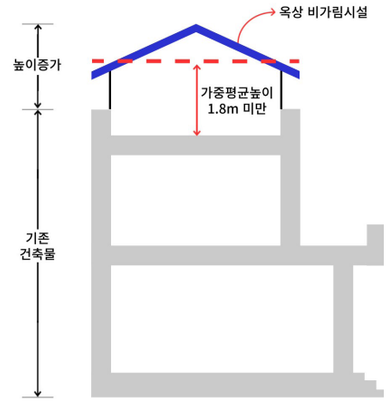
타 지자체 벤치마킹, 구조전문가 자문, 법령 및 질의회신 등을 검토한 후 긍정적인 법령 해석을 통해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이 아닌 영구건축물로 처리하는 구미시 자체 인·허가 처리방안 마련

규제개선 배경

→ 명확한 인·허가 기준이 없어 불법 양산되는 비가림시설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옥상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옥상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비가림시설은 옥상 누수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건축물이다. 하지만 비가림시설 설치 시에 「건축법」상의 명확한 지침이 없으므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불법으로 난립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조사 결과 타 지자체에서는 이 문제를 대부분 가설건축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설건축물이란 임시적·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며 전기·수도·간선 공급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비가림시설에 부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경상북도 구미시는 가설건축물이 아닌 정식건축물로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인·허가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비가림시설이 불법으로 양산되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였다.

비가림 시설 예시



규제개선 과정

→ 전문가 자문 및 법령 검토를 통해 인·허가처리 방안 마련

구미시는 먼저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때 저해요인이 무엇인지 파악에 나섰다. 또한 2022년 9월에는 타 지자체들이 관련 문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벤치마킹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구조전문가의 자문과 법령 및 질의회신을 검토한 결과 비가림시설은 옥상 누수 해결을 위해 설치되는 영구건축물로서 가설건축물과는 다르며, 가설건축물은 법령 제외가 많아 구조안전, 내화구조, 대지 안의 공지 등 주요한 법령 검토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유연한 법령 해석을 통해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이 아닌 정식건축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체 인·허가 처리방안을 마련하였다.

결과 및 기대효과

→ 정식건축물로 제도권에 편입시켜 시민 불편 해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비가림시설에 대한 구미시의 인·허가 처리방안은 긍정적인 「건축법」 해석을 통해 불법 건축을 정식건축물로서 제도권에 편입시켰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안전과 화재에 대한 주요 법령을 검토하고 동시에 건축물 주변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조에 대한 검토도 시행하였다. 그 결과 타 지자체의 처리방안인 가설건축물이 아니라 대지 안의 공지 검토가 가능한 정식건축물로 규정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었다.

비가림시설 인·허가처리 방안



노인장애인복지과 054-840-5255

경상북도 안동시

경로당 맞춤형 간편 회계서식 보급으로 **지역공동체 기반 강화**

Brief Report

현황

복잡한 경로당 회계처리 절차와 기준에 따른 보조금 사용방법 미숙 등으로 반납·환수 사례 발생

↓

개선

회계처리 간소화를 통해 수입 및 지출결의서를 국비, 도비, 일반 등 3종으로 구분하고 해당 건명 네모칸에 체크란을 삽입하여 체크만 하도록 함으로써 어르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개선

안동시

규제개선 배경

→ 고령 임원들의 보조금 사용 미숙 등으로 보조금 반납·환수

2020년부터 경로당 운영예산 체계가 변경되면서 국도비 지원금이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보조금 사용 방법이 미숙하거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해 반납 및 환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경상북도 안동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경로당별 지출결의서 양식이 서로 다르고 회계장부 미작성, 영수증 미첨부 등으로 경로당에서 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경로당은 고령의 임원들이 대다수이므로 복잡한 경로당 회계처리 절차와 기준, 증빙서류 구비 등의 업무 부담으로 인해 총무 역할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때문에 마을 이·통장이나 경로당 회장이 총무를 겸임하는 경우도 있다. 안동시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액의 회계 부정, 고의·상습적인 회계 부정, 오지출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규제개선 과정

→ 경로당 맞춤형 간편 회계서식 3종 제작으로 문제점 개선

안동시는 경로당 운영비의 회계 지출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례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의 임원도 누구나 쉽게 회계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를 간소화하였다. 경로당 맞춤형으로 자체 제작된 간편 회계서식은 먼저 수입·지출결의서를 국비냉난방비, 도비운영비, 일반통장 등 3종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해당 건명이 기재된 네모 칸에 체크란을 삽입하여 체크만 하면 되도록 편리하게 개선하였다. 안동시는 개선된 서식에 대해 회장, 총무 등 경로당 임원을 대상으로 작성방법을 안내하고 회계 교육을 실시하여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간소화된 수입·지출결의서



결과 및 기대효과

→ 투명한 회계처리 및 회계서류 작성의 어려움 해소

안동시는 회계처리 간소화로 회계서류 작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투명한 회계처리에 한발 다가섰다. 이를 통해 경로당 회계처리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였으며 회계 운영의 부적절한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여 회원 간의 회계 분쟁과 갈등을 차단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하였다. 안동시는 맞춤형 지출결의서 양식을 경로당에 배부하고 홈페이지에도 공지하여 관내 등록한 경로당 어디나 동일 양식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 사례는 경북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공유되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각 지자체 경로당의 회계처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건설과 054-370-6337

☆☆☆

경상북도 청도군

소하천 구역 인근 토지 활용
민원에 대해 규제가 덜한 법령 적용

Brief Report

현황

하천부지(구역 외) 점용·사용에 관하여 불법시설물, 용도폐지, 이해관계자 간의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

↓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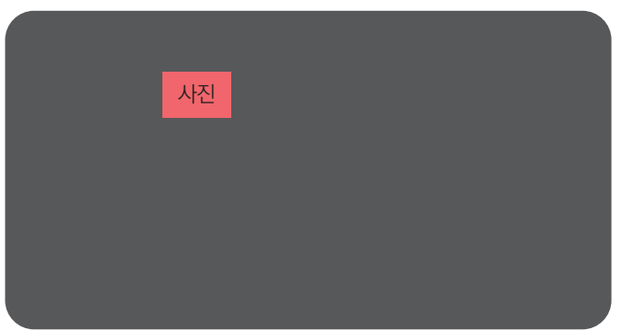
타 지자체 사례 및 대법원 판례를 조사하고 하천구역 외의 토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사전컨설팅 등에 질의를 통해 「공유수면관리법」 적용사항임을 확인한 후 공유수면으로 전환 추진

청도군

규제개선 배경

→ 하천부지의 점용·사용에 관한 이해관계자 간 분쟁 발생

하천부지(구역 외) 점용·사용에 관하여 불법 시설물의 설치, 용도폐지, 이해관계자 간의 소송 등 다양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상북도 청도군은 하천구역 외 부지의 점용·사용 허가 시에 「소하천정비법」 규정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그 기준과 절차가 복잡하여 발생하는 문제로 파악하였다. 내부적인 검토 결과에 따르면 하천에 관한 법령은 크게 환경부의 「하천법」, 행정안전부의 「소하천정비법」,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나뉜다. 같은 하천부지여도 관련법에 따라 하천 활용행위에 대한 제약사항의 차이가 큰 편이며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에 비해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업무추진·민원처리를 할 경우 비교적 처리기준과 규제 허들이 낮은 편이다. 이처럼 소관업무에 대한 법률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규제개선 과정

→ 대법원 판례, 상위기관 질의를 거쳐 「공유수면관리법」 적용

경상북도 청도군은 정비가 완료된 소하천이나 아직 미정비된 소하천과 관련하여 점용·사용 허가 및 용도폐지 신청, 불법시설물 철거 등의 소관업무에 대한 법률 적용대상이 「공유수면관리법」 인지에 관한 검토를 시작했다. 먼저 타 시군구의 업무 적용 사례와 대법원 판례를 조사하였다. 또한 하천구역 외의 토지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법」적용대상인지를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사전컨설팅 등에 질의하였다. 이후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청도군은 하천구역 외의 토지에 대하여 주민들이 경작 등의 목적으로 점·사용 신청을 할 경우 「소하천정비법」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기준이 유연하고 제약사항이 적은 「공유수면관리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임을 확인하였다.

결과 및 기대효과

→ 관련 분쟁 사전예방 및 행정처리의 완료성 증가

청도군은 기존의 하천구역 외 점용·사용 부지에 대해서는 읍면별 또는 민원 다수 발생지역 등 순차적으로 공유수면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처리기준이 완화되면서 관련 신규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처리를 명확하게 완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존의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상위기관 법령 질의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편리하고 유리한 방법을 모색하여 민원을 처리한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청도군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정비가 완료될 경우 폐천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국유재산법에 따라 용도폐지를 실시하여 군민들의 토지 활용을 증대할 계획이다.

고령사회정책과 062-350-4939

☆☆☆

광주광역시 서구

휠체어 탑승자동차 지원대상 확대로 **장애인 이동권 신장**

Brief Report

현황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대상자가 만65세 이상 고령자로 제한되어 있어 장애인 이용 불가

↓

개선

장애인의 이동권 신장을 위해 이동불편의 범위에 장애인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자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를 신속하게 개정하여 불편 해소

광주광역시 서구
GWANGJU CITY SEOGU

규제개선 배경

→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이용연령 제한 개선 필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는 이동불편자의 이동과 여가 활용 지원을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자동차 공유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용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로 한정되어 있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광주광역시 서구는 장애인의 경우 교통약자 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그동안 공유서비스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교통약자 택시 서비스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해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광주광역시는 관련 사안에 대해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개선 과정

→ 조례 개정으로 자동차 공유 대상자를 확대하여 편의 제공

장애인의 불편 사항을 인식한 광주광역시 서구는 장애인의 이동권 신장을 위해 이동불편자의 범위에 장애인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2022년 12월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자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를 신속하게 개정하였다. 개정된 조례에는 이동불편자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대상자를 고령자에서 노인 및 장애인(이동불편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로써 교통약자 택시 서비스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 장시간 기다려야 했던 불편함을 전격 해소하였다.

결과 및 기대효과

→ 이동불편 해소로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 기회 확대

조례 개정을 통해 이동불편자의 범위에 장애인을 포함한 사례는 현장의 고충에 적극 귀 기울이고 빠르게 대처방안을 모색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한 결과이다. 이처럼 장애인들의 이동 불편이 해소됨에 따라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나게 되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 이번 조례 개정은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 구현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기준을 신설하여 **복지수혜 형평 제고**

Brief Report

현 황

해운대구 장학기금을 저소득층 재학생에게만 지급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불평등

↓

개 선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규제를 해소하였으며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제개선 배경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제외로 불평등 초래

교육환경 및 사회구조 변화 등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2021년 8월 기준 2,609명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그 중 해운대구는 499명으로 부산시 전체의 19%를 차지하여 16개 구·군 중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복리 증진과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경우는 2000년부터 장학기금을 설치하여 저소득층 또는 소득 단절로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중·고·대학생으로 한정하여 지급해왔다. 하지만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이 제외되어 있어 교육 지원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소외감을 형성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규제개선 과정

→ 조례 개정을 통해 장학금 지원 근거 마련 및 시행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장학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내부적인 협의와 토론을 통하여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하고 2022년 1월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해운대구는 2022년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검정고시에 합격한 총 37명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였다.

검정고시 합격 청소년 대상 장학금 지원 내역

지원 시기	지원 대상	지급 일시
2022년 상반기	10명	2022. 05. 19.
2022년 하반기	27명	2022. 11. 28.

결과 및 기대효과

→ 관심·공감·배려하는 청소년문화 조성으로 사회적 가치 증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학금 지원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다변화된 교육여건에 호응하여 사회적 관심과 함께 공감하고 배려하는 청소년문화를 조성하는 데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해운대구는 증가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장학금 지원을 통해 누구나 교육 기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해운대구 장학금 전달식



서울특별시 성동구

반지하주택 침수 화재 위험
원천 차단 도전

Brief Report

현황

반지하주택의 복잡한 주거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 및 예산 마련이 어려워 체계적인 예방대책 필요

↓

개선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반지하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침수방지시설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거주자 심층면담 조사,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반지하 밀집지역 방역소독 등 거취약계층의 안전 강화

성동구 스마트포용도시

규제개선 배경

→ 반지하주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부재로 안전사고 증가

2022년 8월 중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시 반지하 거주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저지대 반지하주택에 많은 피해가 속출하였다. 반지하주택은 이를 비롯하여 생존을 위협하는 안전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하지만 사고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사고 발생 후 수습을 위한 응급적이고 단편적인 대책들을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반지하주택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도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의주의적인 표본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쉽지 않으며 지원근거나 지원부서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형편이다. 또한 기관 간의 협력이 미흡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주거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거나 관련 사업추진을 위해 대규모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매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통해 거주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규제개선 과정

→ 민·관 협력행정으로 반지하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서울특별시 성동구는 소방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사협회, 한국해비타트 등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협업 행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사업추진을 위해 30억 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반지하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주력하였다. 주거복지를 위해 성동구에서는 조직을 개편하고 성동구 주거 기본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신청도 여러 기관에서 신청받던 것을 주택정책과에서 한번에 총괄하도록 일원화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왔다. 현장에서는 먼저 2022년 9월부터 전문인력을 동원하여 재난재해 위험도가 높은 반지하주택을 전수조사하여 안전위험도를 파악하였다. 이어 침수방지시설 설치, 거주자 심층면담 조사,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반지하 밀집지역 방역소독,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2023년 9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처럼 1년에 걸친 선제적인 예방조치를 통해 성동구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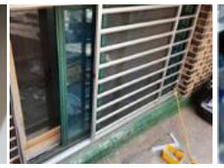
침수방지시설 등 설치 사진



차수판



역지변



개폐식방범창



침수경보기



화재경보기

결과 및 기대효과

→ 거주자의 최저주거기준의 상향 및 생명·재산 보호



성동구-성동소방서 업무협약

이번 반지하주택 실태조사는 1%의 표본조사가 아닌 전문가에 의한 100% 전수조사라는 데 의의가 있다. 모든 수요자의 요구를 적극 파악하여 주거 위험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기준과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민간기관과 타기관이 협업하여 각 기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시설·장비·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폭넓은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사후대책이 아닌 예방적 조치로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최저주거기준의 상향이라는 공동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성동구의 이번 사례는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대응과 032-509-8024

인천광역시 부평구

속 끊이던 군용철로변, 2년만에 철길정원으로 탈바꿈

Brief Report

현황

유휴 군용철로 부지가 관계기관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불법 경작, 무단 점유로 방치된 상황

↓

개선

국방부의 유연한 법령 해석 및 협의를 통해 부지 개방을 승인받았으며 이와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토지 사용권을 확보한 뒤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도시농업공간(철길정원)으로 조성

규제개선 배경

→ 관리 소홀로 불법 경작, 무단 점유되고 있는 유휴 군용철로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위치한 유휴 군용철로 부지는 국방부,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 간의 소유자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었다. 사업 추진의 주체가 불명확함에 따라 수년간 불법 경작, 무단 점유 등으로 인한 환경정비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및 사용부대인 제3보급단의 경우 무단 점유와 관련하여 단속과 관리가 미흡하였고, 또한 해당지역인 산곡2동의 차원에서는 이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는 국방부와 협의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부지 사용을 위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산곡2동의 유휴 군용철로 부지



철길정원에 조성한 도시농업공간 개장식





규제개선 과정

→ 국방부의 적극 협력을 통해 철길정원 조성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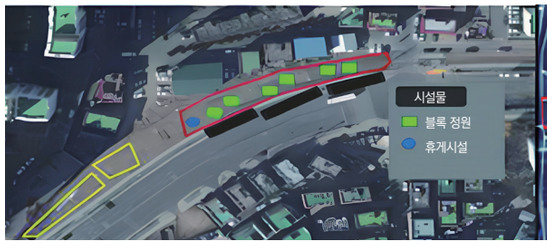
철길정원 조성을 위한 협약서 체결

산곡2동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2022년 4월 국방부에 전달되었다. 이후 시설단과의 실무협의를 거쳐 철로 주변의 관리 감독 강화뿐 아니라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상호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2023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의 도시농업공간 조성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부평구는 국방부, 국가철도공단을 대상으로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허가를 요청하고 철길정원 조성과 관련한 협의에 들어갔다. 이어 국방부의 유연한 법령 해석 및 적극적인 협력으로 철길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철도용지의 개방과 함께 안정적인 토지사용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어 민관합동으로 화양목 식재, 철길 주변 자갈 고르기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수년간 이어진 불법 경작의 문제를 해결하고 철길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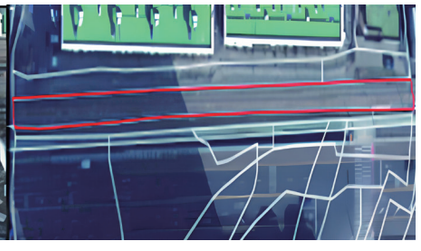
결과 및 기대효과

→ 자연친화적 정원 조성으로 유휴부지의 효율적 활용

철길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에는 군 개방시설 운영에 관한 지침을 부지활용이 가능하도록 한 국방부의 적극적인 해석과 협조가 주요했다. 또한 민·관·군 등 지역사회가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인천시 부평구는 유휴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연친화적인 정원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A구역(블록정원·휴게시설) 산곡동 247-8 등 10필지



B구역(철길따라 가는 길) 산곡동 288-1

자원순환과 031-8045-2257

☆☆☆

경기도 안양시

음식물류폐기물 2차 선별 공정
자체 개발로 국민의 불편 해결

Brief Report

현황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에서 나오는 침출수에 의해 심한 악취 발생

↓

개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년의 시행착오를 거쳐 획기적인 '2차 선별 공정'을 자체 개발함으로써 협잡물 발생량을 2019년 대비 58% 감소시켜 연간 3억 원의 예산 절감 및 시민 건강권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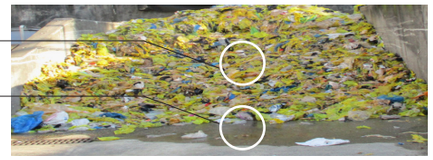
스마트안양

규제개선 배경

→ 협잡물의 침출수로 인한 심한 악취로 민원 증가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와 음식물종량제봉투의 조각이 섞인 협잡물이 발생하게 된다. 협잡물은 소각을 위해 외부로 반출하기 전에 불가피하게 임시로 적재하여 보관하는데 이때 음식물쓰레기에서 흘러나온 침출수에서 심한 악취가 나게 된다. 이로 인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협잡물 위탁처리 업체의 수거 빈도가 늘어나고 있지만 업체 역시 악취 때문에 처리를 기피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업체의 부담이 가중되어 처리비용이 인상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협잡물의 안정적인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감염 예방을 위해 협잡물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처럼 처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선별되지 못한 음식물 잔재 및 침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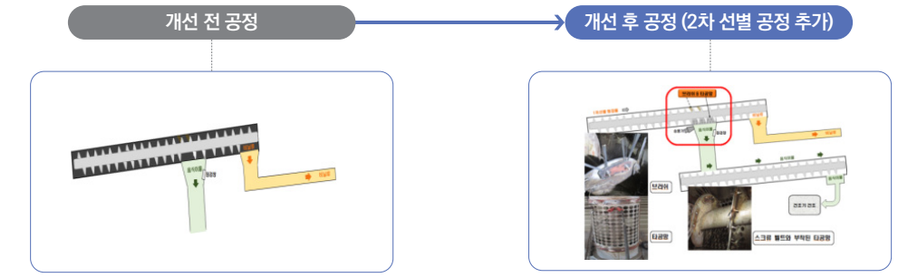


규제개선 과정

→ 2차 선별 공정 개발로 안정적인 협잡물 처리

고심 끝에 안양시가 내놓은 해법은 협잡물을 자체 소각 처리하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16차례에 걸쳐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로 좌절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증축하고자 하였으나 군사시설규제로 인해 또다시 실현되지 못했다. 결국 안양시는 음식물류폐기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협잡물의 선별공정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부터 3년간 수십 차례의 개선시도와 시행착오를 거친 안양시는 2023년 3월 마침내 '2차 선별 공정'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였다. 컨베이어의 스크류와 베이스 사이의 넓은 공극에 브러쉬·타공망·송풍기를 설치한 것인데, 스크류 벨트에 부착된 브러쉬가 타공망에 붙은 비닐을 털어준 후 이를 송풍기 바람을 통해 컨베이어 벨트로 보내는 방법이다. 안양시는 이 획기적인 2차 선별 공정에 대해 특허 출원을 하였다.

2차 선별 공정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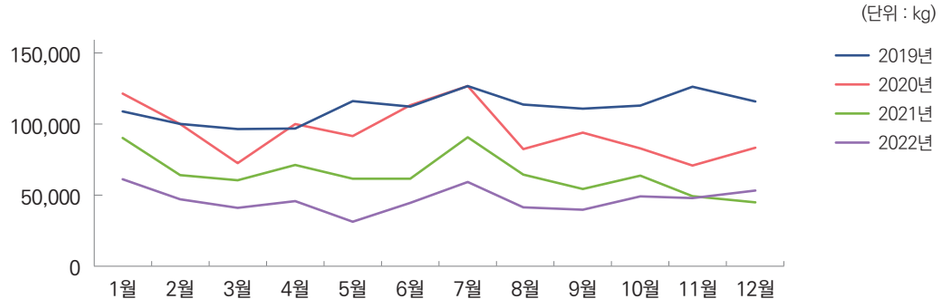


결과 및 기대효과

→ 그림자규제 해소로 연간 3억 원의 예산 절감

2차 선별 공정을 거친 협잡물의 상태는 수분 제거와 깨끗함이 눈으로 확인될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협잡물 발생량은 크게 감소하여 2019년 대비 58%, 약 770톤이 줄어들면서 연간 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연간 385억 원 절감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악취 개선으로 시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한 안양시는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 자원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나갈 계획이다.

협잡물 발생량 변화 (2019~2023)



해양발전과 055-860-3073

☆☆☆

경상남도 남해군

해수욕장 내 행위허가기준을 마련하여 **이용객 갈등 해소**

Brief Report

현황

해수욕장 내 행위 관련 처벌규정은 있지만 각종 허가 기준이 없어 지역민과 이용객들의 불편 호소

↓

개선

전국 최초로 조례 개정을 통해 해수욕장 내 행위에 관한 허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해수욕장 연간 위탁운영을 시행하여 자릿세 과다 징수 등의 불합리를 개선하는 등 이용객의 만족도 제고

남해군

규제개선 배경

→ 해수욕장 내 각종 허가기준 및 절차의 부재로 불법행위 만연

여름 피크철에 몰리던 해수욕장 이용객이 최근에는 봄·가을 야영객을 중심으로 분화되고 있다. 하지만 시대에 맞지 않는 운영환경과 법제적 요건으로 인해 많은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자릿세 요구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폐장기간 중 이용객들의 쓰레기 투기 등으로 지역주민과의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해수욕장법」상 허가받지 않은 상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허가를 받기 위한 기준과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가항력적 위법행위가 만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때문에 상행위를 위한 타법상의 인허가를 받았더라도 「해수욕장법」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상행위에 해당하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편 해수욕장에도 반려견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뚜렷한 제재 근거 없이 관리상의 문제를 이유로 반려견의 해수욕장 이용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행정지도가 반복되어 왔다. 경상남도 남해군은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설리해수욕장



상주은모래비치



규제개선 과정

→ 조례 개정으로 허가대상 행위 규정 신설 및 연중 위탁관리 시행

경상남도 남해군은 내부 검토를 통해 2022년 11월 「남해군 해수욕장 조례」를 개정하여 해수욕장 내 행위에 관한 허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해수욕장 위탁운영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개정된 조례에는 상행위, 시설물 설치행위 등 허가대상 행위 6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해수욕장 위탁운영기간을 '개장기간'에서 '연중'으로 변경하였다. 특히 연중 위탁관리를 통해 청소비 명목의 자릿세 요구를 원천 차단하고 위탁방식을 변경하여 경상적 지출예산이 방만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절감한 예산은 시설개선에 투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해수욕장 내 야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합리적 요금체계를 수립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23년 6월에는 해수욕장협의회를 통해 해수욕장 내 반려견 출입구역을 설정하여 5개의 해수욕장에서 전면시행하는 것으로 의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에 대한 선제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해수욕장 관리운영 위탁현황

해수욕장명	상주은모래	송정솔바람	설리	두곡·월포	사촌
수탁단체	상주번영회	송정번영회	설리번영회	두곡번영회 월포번영회	사촌마을회
위탁내용	• 해수욕장 시설 운영 및 관리(인력 고용 포함) • 해수욕장 시설 예약 및 사용료 징수 • 방문객 안내, 유의사항 등 홍보, 각종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상황 전파				

결과 및 기대효과

→ 합법적 상행위 및 시설사용료 현실화로 이용객 유치

남해군은 조례에 해수욕장 상행위 등의 허가 기준과 의제절차를 마련하여 합법적 상행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불가항력적인 불법 상황들을 해소하였다. 또한 해수욕장 연간 위탁을 통해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자릿세 과다징수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그 외에도 반려견 출입구역 지정은 애견인과 비애견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등 해수욕장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이용객 유치에 기여할 전망이다.

진해차량등록과 055-225-7572

☆☆☆

경상남도 창원시

Brief Report

현황

장기 미보유 자동차의 멸실인정 및 말소등록 처리 시에 인우보증제도로 인한 시민 불편 발생

↓

개선

자동차 멸실 확인 신청 구비서류에서 인우보증확인서를 첨부하지 않고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일부 개선하여 말소등록 신청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시민의 편의 도모

자동차 멸실인정 구비서류를 줄여 **주민 불편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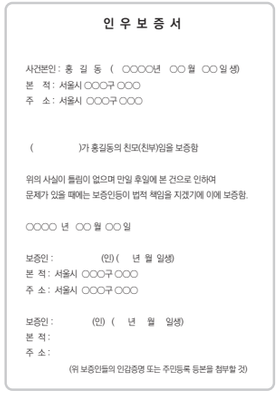
규제개선 배경

→ 복잡한 말소등록 요건 및 인우보증확인서는 과도한 규제

자동차 멸실인정 제도란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을 폐기했거나 소유자가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되고 여러 사정에 비춰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이를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경상남도에서 시달된 '장기 미보유 자동차 멸실인정 및 말소 등록처리 방안'에 의하면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우보증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말소등록신청은 멸실 사실 인정서 발급 3개월 이내에 등록원부상 압류, 저당 등을 해제한 후에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창원시는 이에 대해 사실상 미소유(멸실)차량이고 재산 가치가 없는 차량에 대한 압류, 저당 해제를 말소등록의 요건으로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인우보증확인서는 보증인이 향후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데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인우보증확인서 첨부는 과다한 민원서류 요구일 뿐아니라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인우보증이란

특정한 사실에 대하여 가까운 관계에 있는 친척이나 가족, 동료 등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인 우 보 증 서

사건본인 : 홍 길 동 (○○○○년 ○○월 ○○일생)
본 적 : 서울시 ○○○구 ○○○
주 소 : 서울시 ○○○구 ○○○

( )가 홍길동의 친모(친부)임을 보증함

위의 사실이 틀림이 없으며 만일 후일에 본 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보증인등이 법적 책임을 지겠기에 이에 보증함.

○○○○ 년 ○○ 월 ○○ 일

보증인 : (인) (년 월 일생)
본 적 : 서울시 ○○○구 ○○○
주 소 : 서울시 ○○○구 ○○○

보증인 : (인) (년 월 일생)
본 적 :
주 소 :

(위 보증인들의 인감증명 또는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할 것)

규제개선 과정

→ 인우보증확인서 제외로 멸실 확인 신청 간소화

경상남도 창원시는 시민들의 불편 호소에 귀 기울여 즉시 차량등록사업소 3개 부서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였고, 회의에서 도출된 방안을 토대로 경상남도에 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를 요청하였다. 경상남도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2023년 3월 건의사항을 반영한 '장기 미보유 자동차 멸실인정 및 말소등록 처리방안'을 시달하였다. 이는 인우보증확인서를 삭제하여 자동차 멸실 확인 신청 구비서류를 줄임으로써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동차 멸실 확인 신청 및 말소등록 처리 흐름

1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 신청	2 인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3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 발급	4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 관할관서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별지 1호 및 1-1 서식	(공부 확인 및 사실 조회, 30일 이상)	• 멸실 인정기준 충족시 • 별지 2호 서식	(압류, 저당 있어도 신청 가능하나 30일 이상)

결과 및 기대효과

→ 적극행정을 통해 불필요한 과정 개선으로 시민 불편 해소

경상남도 창원시는 인우보증확인서를 첨부하지 않고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이와 관련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이는 불필요한 과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경상남도의 제도개선 수용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문화시설개관준비과 051-888-4842

☆☆☆

부산광역시

Brief Report

현황

장기 공사 중인
전문공연장이 개관 후에는
경정청구기한 경과로
인해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 불가

↓

개선

부서 협업 및
적극적 법률 검토로
장기간 건립 중인
문화시설의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을 추진하여
총 228억 원의 세입을
확보함으로써
재정 확충 및 향후
타 기관으로의
확산·활용 기대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과세 및 면세사업 겸영 신축건물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을 통한 재정 확충**

규제개선 배경

→ 개관 이후에는 경정청구기한 경과로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 불가

부산광역시는 2개의 세계적인 전문공연장 건립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 3,117억 원의 오페라하우스는 2018년에 착공하여 2026년 준공·개관 예정이고, 총사업비 1,011억 원의 국제아트센터는 2021년 착공하여 2024·2025년에 준공·개관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규모 사업비 지출과 장기간의 공사 진행으로 인해 개관 후 매입세액 부가세 환급 청구 시에 경정청구기한인 5년을 경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즉 2025~2026년 개관한 이후에 경정 신고 시에는 5년 이전의 부가세는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여 환급이 불가한 것이다. 또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면적 계산과 겸영하는 면적 및 예정공급가액 산정이 어려워 미신청 또는 환급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부산광역시는 건립 중인 문화시설 부가세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규제개선 과정

→ 사례조사, 법률자문을 토대로 한 경정신고 후 환급 결정

2022년 9월, 부산광역시는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타 공연장의 사례를 조사하고 자문자료 작성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매입세액 공제방법 등에 대해 전문회계법인의 법률자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7년 2기분부터 2022년 1기분까지 5년에 이르는 부가세 경정신고를 통해 문화시설 건축비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을 청구하였다. 그 결과 2023년 1월까지 동래세무서로부터 국제아트센트와 오페라하우스의 경정청구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었다. 그에 따른 환급예정액은 각각 약 42억 원, 186억 원으로 총 22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시설 건축비 부가세 환급 내역

(단위:천만원)

구 분	부가세 환급 내역					비고
	계	'22년	'23년 (예정)	'24년 (예정)	'25~'26년 (예정)	
오페라하우스	18,600	2,820	411	1,841	13,528	'22~'24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예정공급가액"으로 산정
국제아트센터	4,200	630	861	559	2,150	'25~'26 개관 후 매출 발생 시 정산
계	22,800	3,450	1,272	2,400	15,678	

결과 및 기대효과

→ 적극적 재원 발굴로 228억 원의 세입 증대 효과

이번 사례는 개관 전에 매출액이 없는 상황에서 공급가액 산정이 힘들고 유사사례가 없는 어려움을 부서별 협업과 적극적인 법률 검토로 이루어 낸 결과이다. 공연장과 같이 과세사업(임대, 대관)·면세사업(기획공연, 교육 등)을 겸영하는 경우 신축건물의 환급액 계산은 과세사업 사용면적을 우선 공제하고 남은 면적은 예정공급가액 안분비율로 환급을 신청하여 향후 매출 발생 시 정산할 수 있도록 추진한 것이다. 부산광역시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서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재원을 발굴하여 세입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 성과를 바탕으로 타 기관에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자원순환과 02-2600-4063

서울특별시 강서구

Brief Report

현 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5개 업체의 장기간 독점적 지위 유지로 대행비 재정 부담 가중

↓

개 선

자치구 간 협의를 통해 용역입찰 공고 시 업체 소재지 및 영업구역 제한 삭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허가 확대 등으로 대행사업비 예산 절감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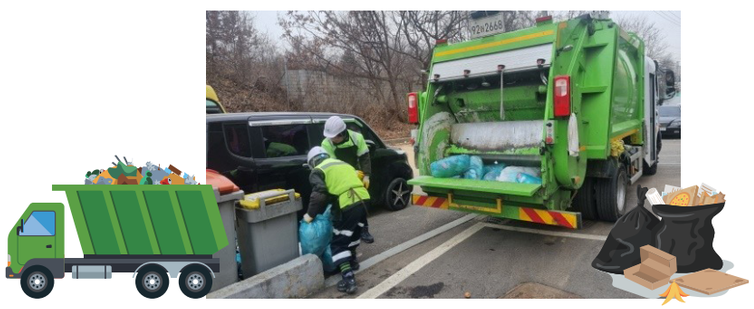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영업구역 제한 삭제로 예산 절감**

규제개선 배경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매년 크게 증가

지난 수십 년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고착화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서울특별시는 2015년, 대행업체 선정 시에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영업구역을 해당 자치구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였다. 하지만 많은 자치구들은 여전히 관할구역 소재지 업체를 선정하였고 대행업체들은 쉽게 영업권을 유지하게 되면서 청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실제로 강서구는 5개의 업체가 평균 35년 동안 강서구를 영업구역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있었다. 독과점의 문제는 업체들이 대행사업비를 해마다 크게 인상하면서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실제로 2020년~2021년 연간 15,504백만 원이던 대행사업비는 2022~2024년에는 연간 18,300백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하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로 결정하였다.



규제개선 과정

→ 시행규칙 개정으로 영업구역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시 영업구역과 관련한 법과 지침의 해석이 모호하다는 데 주목하였다. 「폐기물관리법」에는 영업구역을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규정만 있었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영업구역을 시·군·구 단위로만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영업구역을 시·군·구 단위로 제한한 셈이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을 통해 영업구역을 서울특별시 전역으로 확대하여야 했다. 강서구는 이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제180차 정기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더불어 환경부에 관련 시행규칙의 개정을 건의하였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 허가 확대가 시행될 예정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전	개정 예정
작성방법(영업구역) 3. ⑧란은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만 **시·군·구 단위**로 적습니다.	**작성방법** 3. ⑧란은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만 **시·도 단위**로 적습니다.

사업 계획서

결과 및 기대효과

→ 경쟁체제 강화로 신규업체확보·서비스강화·예산절감

지금까지는 대행업체 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사실상 없었다. 자치구 내에서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영업구역을 변경하거나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서 자치구 간 협의를 통해 대행용역 입찰공고 시 업체 소재지와 영업구역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서울시 소재 모든 대행업체에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게 되었다. 또한 신규허가가 확대됨에 따라 유찰을 방지할 수 있는 업체풀을 확보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서울시 강서구는 영업구역을 시·도 광역단위로 확대함으로써 업체 간 서비스 경쟁 유도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쟁체제 강화로 대행사업비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원지적과 063-539-5364

☆☆☆

전라북도 정읍시

통합위임장 공동 활용하여
토지 관련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

Brief Report

현황

토지소유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토지분할 시 지적측량, 토지분할허가, 토지이동정리까지 총3회의 위임장 작성으로 민원인 불편

↓

개선

3개 관련기관·부서의 협의를 통해 통합위임장 작성안을 마련하고 법률자문을 거쳐 확정함으로써 지적측량, 토지분할허가, 토지이동정리까지 하나의 위임장으로 처리

정읍시

규제개선 배경

→ 토지 분할 신청 관련, 3회에 걸친 위임장 요구로 불만 증가

토지분할은 토지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토지소유자의 직접 신청보다 피 위임자(이해관계인)가 토지소유자의 위임을 받아서 토지분할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은 실정이다. 즉 소유권이전, 매매, 건축 등으로 토지 분할시에 토지매수자, 부동산중개인, 법무사, 행정사, 토목설계, 건축사사무소 등의 피 위임자가 주로 토지이동정리 신청을 한다. 이때 전체적인 절차에서 피 위임자는 토지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총 3회에 걸쳐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먼저 측량 신청 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임장을 1회 제출하고, 그 후 토지분할허가 신청 시 도시과에 다시 위임장을 2회 제출하고 분할정리 신청 시 민원지적과에 위임장을 3회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관련기관·부서마다 서로 다른 위임장을 요구하고 있어 그에 따른 불만과 행정 불신이 증가하고 위임장 작성을 위한 시간·금전적 손해 등에 대한 불만 토로도 그치지 않고 있다.

토지분할 신청 절차에 따른 3회 위임장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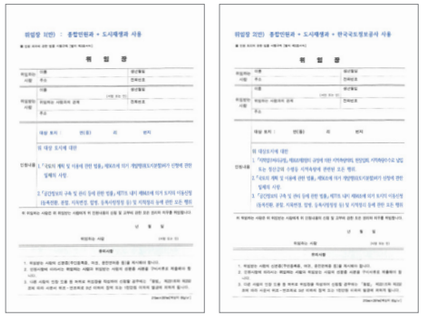
민원명	지적측량접수	→ 개발행위허가	→ 토지이동정리
처리부서	한국국토정보공사	도시재생과	종합민원과
관련규정	지적업무처리규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규제개선 과정

→ 관련기관·부서의 협의를 통해 통합위임장 하나로 원스톱 행정처리

지적측량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 토지분할허가 부서(정읍시 도시과), 토지이동정리 부서(정읍시 민원지적과) 등 3개 기관·부서는 이러한 민원인의 불편에 대하여 공감하고 협의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2022년 12월 지적측량의뢰 위임,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위임, 토지이동(분할)정리 위임을 한번에 할 수 있는 통합위임장 작성(안)을 마련하였다. 전라북도 정읍시는 이를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외협력부 법률지원팀의 법률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한 후 2023년 1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통합위임장 작성(안)



결과 및 기대효과

→ 1회 방문, 1회 접수의 원스톱 서비스로 시간·비용 절감



이전에는 위임장 오류작성 및 기관별 위임장 양식이 달라 민원인이 여러 차례 행정기관에 방문해서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다른 양식의 위임장을 3회에 걸쳐 3매를 작성·제출하는 번거로움을 하나의 통합위임장으로 한 번만 방문해서 1회 접수로 마칠 수 있도록 단축하여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전라북도 정읍시의 절차 간소화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의 시행은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편의성을 증진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허가과 041-521-2164

☆☆☆

충청남도 천안시

지목이 임야인 사실상 농지에 **산지관리법 적용으로 민원인 혼선 최소화**

Brief Report

현황

2016년 1월 「농지법」 개정 이전부터 경작 중인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한 소관 법령의 상충

↓

개선

산림청, 농림부 등 중앙부처의 판단이 서로 다름에 따라 자체적인 법률자문과 대법원 판례 검토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적용으로 내부방침을 확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 요청

규제개선 배경

→ 지목상 임야인 토지에 대한 소관 법령 상충

천안시는 2016년 1월 이전부터 경작지로 이용하고 있는 지목상 '임야'인 토지에 대하여 타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의 「농지법」을 적용하여 왔다. 하지만 충청남도와의 농지전용 협의 과정에서 사실상 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게 되었다. 천안시와 충청남도 간의 법령 적용이 서로 달라 민원인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시는 인허가업무 처리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개정 이전의 「농지법」에서는 사실상 농지는 지목에 불구하고 3년 이상 경작한 모든 경작지로 정의되어 왔다. 그런데 2016년 1월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사실상 농지 규정에 지목이 임야인 경우가 제외되면서 법 개정 이전부터 경작 중인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해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등의 소관 법령이 상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규제개선 과정

→ 중앙부처 질의와 자체조사·법률자문을 통해 산지관리법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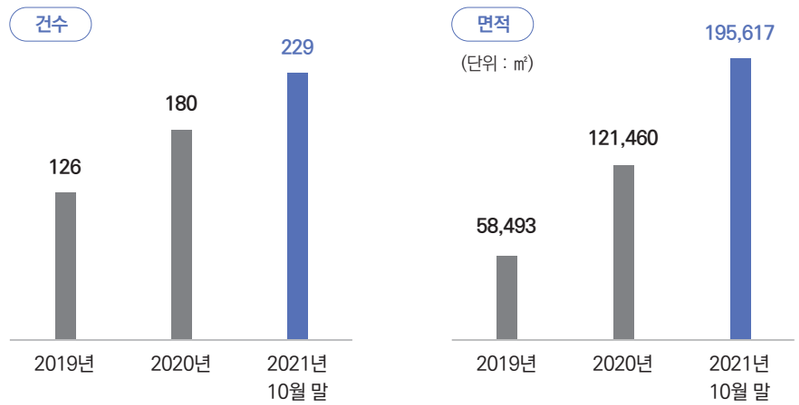
천안시는 2016년 1월 이전부터 경작지로 이용 중인 지목상 임야인 토지가 농지인지 산지인지에 대하여 여러 중앙부처에 질의를 하였다. 그 결과 산림청은 산지, 농림부는 농지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놓았고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 사이에 협의를 통해 정책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부처별 판단이 상이함에 따라 천안시는 고문변호사들의 법률자문과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하여 「산지관리법」의 적용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충청남도 시·군의 업무처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13개 시·군은 「산지관리법」을, 2개 시·군은 「농지법」을 적용한 것을 파악하여 참고하였다. 이에 따라 산림청, 농림부, 충청남도에 법령 개정을 요청하고, 소관부처의 명확한 적용지침이 시달되기 전까지 2022년 1월 허가요청분부터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를 적용하기로 내부방침을 확정하였다.

결과 및 기대효과

→ 명확한 인허가 기준 마련 및 민원인들의 전용부담금 경감

「산지관리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인허가 서류를 작성할 때 명확한 인허가 기준을 제시하여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개발에 따른 민원인들의 전용부담금도 크게 경감될 예정이다. 기존의 규정대로 사실상 농지로 인정될 경우 농지부담금은 산지전용부담금에 비해 매우 높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70,000원/㎡인 토지 100㎡을 개발할 경우 부담금은 농지가 2,100,000원이고 산지가 749,000원이므로 산지 인정 시 1,351,000원의 부담금이 감소하게 된다. 2019년부터 3년간 사실상 농지 인정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개선의 수혜가 많은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농지 인정 현황 (2019~2021)



충청북도 청주시

지적재조사 지구 내 토지분할 수반
건축 행정절차 간소화

Brief Report

현 황

지적재조사 지구 내 토지분할 수반 건축 시 분할측량, 지적재조사 위원회 심의의결 등 많은 절차로 인해 사용승인 지연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 초래

↓

개 선

토지소유자, 재조사팀, 건축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고 신청자에게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토지의 정형화로 토지 이용가치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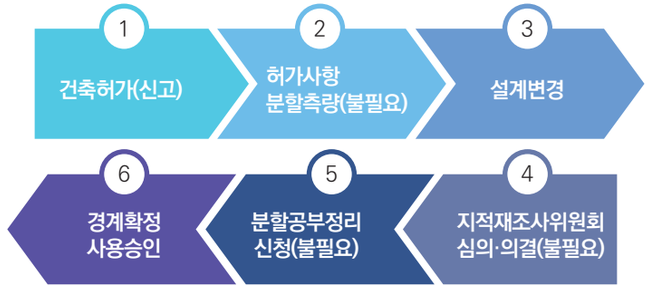
청주시 CHEONGJU CITY

규제개선 배경

→ 불필요한 절차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사용승인 지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에서 분할이 수반되는 건축을 할 경우, 먼저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지적재조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공부 정리를 마친 후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로운 지적공부를 토대로 건축 인허가를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재조사 완료 후 사용승인 시에 다시 추가로 설계변경의 절차가 필요할 뿐 아니라 지적공부 변경에 따른 분할측량성과를 사용할 수 없어 측량수수료가 낭비되고 있다. 충청북도 청주시는 건축인허가 변경, 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의 절차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사용승인이 지연되는 등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규제애로 개선을 위한 절차도



규제개선 과정

→ 분할측량, 위원회심의, 분할공부정리 신청 등의 절차 간소화

청주시는 2021년 10월, 흥덕구의 소로1지구에 발생한 실제사례를 바탕으로 토지소유자와 재조사팀, 건축팀이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추가절차로 인한 시간 및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점유하는 현실경계를 토대로 지적경계를 조정함으로써 분할측량을 생략하고 감소된 면적만큼 조정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건축 허가(신고)된 토지에 대하여 경계협의·조정 시 합의경계로 설정하여 허가(신고)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토지소유자가 건축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진행했던 인허가 변경 또한 담당부서가 유기적인 협의로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더불어 재조사사업으로 변경될 지적 도면을 건축팀과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하여 신속하게 건축인허가 변경을 처리하였다. 청주시는 이처럼 분할측량, 위원회 심의, 분할공부정리 신청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간소화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완료함에 따라 신청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었다.



공간정보 행정포털시스템을 통한 부서간 담당자 공유 현황

결과 및 기대효과

→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고 행정력 낭비도 해소

분할측량 절차를 생략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재산권 행사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 또한 현실 경계를 기초로 한 합의경계로 결정함으로써 제외되는 면적이나 도로후퇴 면적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으며, 불규칙한 경계를 지적재조사로 정형화함에 따라 토지의 이용가치도 상승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청주시는 더불어 인허가변경, 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생략하여 행정력 낭비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실 경계를 기초로 합의하여 설정된 경계



종전도 지적재조사

보도자료로
만나는
규제혁신 성과

PART V

2023년에도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는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기업과 주민의 불편을 공감하고 이를 능동적으로 개선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한
소통과 협력의 생생한 시간들을 만나봅니다.





창업 요건·인허가 기준 해석'내고장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자료 505건 현행화로
지방규제혁신 모범사례집 구축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DB) 구축 4단계를 추진하여 32개 법령 유권해석 171건을 추가 발굴하고 주요 인허가 관련 유권해석 사례 334건을 현행화하여 내고장알리미 누리집(www.laiis.go.kr)에 공개했다.

행안부는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그림자·행태규제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DB) 구축은 지방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2016년부터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앙부처 인허가 법령 및 유권해석 사례를 현행화하여 동일한 법령에 대해 지자체 간 해석·적용이 달라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활용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그림자·행태규제를 개선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이번에 구축된 4단계에서는 505건의 법령 유권해석 사례가 추가 발굴 및 현행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총 53개 법령 3,273건 유권해석 사례가 등록됐다. 특히 인허가 관련 유권해석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2020년과 2021년 2년 동안 질의가 빈번했던 「공중위생관리법」, 「자동차관리법」 등 32개 법령 171건 유권해석 사례를 추가로 발굴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유권해석 사례를 현행화하고 전산자료(DB)를 구축하여 지자체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국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구분	법령명(약칭)	1~3단계 (기존)	4단계 (추가·현행화)	계 ('23.1월기준)
1단계	산지관리법, 옥외광고물법, 학원법, 의료기기법	816	94	910
2단계	토지보상법, 도시정비법, 건축법, 국토계획법 공동주택관리법, 산업입지법, 공원녹지법, 개발제한구역법, 산단절차간소화법, 농지법, 산업집적법	1,373	152	1,525
3단계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공유재산법, 관광진흥법, 사회복지사업법	579	88	667
4단계	공중위생관리법, 장애인복지법, 자동차관리법,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건축물관리법, 건설폐기물법 등	-	171	171
합계		**2,768**	**505**	**3,273**

조선업종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해양산업 규제 완화 추진

전남 대불산단에서 규제혁신 민·관 합동
현장토론회 개최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는 1월 12일(목) 전남 영암에서 규제애로 기업,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업과 주민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규제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제시와 함께 관계부처가 즉석에서 답변하여 합리적인 규제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조선업체 근로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선업종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제 개선'과 전남의 신소재 어선제조 등 '해양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규제애로 기업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 자리에서 유인숙 (주)유일 대표는 "조선업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가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으로 애로사항이 많다."고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한창섭 차관은 "오늘 논의를 통해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역기업과 주민의 고충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자치단체가 직접 발굴한 규제를 개선하면 현장의 규제혁신 체감도가 더욱 클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기업 활동과 주민 생활 애로사항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논의된 과제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토론회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전남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주제	논의 과제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제 개선	❶ 제조업 인력난 해결을 위한 비전문취업인력(E-9) 고용 비율 확대
	❷ 비전문취업인력(E-9)의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요건 완화
	❸ 일반기능인력(E-7-3) 고용규제 완화
해양산업 규제 완화	❶ 어선 재질에 신소재(HDPE)를 추가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❷ 해사시계(視界) 규제완화로 섬주민 정주여건 개선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 선정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4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제출 사례는 총 454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2건(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행정절차 합리화 2건(인천광역시 중구, 충청북도 청주시) ▲주민편익 제고 1건(경상북도 청도군) ▲사회적 가치 증진 1건(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요 친화적 법령해석 1건(충청남도 천안시) 등 5개 분야에 걸쳐 총 7건이다. 이는 신규 사례 가운데 추진과정 노력도, 개선효과, 타 지자체 확산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되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행정을 통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하면 규제 법령 개선에 버금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규제혁신 선도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공유·확산하여 주민이 실감할 수 있는 생활의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지역경제 활성화	✔ **광주광역시** – 산업단지 입주기업 초기 공공폐수처리비 감면으로 경영환경 개선 ✔ **서울특별시** – 유찰상가 합리적 예정가격 적용으로 소상공인 사업 참여 편의 증진
행정절차 합리화	✔ **인천광역시 중구** – 전국 최초! 토지보상 사업인정 가이드라인 설정으로 재개발 정비사업 신속 추진 ✔ **충청북도 청주**시 – 지적재조사 지구 내 토지분할 수반 건축 행정절차 간소화
주민편익 제고	✔ **경상북도 청도군** – 소하천 구역 인근 토지 활용 민원에 대해 규제가 덜한 법령 적용
사회적 가치 증진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기준을 신설하여 복지수혜 형평 제고
수요 친화적 법령해석	✔ **충청남도 천안시** – 지목이 임야인 사실상 농지에 산지관리법 적용으로 민원인 혼선 최소화

국민이 제안하고 풀어가는

생업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개최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등 국민 살림살이 관련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전'이 개최된다.

공모전은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소상공인 생업여건 개선,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일자리 창출, 취업·창업 기회 확대 등 국민 살림살이 관련 규제를 중점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공모전은 국민의 주도적 참여 확대, 제안처리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 제안과제 사후관리 강화에 방점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궁극적 목표로 설계되었다. 생생한 규제현안을 포착하기 위해 종전 규제혁신 마중무리와 지역 전문가에 더해 시·도별로 구성된 2천여 명의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 규제개선 과제 발굴원으로 참여한다. 규제혁신 마중무리는 규제혁신 과제 발굴, 검토 등 과정에서 민간 의견 주도층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329명으로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2월 15일(수)부터 3월 31일(금)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에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시도 규제실무자 일괄평가, 전문가 검토, 소관부처 협의 및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17명 등 총 20명을 선정하여 7월에 시상할 계획이다. 심사기준은 창의성 30%, 실현 가능성 30%, 효과성 40%이다.

행정안전부는 시도평가, 부처협의 등 주요 제안처리 과정의 결과를 택배 추적(tracking) 시스템처럼 제안자와 공유하고 부처협의 전 제안내용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등 제안처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의 소중한 제안이 최대한 신속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수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논리 보강을 통한 재협의 등을 추진하고 수용과제 이행 여부도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전 포스터

New's 2023. 2. 27.(월)

공영차고지에 전기·수소 충전시설 만들고, 개인 오수처리시설 설치 허용

2022년 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우수사례 선정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조례 등 자치법규 상 규제를 개선한 모범사례 5건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국민이 규제개선을 요청하면 규제부서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규제개선 업무를 전환한 제도로 2019년부터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전에는 국민이 직접 규제 해소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했지만 규제입증책임제가 도입되면서 국민의 개선요청에 대해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는 폐지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부터 별도의 국민 요청이 없더라도 자치단체가 등록규제에 대해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도록 규제입증책임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그 결과 2022년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각 지자체 규제개혁위원회는 총 6,163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270건을 개선 의결·권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년과 비교할 경우 위원회 안건 심의 건수는 2021년 3,600건에서 2022년 6,163건으로 71% 증가하였으며 개선 의결 건수는 2021년 168건에서 2022년 270건으로 62%가 증가하였다.

행정안전부는 270건 개선 의결 사례 중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타 지자체의 도입 등을 권고하고 규제개선을 통한 주민 생활편의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창업·영업 분야 2건 ▲주거·교통 분야 2건 ▲주민편익 행정 분야 1건 등 3개 분야 5건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롭게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만큼이나 기존의 규제가 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자치단체가 자치법규 상 규제 존치 필요성을 수시로 검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우수사례

창업·영업 분야
- **경기도 용인시** – 공영차고지 허가 대상에 전기·수소 충전시설을 연료공급시설로 갖춘 경우도 포함
- **경상남도 김해시** – 전기자동차 충전소와 농기계 수리점 입지가 가능한 용도지역 확대

주거·교통 분야
- **제주특별자치도** – 공공하수도 미설치 지역에 개인오수처리시설 시 건축물 허가
- **경기도 안양시** –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기준 완화

주민편익 행정 분야
- **충청북도 영동군** –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대여한 경우 출고가 되면 사용자가 모든 책임과 변상의무를 지도록 규정한 것을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New's 2023. 4. 7.(금)

한국형(K)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도로 운행허가 규제 개선

행안부-지자체 합동
제4차 지방규제혁신회의 개최

4월 7일(금), 경남도청에서는 한창섭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규제애로 기업,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4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경남지역 수출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자체, 전문가와 함께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진행된 주요일정은 2023년 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 규제개선 우수사례 공유,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지역현장 규제개선 토의 및 현장방문 등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규제현장을 직접 찾아가 기업의 규제애로를 주의 깊게 듣는 것이 규제혁신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면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힘을 합쳐 지역기업이 겪는 규제애로를 적극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8월 처음 시작된 지방규제혁신회의는 행안부와 자치단체가 정례적으로 소통·협력하여 기업활동과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규제개선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회의이다. 지난 1~3차 회의를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 등 다수 지자체가 애로를 겪는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62건을 발굴하여 전국 지자체에 확산되도록 지원한 바 있다.

제4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 주요 내용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방향 발표
- 올해 2월부터 두 달여간 17개 시·도 규제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발굴한 지역 중점과제 개선에 역량 집중
- 공장 입지기준 확인 신청시 수수료 납부규정 개정(경기 양주시), 산업단지 내 자동화된 곤충산업 입지 허용(충북), 축산사업장 악취 측정 위치 및 방법 개선(제주) 등

지자체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유
- **세종시** – 비행장으로 인한 고도 제한으로 건축물 신·증축이 제한되는 비행안전구역범위를 줄이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 해결
- **상주시** – 화서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산업단지 내 완충녹지로 인해 제품 운송에 애로를 겪자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완충녹지 일부를 해제함으로써 대형화물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차도 개설
- **청주시** – 적극행정 확산사례로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분할측량 절차 간소화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지역현장 규제개선 토의
- **에스케이(SK)오션플랜트** – 산업단지 내 단독 입주해 있어 다수의 기업이 입주한 경우에만 전기 공급시설을 한전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기업규제완화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어려움 토로
-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 – 해당 기업에서 전기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한전에서 유지·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한전과 협의, 전문가의 관련 법 개정 필요 제언

New's

2023. 5. 18.(목)

지역 현장의 규제애로 해소 위해 민관 합동 플랫폼 가동

지방규제해결 전담 자문기구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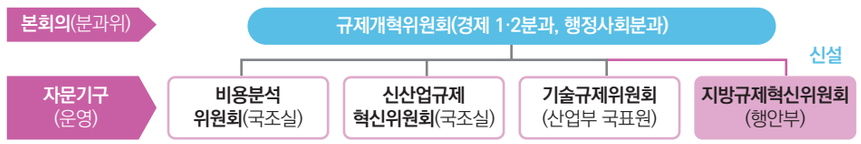
지역 현장의 규제애로를 전담하는 자문기구가 최초로 신설되어 지자체가 오랫동안 건의해도 해결되지 않던 지역 현장의 각종 규제가 속도감 있게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공식적인 지방규제 조정 권한을 확보하고 규제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지방규제 전담기구로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5월 18일(목) 첫 회의를 개최했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지방규제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및 전문적인 연구와 조사를 지원한다.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부처에 권고할 수 있으며, 부처가 수용하지 않는 과제나 긴급한 규제개선안건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해결하고 자치법규 정비방안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규제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장 · 차관 지역토론회 개최, 차관 주재 지방규제혁신회의 등을 통해 지방규제혁신을 선도해왔다. 그럼에도 중앙부처의 규제 때문에 지역의 개발이 무산되었거나 여러 부처가 연계되어 있어 해소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는 지속되어 왔다. 이에 규제 관련 전담 기구인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앙부처의 규제가 지역에 실정에 맞지 않거나 복잡하여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운 사례를 해소하고 사전에 발굴하여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집중 조정하여 개선하며 여러 부처가 연관된 중앙부처 덩어리 규제를 조정하고 그림자 · 행태규제도 정비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17개 시도 지역현장 간담회에서 발굴된 신산업·산업단지·탄소중립 등 분야별로 선정된 규제과제를 집중 조정한다. 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수시로 개최한다. 또한 반기별로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선 추진현황과 개선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의 규제발굴도 병행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지방규제혁신성과를 보고하고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10명으로 총 15인으로 구성되었다. 정부위원에는 국무조정실·산업부·환경부·국토부 소속의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민간위원에는 지방규제에 대한 학계·연구계 등 전문가와 시·도 지방규제혁신 추진단(TF) 추천위원 등이 참여했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신설



New's

2023. 5. 23.(화)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설 실마리 찾고, 경로당 경비처리 더 쉽게 개선

2023년 1분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 선정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2023년 1분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아울러 우수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자치단체에 공유하고 도입을 독려하였다.

2023년 1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성과사례는 총 391건으로 신규 374, 벤치마킹 17건의 사례가 제출되었다. 신규사례 중 추진과정 노력도, 개선효과, 타 지자체 확산가능성을 감안하여 4개 분야에서 총 8건을 선정하였다. 분야별 세부적인 선정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생업) 경영여건 개선 2건(경기도 고양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 편익 증진 3건(경상북도 안동시, 광주광역시 서구, 경상남도) ▲행정 절차 간소화 2건(전라북도 정읍시, 경상남도 창원시) ▲지방재정 확충 1건(부산광역시) 등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 공무원이 행정 일선에서 주민이 겪는 생업 애로나 생활 불편을 공감하고 능동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모여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도 지자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공유·확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3년 1분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기업(생업) 경영여건 개선	**경기도 고양시** – 수요친화적 법령해석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설 허용 **제주특별자치도** – 무선으로 어구위치를 추적하는 전자해양부이 개발로 조업 애로 해소
주민 편익 증진	**경상북도 안동시** – 경로당 맞춤형 간편 회계서식 보급으로 지역공동체 기반 강화 **광주광역시 서구** – 휠체어 탑승자동차 지원대상 확대로 장애인 이동권 신장 **경상남도** – 무역항 선박속력 제한 완화로 선박사고 예방
행정 절차 간소화	**전라북도 정읍시** – 통합위임장 공동 활용하여 토지 관련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 **경상남도 창원시** – 자동차 멸실인정 구비서류를 줄여 주민 불편 해소
지방재정 확충	**부산광역시** – 과세 및 면세 사업 겸영 신축 건물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을 통한 재정 확충

New's

2023. 8. 16.(수)

전기차 신공장 착공 앞당기고, 해수욕장 허가기준 마련하여 자릿세 등 불법 관행 없앴다

2023년 2분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 선정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2023년 2분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하였다.

2023년 2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성과사례로는 신규 553건, 벤치마킹 34건 등 총 587건이 제출되었다. 그중에서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2건(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소상공인(기업) 경영환경 개선 2건(경상남도 남해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편익 증진 2건(강원도, 서울특별시 성동구) 등 3개 유형 총 6건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분기에는 다른 지자체의 우수한 적극행정 사례를 자체 실정에 맞게 도입·운용한 사례가 역대 최대인 28건으로 늘었다."라며 "자치단체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가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우수한 적극행정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3년 2분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지역경제 활성화

- **울산광역시** – 3년 정도 소요되는 전기차공장 건설 인허가 사항을 1년으로 앞당겨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 기반 마련
- **대구광역시** – 규제 강화로 사업비가 증가하여 철회 위기를 맞은 지붕형 태양광 민자 프로젝트 투자(1.5GW, 3조원 규모)를 적극행정을 통해 유치
- **대구광역시** – 국토부로부터 설하중의 영향이 지붕의 최소 활하중보다 작은 경우 구조설계 시 설하중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국토부 유권해석을 확보하여 민간투자 유치

주민 편익 증진

- **경상남도 남해군** – 조례 개정을 통해 이용객이 불편 없이 해수욕장을 이용하고 지역주민도 합법적으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갈등 해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 공공인프라(구청사, 산하기관 공공시설 등)를 전국의 실증수요 기업에 개방하여 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 기회 제공

행정 절차 간소화

- **강원특별자치도** –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를 카드 충전방식에서 신용 · 직불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이용자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발급기관의 행정 부담과 환경 오염 최소화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실질적 주거안전 개선을 위해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개별적 실체적 전수조사를 거쳐 취약가구에 침수방지시설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New's

2023. 8. 23.(수)

지역 특성 고려한 규제혁신으로 기업활동 지원하고 국민 편의 높였다

중앙(행안부,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간 협력으로

중앙부처 규제 44건 개선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44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새로 개선하였다.

2023년 상반기에 지역현장에서 발굴·개선한 중앙부처 규제는 기업활동지원(10건), 국민체감(11건), 신산업(6건), 지역개발(6건), 탄소중립/바이오(4건), 산업단지(2건), 일자리창출(2건), 조선/해양/항만(1건), 환경/입지(1건), 기타(1건) 등 총 44건이다. 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매년 중앙부처 규제개선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593건의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중앙규제 개선으로 지방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라며, "지역민, 지역기업이 겪는 규제애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기업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부처 규제개선 주요 사례

지역경제 활성화

-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기준 완화로 건설업 인력난 해소**
  - 국내건설업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층 수월
- **측정대행업자 계약사실 통보 제출 의무 완화**
  - 측정대행업자가 측정계약 사실을 환경측정분석시스템(환경부 소관: 에코랩)을 통해 지자체 등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통보하면 계약 관련 자료는 제출 불필요

지역 개발

- **환경영향평가 방류수 수질기준 설정으로 환경오염 및 생태환경 훼손 최소화**
  - 수원 보호구역 상류 20km 이내 지역에도 하수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시행하는 경우 사업특성을 유연하게 고려하여 검토

국민 체감

- **아동급식 전자카드 충전한도액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 증대**
  - 아동급식 전자카드의 충전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아동급식 전자카드를 매달 2~3번씩 충전하는 불편 해소

탄소중립/바이오

- **과수원 등 액비살포에 따른 로터리 작업 의무제외로 농가부담 완화**
  - 과수원이나 시설원예 농가 등에서 액체비료 살포 시 흙을 가는 작업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의무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여 경비 절감

국민이 직접 제안한 기업·생업 규제, 관계 부처와 함께 해결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전 수상작 20건 선정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전' 수상작 20건을 발표하고 관계 부처와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공모전은 2월부터 3월까지 진행되었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하는 생업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제안 접수·처리 과정에서 생업현장 속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발굴된 과제에 대해 광역지자체와 합동으로 실무심사를 진행하여 부처협의 과제를 선별하고 핵심제안을 발굴하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부처 수용률을 높였다. 1,173건에 이르는 접수제안 가운데 111건에 대해 부처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수용 32건, 중장기검토 12건, 불수용 62건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제안 처리과정에 대한 제안자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제안처리 절차별 중간 결과를 제안자에게 안내하여 투명성과 공정성도 높였다. 주요 제안처리 경과(1차 실무검토 결과, 부처협의 결과)를 제안자에게 곧바로 안내하였고, 10일간 온라인 공개검증(8.22.~8.31.)과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수상작 20건(최우수 1, 우수 2, 장려 17)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함께 각각 100만 원, 50만 원, 10만 원 상당의 부상품도 수여될 예정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기업 · 생업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규제 개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개선 합의 과제에 대해서는 후속 입법조치 등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전 수상작

최우수

- 공장승인 및 등록취소 신고조항 신설

우 수

- 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 징구 폐지
- 19세 미만 청소년 고용금지 규제 완화

장 려

- 농지에 스마트팜 바로 허용으로 농업 스마트화
- 주요 농산물의 체계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주산지 지자체에 관련 업무 위임
- 정부납부기술료 산정방식 이원화
- 기계설비 유지관리사 세부적인 분류 체계 마련
- 매장문화제 발굴비용 국가 부담 방안 마련
- 집합건물 시행사가 행사하는 위탁관리회사 선정권한 공공 이양
- 관광식당업 시설자금 융자 신청자격 완화
- 자동차전문정비업 불필요 시설기준 개선
- 자동차관리사업 영업정지 처분 완화
- 산업기사 응시자격 공정한 기회 부여
- 이원화 관리되는 도서 바코드라벨 통합
- 산업단지 내 소각장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반입처리 건의
-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기준 완화 및 집단급식소 시설 기준 명확화
- 청소년이용시설 체육시설의 종류 축소
- 소규모 공사·용역·납품 등 실적증명서의 편리한 발급
- 일반택시운송사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변경 및 완화

지방 곳곳에 숨어있는 그림자 킬러규제 확 걷어낸다

제5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 개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음에도 현장의 관행, 규정, 지침 등에 숨어서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고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그림자 킬러규제'가 본격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9월 20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 민간전문가, 기업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시작된 지방규제혁신회의는 정례적으로 지자체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전파하며 지역 현안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특히 지난 4차 회의에서 논의한 '수출용 방산물자 육상운송 제한 규제'는 관계부처 합동회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심의 등 행안부의 적극 노력으로 운행허가 최장기간 연장(3→6개월), 축중량 10톤 이상 운행제한 관행 개선, 관련 가이드라인 신설 등을 통해 방산기업의 규제애로를 해소하였다.

한편 총리실에서는 「킬러규제 혁신 TF」를 구성하여 15개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그림자 규제 전담반'으로서 매주 17개 시도와 함께 그림자 킬러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있다. 향후 행안부는 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발굴을 지원하고 개선사례 중 효과가 검증된 모범사례를 선정하여 전국 지자체에 확산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중앙부처 규제가 해소되어도 실제 현장을 제약하는 그림자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면 기업은 규제혁신을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그림자 킬러규제부터 신속하게 해소하여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지역의 역동성과 활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5차 지방규제혁신회의 주요내용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공유
- **행안부** – 지방규제혁신위원회, 현장협의회 등을 통해 핵심규제 해결, 4분기에 현장토론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개최
- **지자체** – 규제 애로를 겪는 기업을 밀착 지원한 사례 발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공유
- 생산된 곤충이 외부로 판매되지 않고 원자재로써 제조공정에 모두 사용되는 경우 관련 부대시설로 보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 사례
- 이차전지 제조기업이 위험물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위험물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특례 마련

그림자 규제(킬러규제) 관리방향 토의
-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합리한 인허가 지연 규제, 과도한 행정지도 및 단속 기준, 법정 수수료 및 기부채납 부담, 사업 진입·확장 애로를 중점적으로 해소 계획

원주시에서 행안부-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 개최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를 가로막고 있던 규제 해소 방안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11월 3일(금),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서 '강원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강원지역의 기업과 주민들이 오랫동안 제기해 온 킬러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이 살기 좋고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지방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는 고기동 차관 주재로 규제애로 기업,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킬러규제로는 폐광산 경석 신사업 활용방안과 풍력발전산업에 대한 주민투자 금액 확대 등이 논의된다. 강원특별자치도가 테크노밸리 등을 통해 지원하는 의료기기 전문 지역기업 대표들이 지역에서의 창업과 경영 애로사항을 발표하는 시간도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토론회 후에도 지자체와 기업이 제안한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규제혁신을 통해 새로운 투자 기회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행안부는 지자체·관계부처와 함께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신하여 주민이 살기 좋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강원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 주요 안건

석탄 경석의 산업원료화 활용방안 마련	**안건** – 수십 년간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을 초래해 온 폐광산의 경석을 신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토대 마련 **환경부** – 시험 및 연구 목적의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승인·신고 면제 등 경석의 순환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적극 검토
풍력발전사업 주민참여 개인투자 한도액 상향	**안건** – 주민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투자 금액 확대 **금융위원회** – 국가·공기업으로부터 지원되는 대규모 사업 중 주민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리스크를 감안하여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해양심층수염 산업 확대를 위한 고시 개정	**안건** – 해양심층수염을 정제소금과 구분함으로써 학교나 병원 식당에서 해양심층수염의 소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 해양심층수염이 정제소금이 아닌 기타소금으로 분류되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계획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17개 우수지자체 발표

덩어리·그림자·행태규제 등을 개선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결, 지역경제 활력 제고, 기업애로 해소, 행정절차 간소화 등 분야별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11월 17일(금),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지역현장에서 규제혁신을 추진 중인 우수지자체를 선정한다. 올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자체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43개 모든 지자체가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가한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덩어리 규제, 그림자 규제, 행태 규제 분야 등 규제혁신 사례 총 88건을 발굴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업애로 해소 43건, 기업활동 지원 2건, 사회적 가치증진 10건, 주민생활 불편해결 18건, 지역경제 활력 제고 11건, 절차 간소화 4건 등이다. 또한 발굴한 규제혁신 사례를 대상으로 행안부와 시·도의 교차심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 자리에서는 전문가 등 사전 심사 결과 상위 10건에 포함된 지자체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최종 발표심사가 진행되며 대상(1개), 최우수상(2개), 우수상(7개)이 결정된다. 대상은 국무총리 표창, 나머지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이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발표된 우수사례 10건과 장려상으로 선정된 7건의 규제혁신 사례를 전국에 확산·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영상 제작 및 교육 지원, 현장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규제혁신은 지역현장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민생의 목소리, 지역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며 기업이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발표사례 (10건)	지자체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안양시,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시 도봉구,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주시**
	사례분야	기업애로 해소 7건, 지역경제 활력제고 1건, 주민생활 불편해결 1건, 행정절차 간소화 1건
장려상사례 (7건)	지자체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 전라남도 광양시, 충청북도**
	사례분야	기업애로 해소 5건, 지역경제 활력제고 2건

혁신도시 입주기업 기숙사 설립 승인하고, 토지은행 활용해 16년 만에 산업단지 조성 추진

2023년 3기 그림자(행태) 규제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 선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2023년 3분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2023년 3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성과사례는 총 743건이 제출되었으며 그중 신규사례가 705건, 벤치마킹사례가 38건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2건(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소상공인(기업) 경영환경 개선 2건(경상남도 합천군,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편익 증진 2건(경상북도 구미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행정절차 간소화 및 효율화 2건(경기도 안양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 4개 유형 총 8건이다. 추진과정 노력도, 개선효과, 타 지자체 확산가능성을 감안하여 선정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지자체들의 사례를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고 향후 경진대회 등을 통해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전 분기에 이어 이번 분기에도 다른 지자체의 우수한 적극행정 사례를 자체 실정에 맞게 도입 · 운용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년 3기 그림자(행태) 규제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지역경제 활성화
- **대구광역시** – 유연한 법령 해석으로 혁신도시 입주기업 기숙사 설립 승인
-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공공토지 비축사업'을 적용하여 사업비 절감 및 생산 및 고용 유발

소상공인(기업) 경영환경 개선
- **경상남도 합천군** – 농업생산기반시설물 통합민원창구 운영으로 농업인 불편 해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 일반공업지역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중·소기업 경영 정상화 지원

주민 편익 증진
- **경상북도 구미시** – 옥상 비가림시설 인허가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불법 난립하던 시설물을 정식건축물로 인정
-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군용철로변을 철길정원으로 탈바꿈하여 주민에게 힐링공간 제공

행정 절차 간소화 및 효율화
- **경기도 안양시** – 음식물류폐기물 2차 선별공정 자체 개발로 국민의 환경권 보호
- **서울특별시 강서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영업구역 제한 삭제로 예산 절감 및 건전한 경쟁환경 조성

소규모 산단도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국민체감 증진, 기업활동 지원과 관련한
규제 58건 개선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2023년 3분기에 총 58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일선 현장 간담회를 비롯해 지난 4월 출범하여 매월 운영하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활용해 규제개선 성과를 도출하였다.

이번 성과는 지역기업 규제개선요청에 대해 지자체·민간과 함께 규제혁신을 추진한 결과라는 데 의미가 있다. 고기동 차관은 "앞으로도 중앙규제 개선을 통해 지방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기업과 지자체, 국민과 공무원의 가교가 되어 현장 중심 규제혁신을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년 3분기 주요 중앙규제 해결 주요 사례

기업활동 지원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규모 요건 완화(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단지 면적 5만㎡ 이상 또는 입주기업체 수가 4개 이상인 경우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하여 소규모 산단도 관리사무소 무상임대, 기반시설 보수·개량 지원 혜택 제공
- **중수도시설 운영 관리주체 변경 및 설치기준 완화(환경부)**
  – 「물재이용법」 개정을 추진하여 개발사업 중수도 운영자를 개발사업 시행자와 관할 지자체 등이 협의하여 결정토록 함으로써 중수도시설 설치의 자율성 확대

국민체감 증진
- **무인민원발급기 본인 외 발급 허용(법무부)**
  – 민원인 불편 해소와 무인민원발급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본인 외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운용 등에 관하여 법원 등과 필요한 협의절차를 거쳐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추진
- **PC카페(PC방) 청소년 유해업소 제외(여성가족부)**
  – PC방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음란물 ·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PC방(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만을 제공하는 업소 제외)의 유해성이 감소됨에 따라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도록 「청소년 보호법」 개정 추진

New's

2023. 12. 20.(수)

지방규제혁신 우수 33개 지자체와 그림자 규제 해결전략 모색

그림자 규제 해결, 지자체 지원방안 논의를 위한
지방규제혁신 기획세미나 개최

행정안전부는 12월 21일(목) 서울 상장회사회관에서 더좋은규제연구소와 합동으로 지방규제혁신 추진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기획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행안부,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전문가 그리고 2023년 지방규제혁신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33개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여 그림자 규제 등 지방규제의 해결 전략, 지자체 역할 및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방규제혁신 추진방향, 지자체 규제혁신 역량강화 지원방안 등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축사 및 환영사를 통해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지방규제혁신의 성공을 위해 규제의 최종 집행자인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협력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이영범 더좋은규제연구소장은 규제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함을 강조한다.

한편 1부 세미나에 이어 2부에서는 2023년 한 해 동안 지자체별 중점규제 발굴·개선, 행안부-지자체 협업 노력도, 지방규제혁신 제도 운영·개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33개 우수 지자체를 시상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내년에는 지역기업과 주민이 규제혁신의 혜택을 보다 확실하게 누릴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속도감 있게 그림자 규제를 해소하고 자치법규 규제를 지역현장 상황에 맞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세미나 주요 내용

발표

-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실장**
  - 법률처럼 자치법규도 규제를 신설·강화할 경우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사전에 방지해야 하며, 자치법규 등록규제 실태조사와 정비를 위해 행안부-지자체-지방연구원 간 협업체계 구축방안 제안
- **이기영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장**
  -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와 주거·복지·교육·안전 등 민생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며 4만여 건에 달하는 자치법규 규제에 대해서도 분기별 행안부-지자체 합동 실태조사와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한 감축 계획 수립

토론

- **좌장 :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지방규제혁신위원)**
  - 법령에 대한 적극적 유권해석, 과도한 행정지도 단속 등 즉시 실행 가능한 그림자 규제 개선전략과 지자체장의 역할·책임 강화, 공무원의 규제혁신 전문성 제고, 인센티브 확대 등 지자체의 규제혁신 성과제고 방안 논의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처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국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T. 044-205-3933 F. 044-204-8974

펴낸이 지역경제지원국장 조성환
지방규제혁신과장 이기영
서기관 류성수
사무관 강말순, 정병진, 곽성준, 김길수, 강규남, 허은정, 장형석, 유해리
주무관 송인섭, 윤희문, 류소연

감 수 레드인그린 김병윤

편집디자인 제일기획
T. 02-2269-8900

인쇄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인쇄사업부

이 책의 저작권은 행정안전부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행정안전부의 허락 없이는 무단으로 싣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